

End racism

for equality, justice and dignity



World Conference Against Racism,
Racial Discrimination, Xenophobia, and Related Intolerance
한국 NGO 참가단 보고서

Ma1.20

United to Combat Racism

세계 인종차별 철폐대회 한국 NGO 참가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이주·여성인권연대, 인권운동사랑방,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증
이와 관련된 불관용
철폐!

WCAR

여는말	더반으로 가기위해 ... 더반은 ... 더반이후는.	1
WCAR 총명	더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3
주제별 보고 - 청년포럼	혼란 속 "발언의 자유" 그리고 희망	11
주제별 보고 - 이주노동자	이주노동자에게 인종차별은 무엇인가	13
주제별 보고 - 난민	난민관련 NGO선언과 행동계획 초文	22
주제별 보고 - 여성	Intersectionality ; 성과 인종차별	25
주제별 보고 - 카스트제도	2억 6천만명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다	29
주제별 보고 - 노동조합	노동조합, 인종차별과 어떻게 싸울 것인가	31
WCAR 참관기	더반이 나에게 준 것	44
기사, 기고글 모음	인권하루소식, 한겨레21, 시사저널, 정치신문 노동자의 힘, 사회당 기관지	46
주요 발언문 및 연설문	한국, 북한, 일본, 독일, 교황청, 나미비아,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 이스라엘 / UN인권고등판무관 개회사, 남아프리카공화국 개회사, 인도 국가인권기구, 국제노동기구(ILO), 원폭피해자 증언	61
인종철폐 협약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94
WCAR 엿보기	한국 난민 보고서, 이주노동자 사안 성명서, 일본에 대한 과거청산 촉구 등 한국 NGO참가단 활동자료 및 달릿, 팔레스타인, 코사투, 환경관련 자료 등	105

여는말

더반으로 가기 위해... 더반은... 더반이후는

이금연 (안양 전진상복지관 / 이주·여성인권연대)

더반(Durban)으로 가는 길은 험난했다.

이틀 밤을 도중에 보내고 도착한 그곳은 바삭 바삭한 바람에 나뭇잎들이 물기를 잃고 있었다. 난생 처음 아프리카 땅의 기운을 접하며 강렬하게 쏟아지는 햇빛에 그저 땅속으로 녹아들 것만 같았다. 보따리의 무게만큼 더반에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그리고 드러내며 가져갈 것을 찾아야 하는 사명이 있었다. 한국에서는 관심 밖인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증' '불관용'을 어떻게 사회적인 쟁점으로 만들 것인가 하는 과제와 함께 WCAR의 전 과정을 참가하여 보자는 결의는 결코 무의미하지 않았다.

WCAR이 더반으로 오기까지의 그 여정도 짧지 않았다.

꼬박 2년 세월을 준비하여 온 그 과정에 한국의 활동가들은 거의 막바지에 합류를 위한 준비를 하였다. UN NGO담당실로부터 배달되어 온 신청서가 누적되는 가운데 이주여성인권연대는 준비 제안을 하였고, 그 준비를 위하여 새로운 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NGO Network in South Korea for WCAR 2001). 인종차별의 시각으로 국내 이주노동자들의 문제를 다시 정리해 보면서, 난민들의 실태에 대하여서도 살펴보았다. 한국은 이미 1979년도에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 협약'을 비준하여 그 내용이 적용되고 있는 나라임을 새롭게 확인하면서 한국에서의 인종차별에 관한 문제제기를 '우리가 하자'는 결의를 하였던 것이다.

더반에 가기 위해서는 경비도 만만치 않았다.

그러나 목표를 정하고 뒤를 돌아보지 않은 결과 우리는 6명이 함께 갈 수 있었다. 아시아 태평양지역 준비회의에서 '더반에도 꼭 와주면 좋겠다'는 UN 관계자의 간곡한 부탁에 마음을 다진 박준우 학생의 출현으로 우리 일행이 청년포럼(Youth Forum)의 대표 참가자격을 갖게 되었으며 준우 학생은 그 몫을 톡톡히 하였다. 국제연대를 모색해보고 한국의 이주노동자들의 실상을 국제사회에 고발(?)하겠다는 다짐으로 어려움 중에서도 참가의지를 놓치지 않는 평등노조 이주지부의 이윤주 지부장과 송수진 조합원, 현장의 생생함을 인권하루소식에 전하고자 했던 인권운동사랑방의 심태섭 기자 그리고 제네바에서 훈련과정을 통하여 UN회의의 흐름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었던 부산 외국인노동자인권을 위한 모임의 사무국장 강은경 그리고 작은 이 그룹을 대표하여 동행한 필자를 비롯한 우리 일행 6명은 출발부터 돌아오기까지 아름다운 공동체였다.

우리는 부족하였다.

우선 언어가 부족하여 마음고생을 해야 했다. 마음을 다하여 듣고자 하여도 피곤함이 겹칠때면 은근슬쩍 찾아드는 잠은 많은 것을 놓치게 하였다. 인원이 적어 이주노동자 외에 난민과 관련한 회의나 인신매매 혹은 여성과 관련한 회의에 충실히 참여하기에도 역부족이었다. 여섯 명이 시위도 해야 했고, 감시를 해야 했던 일본 참

가단의 모임에 가서 목소리를 내야 했으며 여기저기서 마련된 시위에도 가야 했다. 한국의 상황을 담은 인쇄물 배포를 위하여 매일 아침 무거운 가방을 지고 다니기도 하였다. 우리는 카메라 및 통신장비도 부족했다.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는 여러가지 행사를 효과적으로 담아 내기에는 그 수단들이 너무 없었다. 우리의 눈과 귀, 마음과 머리로 입력하는 것이 취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이기도 했다. 그리고 그것은 비교적 괜찮은 기능을 발휘하였다.

더반은 만남의 자리였다.

'인종차별 철폐를 위한 국제여성법정'(World Court of Women against Racism)에 증언자로 오신 나가사키 원폭 피해자 박귀훈 어르신과의 만남, 회의를 자신들의 외침으로 가득 채운 인도의 달릿을 지원하러 빠리에서 온 박은경씨와의 나눔, 독일 이주노동자인 한국인 주재순 선생과 미국교포 제니와 천지혜씨와의 만남 외에도 기간동안 우리에게 중요한 정보와 일정의 흐름을 전달해준 팍스로마나의 이성훈 사무국장의 사려깊은 도움이 우리를 풍요롭게 하였다. 정부대표로 오신 여성부 한명숙 장관과 제네바 주재 정의용 대사께서 우리 일행을 초대하여 한국 정부대표단과의 만남도 가질 수 있었다.

더반은 전시장이었다.

인류가 현재 앓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그곳에 와 있는 것 같았다. 몇 천년동안 인류가 차별과 억압의 사슬을 끊지 못하고 대물림하여 내려온 것부터 세계화로 인하여 파생되는 모든 문제들이 더반에서 들끓고 있었던 것이다. "평등, 정의 그리고 존엄을 위하여 뭉쳐 싸우자"라는 슬로건 아래 저마다 불평등을 고발하는 소리들이 회의 내내 울려 퍼졌다. 이들의 소리를 들으며 더반 이후(Post-Durban)는 이곳에서 채택된 선언과 행동계획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어떻게 실천으로 이어질 것인가에 따라 그 소리들이 반향없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생생한 증언이 될 수 있을 것일 터이다.

우리는 갈 때보다도 더 무거운 보따리를 들고 들어왔다.

무게만큼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이 더욱 늘어났음을 우리는 안다. 따라서 더반으로 가기 위하여 마련된 이 끈(NGO Network in South Korea for WCAR 2001)으로 인종차별과 불관용 그리고 외국인에 대한 혐오증이 사라질 수 있도록 탄탄하게 엮어 나갈 것이다. 끈을 단단히 부여잡고 나가기 위하여 부족한대로 우리의 경험과 느낌을 보고하는 의미에서 이 자료집을 발간하게 되었다. 적은 인원으로 많은 주제를 참관할 수 없어 기록이 제한된 주제로 좁혀지기는 하였으나 이 자료집을 접하는 한 분 한 분마다 인종차별을 철폐해 나가는 데 함께 우리의 이 끈을 잡도록 초청하고 싶다. 비록 얇은 줄이지만 같이 엮어나갈 때 '인종차별'은 그 그물망에 걸려서 버려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여정을 위하여 뒤에서 수고한 민변의 김기연씨와 사랑방의 이주영씨에게 특별히 감사드리며 이성훈 팍스로마나 사무국장께도 감사드린다. 이주·여성인권연대를 비롯하여 관계된 단체들의 모든 활동가들과 마음으로,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마지막으로 긴 회의 동안 열성을 다하여 참관한 우리 일행들, 이 자료집을 위하여 긴장을 풀지 못하고 지금까지 노력해온 수고에 갈채를 보내는 바이다.

2001년 9월 20일

WCAR 한국 NGO 참가단 단장 이금연

WCAR 총평

더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강은경 (부산외국인노동자인권을 위한 모임 / 이주·여성인권연대)

21세기 UN의 첫 번째 세계회의가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개최되었다. 지난 8월26일 청년회의의 개막을 시작으로 NGO포럼, 정부간 회의가 잇달아 열렸으며 지난 9월7일에 그 막을 내린 상태이다. 9월7일 폐회식에서 채택되어야 할 선언과 행동계획이 공식일정을 넘어서서 채택이 되는 등 파행을 빚어온 이번 회의를 둘러싸고 비판과 비난의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그러면 2주동안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인지를 알아보자.

세계 인종차별 철폐대회의 개최 목적과 준비과정

UN은 70년대 초반부터 인종차별 문제를 전 세계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인종주의와 인종차별에 대항하는 10개년"을 3차례 설정하고 이미 78년과 83년, 두 차례에 걸쳐 제네바에서 인종차별 철폐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두 회의의 주요이슈는 단연 국가차원에서 인종차별정책을 실시했던 남아공의 아파르트헤이트 종식이었다. 94년 만델라의 흑인정권이 들어서면서 아파르트헤이트는 '공식적'으로 철폐되었고 냉전종식 이후 들어가는 인종간 분쟁(ethnic conflict)과 이주민, 난민 등 현대사회의 인종차별문제는 거의 모든 국가에서 골머리를 앓을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UN은 인종차별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97년 제52차 UN총회에서 인종차별 철폐대회(World Conference Against Racism, Racial Discrimination, Xenophobia and related intolerance, 이하 WCAR)의 개최를 결의하고 인종차별로 극심한 고통을 받았던 남아공정부의 제의에 따라 더반에서 개최된 것이다.

개최결정 이후 만 4년만에 더딘 준비를 거쳐 개최된 것은 인종(차별)문제가 첨예하고 국가 안팎으로 얼마나 민감한 문제인지를 보여준다. WCAR을 통해 세계의 인종차별문제를 논의하고 이를 극복할 방법을 찾는 것이 회의의 원래 목적이겠지만 UN의 속성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어쨌든 회의를 통한 형식적인 결과물은 마지막날 채택하게 될 선언과 행동계획이고 실제로 두 문서를 작성하는데 자국에게 유리한 문구를 삽입하기 위해 혹은 불리한 문구를 삭제하기 위한 갖은 설전과 외교의 양상으로 나타났다. 이 선언과 행동계획의 초안을 작성하기 위해 3차례의 준비회의가 열렸지만 많은 부분이 합의되지 못하고 더반회의로 넘겨진 상태였다. 3차의 준비회의와 더반회의의 최대 쟁점은 첫째,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둘째, 과거 식민지배에 대한 보상, 셋째 인도의 카스트제도였다.

한편 NGO들의 포럼(NGO Forum)은 정부간 회의 전인 8월27일부터 9월1일까지 역시 더반에서 개최되었는데 이 포럼 역시 NGO들의 독자적인 선언과 행동계획을 채택했으며 지역별로 여러 차례의 준비회의를 마친 상태였다.

더반회의의 공식 명칭은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주의 그리고 이와 관련된 불관용에 대항하는 세계회의'이며 이는 더반회의의 목적 그 자체이기도 하다. 이를 위한 5가지 공식의제로 모든 쟁점을 다뤘다.

첫째, 인종주의와 인종차별 그리고 이와 관련된 불관용의 재료, 원인, 형태들과 동시대의 선언

- 둘째, 인종주의와 인종차별 그리고 이와 관련된 불관용의 희생자들
- 셋째, 국가, 지역, 국제적 차원에서 인종주의와 인종차별 그리고 이와 관련된 불관용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서의 보호, 교육, 예방의 방법들
- 넷째, 국가, 지역, 국제차원에서의 효과적인 개선책, [보상]을 위한 제공
- 다섯째, 인종주의와 인종차별 그리고 외국인혐오주의와 싸우기 위한 UN과 국제기구들의 협력을 포함한 완전하고 효과적인 전략

NGO포럼 : 아무도 아무 것도 모른다.

8월27일부터 9월1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NGO포럼은 공식행사가 시작되기 전인 등록과정에서부터 행정적 오류와 비민주적 운영으로 각국 NGO 활동가들의 원성을 샀다.

NGO포럼은 남아프리카공화국 NGO 연합(SANGOCO)이 주관하고 UN NGO 사무국에서 지원한 행사였다. 이와 함께 NGO 국제운영위원회(International Steering Committee, ISC)가 결성되어 있어 NGO의 모든 행사와 행동을 주관했다. 포럼에 참가하기 위한 명찰을 발급 받기 위해 신청서와 1인당 100 USD의 등록비가 있어야 했다. 그러나 미리 보낸 신청서는 정보입력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3-4시간을 소비해가며 긴 줄을 서서 다시 신청서를 작성하고 과도한 등록비를 납부해야 했다. 1인당 등록비가 너무 높게 책정되었다는 비판과 함께 등록비 거부운동 혹은 인하운동을 전개한다는 소문도 돌았지만 결국 대부분의 참가희망자들은 저개발 국가의 한달 월급에 해당하는 돈을 납부했다. 250여명이 대거 참가한 인도의 달릿(Dalits, Untouchables) 그룹은 거센 항의를 통해 1인당 50 USD로 등록비를 인하 받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또한 남아공의 9개 지역에서 조직된 여성들이 기차를 타고 8월29일 더반에 도착했지만 그들은 등록비는 커녕 기차비도 없으며 철간을 기차와 거리에서 노숙을 해야 했고 그들 중 다수는 에이즈양성자와 HIV감염자들이었다. 노숙을 시작한지 3일이 지나서야 행사가 진행되는 킹스미드(Kingsmed Cricket Stadium)로 진입한 여성들은 "우리도 NGO포럼에 참여하고 싶다. 당신들이 비싼 호텔에서 먹고 잘 때 우리는 담요 한 장으로 길거리에서 노숙을 해야 했다. 우리가 바로 인종차별의 피해자들이다. 우리는 움베키 대통령의 연설 따위를 듣기 위해서 그리고 더반 해변가를 걷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자신들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 더반에 왔다"를 외치며 예상치 않은 충격을 가져왔다. NGO포럼이 어수선하고 비민주적으로 운영된다며 말들이 많을 때 발생한 일이라 개인적으로 UN주최의 세계대회에 NGO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드는 기회를 제공했다.

NGO포럼은 크게 3가지의 큰 행사로 구성되었다. 먼저 크리켓 운동장에 대형 천막을 친 주회의장에서는 매일 식민주의, 제도화된 인종주의와 카스트주의, 세계화와 인종주의를 주제로 저명한 인사들과 참석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고 오후에는 총 26개의 주제별토론을 통해 NGO포럼이 채택할 선언초안과 행동계획초안을 마무리하는 작업이 마려되었다. 이외에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각 NGO들이 WCAR 주최하는 크고 작은 CAUCUS, 포럼, 피해자의 증언(Voice of Victims)이 이어졌다. 언론관계자를 비롯해 5천명 이상이 참가한 대규모의 행사가 일사불란하게 모든 참가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많은 인종차별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노력하는 자세가 있어야만 약간의 문제가 덮여질 수 있을 것이다. 행사 기간 내내 문제가 되었던 것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앞서 언급했듯이 높은 등록비로 "평범한" 인종차별의 피해자들의 접근을 어렵게 했다.
- 둘째, 수많은 코커스의 장소가 수시로 바뀌고 장소배정에 많은 혼란을 가져왔으며 이미 나와있는 행사 일정이

아무런 사전공고없이 변경되어 혼란을 가중시켰고 이는 행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나 정리될 수 있었다. "아무도 아무 것도 모른다", "100명이 100명의 말을 하고 있다" 행사기간 중의 혼란스러운 점을 드러내는 말이다. 셋째, 이미 제출된 선언과 행동계획의 초안을 토대로 마무리 작업을 하는 "주제별 커미션"에서 적절한 안내 없이 충분하지 않은 시간동안 형식적으로 진행되어 ISC에 대한 비민주성이 적극 제기되었다. 뿐만 아니라 두 문서를 만들어나가는 중간 합의되지 않은 문구들이 기재되거나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기도 했다. 결국 선언과 행동계획은 9월1일 폐막식에도 제출되지 못하고 정부간 회의가 진행되는 9월4일이 되어야 완성되었다. 결국 NGO 선언과 행동계획은 모범을 창출하지도 못했고 문서를 기반으로 한 對 정부 로비활동에 별 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를 두고 많은 인권운동가들은 93년 비엔나인권세계대회의 예를 들어 "당시 정부간 선언과 행동계획은 황혼에 묻혔고 방콕 NGO선언은 UN과 인권운동영역에서 두고두고 인용되며 참고되고 있는데 더반 NGO선언과 행동계획은 이에 비해 실패작"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뿐만 아니라 지역별 회의를 통해 채택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테헤란 선언, 카트만두 선언의 내용도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물론 모든 것이 잘못되었거나 의미가 없었던 것은 결코 아니다. NGO들의 수많은 공식·비공식 포럼·코커스 등은 보석같은 행사들이 현대사회의 인종주의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고 희생자, 피해자들의 증언은 인종차별 문제가 한 개인과 사회를 어떻게 파괴하는지에 대한 생생한 교훈을 가져다주기도 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3차례의 준비회의와 더반에서의 최대 쟁점은 UN의 오래된 대립의 한 쌍인 이-팔 분쟁과 과거 식민지배에 대한 보상문제, 인도카스트문제였다. 보는 사람에 따라 이주노동자, 난민 등 현대사회의 인종주의 문제도 주요한 쟁점으로 보는 이들도 있었지만 결국은 앞서의 두 문제가 더반의 모든 것을 뒤덮었다.

더반회의가 개최되기 전 아랍국가들을 주축으로 이스라엘의 국시인 시오니즘을 인종주의로 규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이미 미국은 불참을 선언한바 있다. 미국 NGO들과 전 세계의 비난을 의식해 참석하긴 했지만 정부간 회의가 한창이던 9월4일, 결국 미국과 이스라엘이 대표단을 철수할 정도로 "뜨거운 쟁점"이었다. 킹스미드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 없는 각종 행사에 양측 NGO들은 서로의 발언권을 얻기 위해 또 상대방의 발언권을 묵살시키기 위해 서로의 발언이 인종주의적 이라고 외치며 몇몇 행사를 엉망으로 만들기도 했다. 킹스미드 주회의장 밖에서는 양측이 경찰을 사이에 두고 찬송가를 부르며 '인종차별을 부추기는 세계회의 (World Conference Advocating Racism)', '균형을 잃은 회의 (Unbalanced Conference)'라고 외치는 이스라엘 NGO들과 "해방! 팔레스타인"(free! free! Palestine)을 외치는 팔레스타인과 이를 지지하는 NGO들의 대립이 연일 이어져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NGO들의 이성적인 논쟁을 기대하기가 거의 어려운 상황에서 분위기는 완전히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주제에 상관없이 기회만 있으면 자신의 목소리를 내세우는 이들이 또 있었다. 달릿(Dalits)! 바로 그들이다. 3천년간 카스트제도에 의해 고통받고 있는 불가촉천민들이 250명이나 더반으로 날아왔다. 'Include Caste in WCAR' 전통의상에 덧입은 조끼의 등에 씌어 있던 문구이다. 이들의 더반에서의 목적은 바로 정부간 회의에서 채택될 선언과 행동계획에 카스트 문제를 집어넣는 것이었다. 단일주제에 최대의 인원이 참석한 달릿들은 아침·저녁의 정리모임을 통해 모든 일정을 점검해 각자의 임무를 배당하고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어디를 가도 검은 조끼와 흰색 머리카락을 하고 가슴엔 뺨지를 단 이들이 붐비고 있었다. 풍물패까지 동원해 대단히 조직적으로 활동한 이들은 더반에서 언론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은 이들이다. 달릿을 지

원하는 서방의 한 단체에서 일하는 한 사람은 "나도 굉장히 놀랐다. 자기나라 수도인 뉴델리에도 못 가본 사람들에게 더반에서의 활동은 이들이 성장하는데 큰 자양분이 될 것이다. 아마 인도로 돌아가면 전국적인 달릿 운동기구가 만들어질 전망"이라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NGO들은 과거 식민지배에 대해 사과(apology), 배상(reparation), 보상(compensation)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한 목소리를 내어 이와 관련된 NGO들의 특별한 행동은 없었다. NGO포럼 마지막날인 9월1일, 참석한 모든 NGO 활동가들의 시위가 예정되어 있었다. 목적은 연이어 열릴 정부간 회의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날씨가 바뀌었다는 등 소문만 무성했으나 결국 개최되지 못했다. 한편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전국 노동조합연합인 코사투(COSATU)는 인종차별철폐회의의 개최를 반대했었다. 이들은 NGO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으며 회의장 밖, 더반 시내 곳곳에서 연일 민영화 반대를 외치며 시위를 조직했다. 포럼이 주최하는 시위가 왜 무산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으며 그것 자체는 그다지 별문제가 아니다. 성급한 판단일지는 모르겠지만 더반회의와 같은 UN의 인권논의에서 NGO의 역할은 정부를 압박하고 인종차별에 신음하는 이들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럼에서 NGO들은 'UN언어'를 그대로 답습할 뿐 강력한 국제 민중의 힘을 보여주지 못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다.

하루에 50개 이상의 크고 작은 행사를 통해 자신들의 문제를 외치는 혼잡함에서 현대사회에 정말로 다양한 인종차별 문제들이 만연해 있고 국제사회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실타래를 풀어야 하는지 막막한 느낌이 들기도 했는데 여기서 잠시 지면을 많이 잠식하더라도 포럼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하나씩 열거해보자. 이는 현대사회의 인종차별의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것이기도 하다.

- 아프리카인과 그 후손들
- 반유대주의
- 달릿과 그 외 카스트제도에 기반한 차별
- 원주민
- 여성
- 팔레스타인/ 새로운 형태의 아파르트헤이트
- 로마 (유럽의 집시들)
- 이주민, 난민 그리고 난민신청인
- 교육, 정보, 통신 그리고 언론
- 노예제와 노예무역
- 소수민족
- 아시아인과 그 후손들
- 형사정의 제도
- 종족분쟁, 인종청소 그리고 대량학살
- 보건, HIV/AIDS
- 장애인
- 식민주의와 외국의 점령
- 청년과 아동
- 환경과 인종주의

- 종교적 불관용
- 배상 (과거 식민지배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문제)
- 세계화, 빈곤 그리고 사회적 배제
- 성적지향
- 노동
- 인신매매
- 법적 척도, 정책과 그 적용

6일간의 NGO포럼은 9월1일 폐막식을 끝으로 그 막을 내렸다.

폐막식에는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가 동시통역으로 2시간을 넘는 연설을 통해 미국과 서방세계에 대한 독설을 퍼부었고 수많은 참석자들은 미국에 대한 성토를 통해 통쾌함을 느껴서인지 미리 배포된 쿠바국기를 흔들며 연신 "피델! 피델!"을 외쳤다. 일각에서는 카스트로가 인권문제에 대해서 무얼 한 게 있느냐 카스트로의 연설을 기획한 이들의 짧은(?) 생각을 비판하기도 했다. WCAR의 사무총장인 UN인권고등판무관 메리 로빈슨은 더반회의 전에 미국과 이스라엘을 의식해 "시오니즘은 인종주의가 아니다"라는 발언을 해 팔레스타인 NGO들의 원성을 산 바 있는데 이들의 야유를 받으며 연단에 오른 메리 로빈슨의 처지가 무척이나 어려워 보였다. UN인권문제에서 NGO의 목소리를 가장 잘 대변하고 그들의 많은 지지를 받는 만큼 UN인권고등판무관에 거는 기대는 남다른 것 같다. 메리 로빈슨의 연설속에 자신들의 문제의 언급 유무에 따라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을 보면 그러하다. 정부간 회의에 NGO의 목소리를 가능한 많이 반영해야 하는 도덕적 의무와 정부간 회의의 파국을 막아야 하는 이중의 과제를 짊어져야 했던 메리 로빈슨으로서는 무척이나 곤혹스러운 2주간이었음에 틀림이 없을 것이다. 어쨌든 포럼은 9월1일을 그 끝으로 막을 내렸지만 NGO들의 임무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더 중요한 임무가 기다리고 있었다. 오히려 행사 전부터 시작된 정부를 상대로 한 로비활동이 그것이었다.

정부간 회의 : 예고된 장면들

정부간 회의는 9월 1일에 시작이 되었지만 대부분의 정부대표단은 이미 정부간 회의가 개최되는 국제컨벤션 센터(International Convention Center) 바로 옆에 위치한 힐튼호텔에 여장을 풀고 비공식적인 협상이 시작되었다.

정부대표단의 접촉이 시작될 때쯤 NGO들은 컨벤션센터에 입장하기 위해 UN과 설전을 벌이고 있었다. UN은 컨벤션센터의 좌석이 불충분하다는 조건을 내세워 NGO에게 700개의 좌석을 내어주겠다고 했으며 NGO들은 로비와 모니터를 위해 더 많은 좌석을 얻기 위해 고분 분투했다. 결국 한 단체당 1개씩의 좌석표가 배부되었고 매일같이 3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좌석표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250명이 참가한 달릿그룹은 하나의 좌석표로 돌아가면서 사용해야하는 불합리한 점이 계속 제기되어 중간쯤에는 시정되기도 했다. 결국 철저한 통제 속에 회의장은 텅텅 비어 관중 없는 공허한 모습을 연출했다.

정부간 회의는 9월 1일부터 7일까지 총 7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되었다. 총회장에서는 각 국 대표단, UN기구, 각 국가의 국가인권기구 등이 나와서 연설을 하고 한편에서는 선언초안 작업을 위한 실무분과, 행동계획 초안 작업을 위한 실무분과가 동시에 열렸다. NGO 참가자들은 총회와 두 개의 실무분과에 나뉘어 들어가 각 주제별, 조직별로 모니터와 로비활동을 벌였다. 컨벤션센터로 들어가지 못한 나머지 참가자들은 더반전시회장(Durban Exhibition Center)에 모여 UN인권고등판무관 사무실에서 기획한 특별행사에 참가하거나 시위를 조

직하기도 했다.

기획에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이 특별행사는 전쟁이 아동과 인종주의에 끼친 영향, 불보자동차를 모델로 해서 작업장내에서 다양성을 강화를 모색하고 세계화가 인종주의에 미치는 영향, 국가인권위원회와 6개의 UN 조약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모색등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돼 실망감과 무기력함에 빠진 참가자들의 마음을 채우는데 청량제의 역할을 했다. '사업처럼 일을 하지말것'을 각 대표단에게 요청했던 메리 로빈슨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정부간 회의는 예상했던 것처럼 흘러갔다.

두 실무분과는 회의가 시작된 지 나흘이 지나도록 '의사진행 발언'에 묻혀 별 진전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미국과 이스라엘이 "중요에 가득찬 문구, 아랍권에 공중 납치된 더반회의"라고 숨김없이 자신들의 감정을 토로하고 철수함에 따라 과연 7일간의 회의로 선언과 행동계획이 타결될 수 있을 지에 회의적인 분위기가 팽배했다. 더구나 미국을 따라 유럽연합도 철수할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떠돌면서 회의자체가 실패로 돌아갈지 모른다는 어수선했다. 이들이 철수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미국 NGO들은 즉각적으로 시위를 조직해 자신들의 정부를 맹렬히 비난했다. 공식적인 일정이 마무리되어야 하는 폐막식까지 완성된 선언과 행동계획은 나오지 않았고 메리 로빈슨은 연설을 통해 "더반의 성과는 결코 작지 않으며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우리에게 해야 할 많은 일이 놓여있다"고 애써 더반회의의 성과를 역설했지만 타결된 주요쟁점들을 들여다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

· 카스트와 달릿

초안에 "직업과 출신에 기반한 차별을 철폐해야"하는 희미한 문구로나마 달릿 문제가 언급되어 있었다. 그러나 카스트제도는 인도사회의 고유한 제도이며 역사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는 인종차별 문제라기 보다는 사회적 그리고 계급적인 문제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 인도와 이를 방관한 나머지 국가들의 타협으로 결국 이 문구조차 기록되지 못했다. 결국 2억5천명의 달릿의 희망은 일단은 짓밟힌 것이었다.

· 이스라엘 : 팔레스타인

미국과 이스라엘이 철수한 가운데 아랍권의 맹공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힘의 논리에 따라 시오니즘을 인종주의로 규정하거나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에 대한 대량학살을 명시하지 못하고 아래와 같이 타결되었다.

"우리는 외국의 점령 하에 있는 팔레스타인의 어려운 처지에 우려를 표한다. 우리는 팔레스타인의 자결권 및 독립된 국가를 설립할 천부의 권리를 인정한다. 또한 우리는 이스라엘을 포함한 그 지역 모든 국가들의 안보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며 모든 국가들이 평화를 위한 지지를 할 것과 빠른 결론을 가져올 것을 요구한다."

· 과거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 문제

사과, 배상, 보상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끔찍한 인간매매의 노예제의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을 뿐더러 지금 아프리카 대륙이 내전과 빈곤, 에이즈로 고통받고 있는 것 또한 그 노예제도의 영향임에도 불구하고 서방 선진국들은 끝내 이 문제의 책임을 피해갔다.

"우리는 노예제, 대륙간 노예무역을 포함한 노예무역이 인류역사에서의 끔찍한 비극이었음을 인정한다. 그것은 끔찍한 야만성 때문만이 아니라 그것의 규모, 조직된 본질 그리고 특히 희생자들이 실재에 대한 부정이라는 점 때문이다. 나아가 우리는 노예제도와 노예무역이 반인도적 범죄이며 언제나 그것은 특히 대서양을 경유하는 노예무역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식되어야 했음을 인정하며, 그것이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주

의 그리고 이와 관련된 불관용의 주요한 원천이며 징후들 가운데 놓여있으며, 그리고 아프리카인들과 그 후손들, 아시아인과 그 후손들과 토착민들은 이러한 행위의 희생자들이었음을 그리고 계속 노예제도와 노예무역의 결과의 희생자들임을 인정한다."

한국 정부와 NGO 대표단의 활동

한국 정부는 8월초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문제와 일본군 성노예문제를 제기했다. 더불어 한명숙 여성부 장관은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이주여성노동자의 인권이 적절히 보호되지 않고 있다는 발언을 해 나름대로 균형 감각을 갖춘 발언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일본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지만 같은 내용을 제기한 중국, 한국 정부와 거의 유사한 발언을 한 북한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은 채 형식적인 대립으로 끝이 났다. 인권국가로 알려져 있는 한국 정부가 다른 나라의 인권 문제에 적극 개입하려는 모습은 이제까지 그랬던 것처럼 전혀 없었다.

99년 말부터 세계의 NGO들은 WCAR을 준비해왔지만 한국은 올해 중반, 즉 WCAR의 준비가 거의 끝나 가는 시점에 이번 회의를 준비하게 되었다. 준비 초반부터 결합하지 못하고 더구나 WCAR의 존재조차 모르는 상황에 대해, 한국의 인권단체가 국제적인 인권문제에 소홀하다는 것과 한국 사회의 인종차별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모임이 결성되었다. 준비과정에 긴밀하게 결합하지 못해 정부를 상대로 한 로비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음을 인정하고 세계대회를 계기로 한국 사회의 인종차별 문제를 부각시키고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목적으로 결성되었다.

준비모임은 지난 5월 22일에 모임결성을 결의하고 6월 20일에는 한국의 이주노동자, 난민문제에 대한 내부 세미나를 개최하고 7월 18일, 팍스로마나 이성훈 사무국장 초청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준비모임은 현지활동을 위해 청년포럼, NGO포럼, 정부간 회의 등 전과정 모니터, 이주노동자, 난민관련 NGO들과의 연대활동, 로비활동,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움직임에 대한 시위, 일본의 역사왜곡과 군국주의 부활에 대한 결의문을 작성, 세계 비정규기구 활동가들의 서명작업, 일본정부 대표단에 결의문전달을 계획했다. 또한 인지도가 낮은 인종차별문제를 널리 알리기 위해 더반의 전과정을 모니터한 자료집을 발간하고 인권단체를 대상으로 보고대회를 가지기로 결정했다.

한국 참가단은 한국의 인종차별 문제에 대한 홍보를 위해 이주노동자, 난민, 인신매매와 혼혈아동의 문제를 수록할 팜플렛을 제작해 배포하고 이주노동자·난민관련 행사를 모니터하고 적극적으로 발언을 하는 활동을 했다. 또한 지난 9월3일에는 일본의 과거청산문제에 대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아태지역 NGO들과의 충분한 논의가 없었던 관계로 자발적으로 동참한 일본 단체들과의 소규모 시위를 30분 정도 실시해 과거식민지배에 대한 철저한 사과와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와 원폭피해자, 강제징용자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배포했다. 그러나 유네스코와 UN인권소위원회의 역사교육을 제대로 해야한다는 권고 안이 나와있던 상황에서 NGO 선언과 행동계획에 이를 명시하는 문구를 넣는 작업을 하지 못해 아쉬움을 내었다.

UN이 개최하는 회의구조를 이해한 결과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회의자체에 참가하는 것은 그다지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NGO들의 준비회의, 정부간 준비회의 때부터 국제 NGO들과 연대해 준비를 해야만 그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 인권동향과 소식에 귀가 밝아야 하는데 각 단체의 끊임없는 관심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는 듯하다.

정리하미

더반회의가 끝나자마자 미국의 테러 참사로 온 세계가 시끌벅적하다. 이 문제는 모슬렘들과 미국과 그를 추종하는 국가들의 대립으로 나타나고 있다. 테러가 나자마자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민간인 거주지역에 무차별 폭격을 하고 있고 각 나라의 아랍계 국민들은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21세기 처음의 UN인권회의, 인종차별회의가 끝난 뒤의 풍경이다.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주의 그리고 관련된 불관용을 극복하기 위한 더반회의는 막이 내렸지만 국제사회의 각성과 노력은 요원한 상태이다.

사람들은 더반회의 이후 각 국가들이 선언과 행동계획의 준수를 감시할 특별한 기구를 설치하자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지만 중요한 것은 아름다운 말과 그럴듯한 기구가 아니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미 UN에는 수많은 인권조약과 기구들이 존재하고 있고 특히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에 관한 조약과 그 위원회가 설립되어 있지 않은가. UN의 활동과 현실과의 괴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문제는 이 괴리를 조금씩 줄여 나가는 것이 아닐까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오로지 차별의 희생양일 수밖에 없는 일반 민중과 NGO의 지침 없는 활동만이 그 해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별 보고 - 청년포럼**혼란 속 "발언의 자유"**

박준우 (보이스카우트)

세계 인종차별 철폐대회는 전 세계 젊은이들이 그들의 관심사를 세계에 알리도록 한 청년포럼으로 시작했다. 남아프리카 더반에서 지난 8월 26일 열린 청년포럼은 인종주의에 반대하는 첫 세계청년포럼으로서 의의가 있었다. 물론, 이전에도 국제회의는 있었으나 미국과 유럽의 목소리만을 내는 것에 그쳐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세계 각 지역에서 열린 준비모임이 있었다. 이 회의에 참가하게 된 계기가 바로 이것인데 지난 7월에 WCAR 준비모임으로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인종주의에 관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워크숍"에 참가했고 인권고등판무관 사무소 사무관 Birgit Van Hout에 의해 WCAR 참가가 확정되었다.

청년포럼의 숭고한 목적에도 불구하고 회의에서 벌어져서는 안될 많은 문제들이 발견되었다. 회의가 개최되기도 전에 나는 일련의 도전에 직면해야 했다. 한국 정부에 대표단 명단에 넣어달라는 요청을 하자 돌아온 것은 두 마디뿐이었다. "죄송하지만 안됩니다." 이유는 회의가 "정부에서 일하는 고령의 높은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 분명히 청년포럼과 NGO포럼의 대표단에 넣어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회의에 참가할 수 없다고 완강하게 주장했다. 나는 미래에 대한 잠재력과 희망을 꺾는 우리나라 한국에 매우 실망했다. 국가나 NGO의 지원 없이 회의에 참가했을 때 나는 청년포럼에 참가한 유일한 한국인이었다.

회의의 토론에 들어가자마자 2년의 준비 기간을 거친 결과인 인종주의에 반대하는 청년 선언과 행동계획 초안을 받았다. 불행히도 초안은 충분히 작성되지 못했다. 참가자의 3/5이 아프리카와 아프리카 후손들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초안은 매우 치우쳐 있었다. 게다가 스페인어판과 불어판 초안의 번역본은 영문판과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 남미와 아프리카에서 온 참가자들은 강한 거부를 나타냈다. 초안에서 가장 최악으로 지적할 것은 조항의 배치였다. 정부와 NGO를 위한 몇몇 조항이 섞여 있었으며 그것들 가운데 몇 개는 무관한 조직에 대한 요구였고 또 몇 개는 같은 말이 반복되었다. 전체적으로 청년 선언과 행동계획 초안은 무척 조악했다. 토론에서는 서로 문제있는 이견들을 제출했다. 문구를 수정하기 위해 참가자들을 주제별로 8개조로 나누었다.

각 나라에서 온 참가자들은 줄곧 자신들의 문제와 쟁점만을 주장했다. 각 대표들은 자신들의 고통과 이해, 생각만을 말하는데 바빴다. 비단 하나의 조뿐 아니라 모든 주제별 조들에서 볼 수 있었던 이러한 경향은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렵게 했다. 이후 모든 조들이 선언과 행동계획을 보고하고 채택하기 위해 모였을 때 대다수의 참가자들은 초안을 "황당"한 것으로 표현했다. 남아프리카 사람들로 구성된 WCAR 준비위원회가 준비한 초안에 만족한 참가자들은 아프리카 국가에서 온 사람들뿐이었다. 그래서 다양한 지역에서 온 대표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제기하는데 그렇게 기쁨을 토했는지도 모른다. 남아시아에서 온 달릿, 미국에 반대하는 푸에르토리코인들,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온 원주민들, 식민주의에 반대하는 제3세계의 연대, 성매매와 성차별에 반대하는 여성들 등등

전체적으로 WCAR 청년포럼은 UN 인권고등판무관 사무소 사무관 Birgit Van Hout에 따르면 그다지 "건설적"이지 못했다.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데 처음으로 세계 규모의 회의를 준비한 남아프리카인들이 이 복잡하게 얽힌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기도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러나 세계 인종차별 철폐대회는 전 세계 곳곳에서 참가한 사람들이 "발언의 자유"를 누리도록 복돋은 첫 회의라는 점에서 "성공적"이었다.

주제별 보고 - 이주노동자

이주노동자에게 인종차별은 무엇인가

송수진 (서울경인지역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

0/ 인종차별철폐, 살기위한 사투(死鬪)

세계 초유의 스펙터클을 보여준 미국테러의 검은 파장은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에게까지 번졌다. 얼마 전 조선일보에 발표된 아랍계에 대한 입국규제와 아랍권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강화가 그것이다. 부시행정부가 테러를 빌미로 더러운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으박지르며 제3세계 아랍권 국가들을 그 대상으로 지목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말을 듣고 누군가가 내뱉은 반문은 "어쩌라고? 가서 죽으라고?"였다. 지난여름 불법체류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추방이 장소를 가리지 않고 설치던 때에도 노동자들의 응수는 같았다. 자신의 노동으로 하루하루를 먹고사는 가족들과 일자리를 찾아 이 땅에 와 돈을 벌어야 하는 자신에게 일말의 배려도 없는 인간사냥은 "다 죽으라는 것"이 아니냐고 했다.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증, 그와 관련한 불관용은 이주노동자로 살아가는 이들의 삶에 이런 모양으로 덮치며 그것에 대한 저항은 이제 살기 위한 사투(死鬪) 그 자체다.

1/ 선언을 말한다

세계 인종차별 철폐대회에서 다뤄진 의제가운데 오늘날 전 세계 일간지를 평균적으로 가장 많이 장식하는 뜨거운 감자 - 정부간 회의에서 IOM(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국제이주기구) 의장은 "정치적"이라는 수사를 써서 뜨거운 감자로 표현했다. - 가 있다면 단연 이주노동자일 것이다. 자본의 세계화는 반구를 갈라 국가간 불균등발전의 파고를 그리고 있으며 그만큼이나 노동자들의 신음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남반구노동자들의 실업과 극도의 빈곤은 일자리를 찾는 긴 행렬로 이어진지 오래되었으며 값싼 노동력의 저수지는 마르지 않고 더 많은 착취의 밑거름으로 바쳐진다. 따라서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증, 그와 관련한 불관용은 이에 대한 원인과 야만적인 결과 모두를 가로질러 놓여있으며 이에 대한 급진적 저항은 이 모든 것에 대한 싸움이 되고 있다.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이주노동자 죽이기의 뚜렷한 특징은 그래서 비정규직화와 불법화로 요약된다. 자본의 이해는 송출국과 유입국을 막론하고 아쉬움 없이 관철되고 있어서 특히 유입국에서 발견되는 노동자들의 상태는 이 두가지 안에서 모두 설명 가능한 것이다.

이번 NGO선언([별첨2] 참조)은 두 차례에 걸친 지역준비회의의 결과인 NGO행동 프로그램 초안([별첨1] 참조)을 가지고 전 세계 이주노동자관련 NGO들이 모여 토론을 통해 수정보완한 것이다. 우선 초안에 대해 약평하자면 너무 짧았다. 이는 길이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토론의 출발을 제공하기 매우 곤란했으며 두 차례 지역준비회의의 산물치고는 수준이 떨어지는 초안이었다는 점을 말한다. 앞서 지적한 이주노동자에 대한 비정규직화와 불법화는 유형화된 피해자들을 양산했으며 이들은 미등록노동자, 연수생, 인신매매된 자, 밀입국자 등으로 분류된다. 물론 그들의 권리상태가 서로 비슷한 점은 있다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핵심이 되는 해결고리는 조금씩 다르다. 따라서 전체와 부분을 나누어 지적하고 그에 따른 행동계획 또한 이 핵심을 기준으로 구체화

되어야 한다. 여기서 행동계획은 전략계획으로서 각국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이기도 더더욱 그렇다. 제목이 “이주자, 인신매매 그리고 차별”인 것은 이주노동자문제 가운데 인신매매가 주요한 현상으로 등장한지 이미 오래라는 것과 문제의 정도가 심각하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이주노동자의 기본적 인권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언급한 부분에서 그것을 등록노동자에 한하고 있는 것은 미등록노동자의 숫자가 압도적 다수이며 미등록노동자 양산과 이들 권리의 사각화가 이주노동자정책의 세계적 경향 가운데 주요한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간과한 실수로 지적하기에 충분하다.

그에 비해 NGO선언의 작성 과정에서 등록노동자와 미등록노동자의 권리를 가르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현장감이 심분 반영된 결과, 선언이 미등록노동자의 권리를 집중해 언급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다. NGO선언을 논하기 전에 먼저 지역준비회의 가운데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NGO들이 작업한 테헤란/카트만두 선언을 살펴보자. 우선 선언은 “이주노동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극심한 가난과 인종이나 성에 기반한 폭력, 내전 가운데 생존을 위해 강요된 필요”라는 점을 밝히면서 “전지구적 경제의 구조조정이 국경을 넘나드는 자본의 이동을 용이하게 하면서도 노동의 이동은 제한하고 통제하고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이 과정은 지역적 경제 불평등을 심화하고 가장 값싸고 유연한 비정규노동력을 요구하며 이는 국제적 이주현상에 크게 기여한다”고 밝혀 이주노동의 원인과 현상을 요약정리하고 있다. 특기할 만한 것은 이 선언이 여성노동자의 노동에 관해 거듭 지적하고 있는 것인데 “작금의 노동의 국제적 분업을 틀짓는 가부장제와 성차별 이데올로기가 여성의 종속, 여성노동의 가치를 낮게 매기도록 부추기고 가난과 이주노동의 여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여성을 특정한 취업분야에 묶어두는 것은 성차별 이데올로기의 반영”으로 마땅히 정식화하고 있다. 주로 아시아태평양의 이주노동자들의 상태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는 느낌은 “연수제도”에 대한 표현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탈규제속에서 ‘연수제도’와 같이 파렴치한 모집인들과 브로커들 그리고 기만적인 제도에 그들을 노출시킴으로써 이주노동자의 존엄과 권리가 위태롭게 되고 있다.” 이는 행동계획에 “연수제도 철폐”의 명시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사면과 합법화”를 촉구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다. 앞서 인용한 문구들은 “연수제도 철폐”를 빼고 NGO선언이 그대로 베끼거나 언급한 것을 보면 지역준비회의에서 내온 선언과 행동계획이 초안에 비해 훨씬 그 짜임새와 내용에서 앞서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NGO선언을 보자. 일단 작성과정을 놓고 보자면 시간적 제약과 조건의 한계때문에 충분하고 풍부한 토론을 보장하고 효과적인 절차를 밟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안보다는 나아졌지만 여전히 의문을 가지는 것은 앞서 지적한 다양한 피해자가 놓인 구조, 피해의 원인과 결과, 인권침해의 다양한 형태를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증, 그와 관련한 불관용과 얼마나 연관시키고 있는가다. 그리고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조약]과 얼마나 차별성을 갖는 선언인가다. 물론 인종차별이라는 것이 노동자들의 모든 권리상태에 그대로 스며들어 있으며 그것의 철폐에 대한 언급이라는 것 또한 노동자들의 삶에 관계된 모든 권리를 밝히면 되는 문제여서 차별성을 논하는 것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왜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회의의 NGO선언인가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선언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까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GO선언은 그러한 노력을 담고 있어 그 의미는 가볍지 않다. 행동프로그램은 이주노동자를 포함해 난민과 난민신청인, 무국적자, 전쟁난민 그리고 그들의 가족의 권리를 함께 다루고 있는데 특히 공공기관에서 당하는 이들에 대한 차별을 주시, 공무원들의 반인종주의와 인권교육을 실시하라고 각국 정부들에게 촉구하고 지위의 합법성을 막론하여 그들의 권리가 유린당하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미등록노동자의 경우 사면과 합법화를 명시하고 그들의 자녀들인 아동의 권리에 대해 부모와 떨어져있거나 버려

진 아이들에게 국가가 자격있는 후견인을 임명하여 보호할 것을 제시한 것은 고무적이다. 그러나 한가지 유감인 것은 테헤란/카트만두 행동계획에 들어가 있는 “연수제도철폐”가 외국연수중인 이주노동자에게 기술연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우라는 것으로 둔갑한 것이다. 이 부분은 선언작성과정에서 편법인력도입으로서 연수없는 연수제도라는 점이 충분히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이거나 말그대로 연수중인 노동자가 제대로 기술을 훈련받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뜻으로 들어갔다고 볼 수 있다. 연수제도가 있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뿐이어서 일반화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지만 NGO선언에서 발견하는 이러한 후퇴는 반성의 지점이다.

선언은 수려하나 집행은 초라하기 일췌인 현실에서 선언을 집행하게 하는 것은 힘이다. 다시 문제는 집행이며 선언은 무기의 하나로 정확히 쓸때 우리에게 힘이 될 것이다.

2/ 워크숍, 끝까지 많은 이야기

NGO포럼기간에 열린 토론회는 NGO포럼이 마련한 공식적인 워크숍과 행사장 안팎에서 열린 코커스(caucus)를 중심으로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이주노동자 관련 워크숍은 이주노동자, 난민, 난민신청인, 인신매매된 자 등의 의제를 한 데 묶어 진행한 경우가 많았으며 이는 총론을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 풍부한 토론을 진행하는데 장 애요소가 되기도 했다. 이주노동자 의제는 세계화, 여성, 보건, 시민의 권리 등을 관통하기 때문에 각각의 영역들과 이주노동자의 상태를 주제로 설정한다면 보다 내실있는 토론을 가능하게 하는 유익한 매개가 되었을 것이나 워크숍은 그렇게 조직되지 않았다. 워크숍 내용은 제목과 예민하게 조망하지 못하고 다양한 나라들의 상황과 인권침해로 표현되는 다양한 피해들이 날것으로 열거되기 일췌여서 패널들이 줄곧 자국의 “문제들”을 이야기하는 동안 토론도 없이 끝나버리곤 했다. 앞서 NGO선언을 평가하면서 지적했던 것처럼 이러한 문제들 다시말해 유형화된 다양한 피해를 낳는 구조, 피해의 원인과 결과를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증, 그와 관련된 불관용과 연결시켜 재정의하고 설명해 낸 경험이 없음을 드러낸 것이기도 했다. 한편 워크숍이 교육의 장이기도 하지만 연대의 장이며 결의의 장이기 때문에 이제 이 문제들의 공통분모를 확인하고 공통의 전략을 무엇으로 하여 국제사회와 자국 정부를 대결해 어떻게 싸울 것인가가 빠져있는 워크숍이 내내 아쉬움을 남겼다. 하여 전 세계에서 온 이주노동자관련 NGO들은 전 세계 네트워크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공통의 전략과 연대투쟁을 이야기했으나 이러한 문제제기를 조직할 구심의 부재로 실질적인 성과를 얻는데 실패했다.

3/ 정부대표발언에 대한 단상

정부간 회의에서 한국 정부는 일본 역사교과서 문제외에 이주노동자에 대해 얘기했다. “한국에는 인종문제가 없다”는 망발에 비하면 최소한의 양심은 건진 셈이나 중요한 것은 여전히 이후일 것이다. 한명숙 여성부 장관은 “세계화와 경제적 통합의 결과로 국경을 넘는 이동이 혼란 현상이 되었지만 차별적이고 부당한 대우와 인권침해로부터 불법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장치가 없다”고 인정했다. 또한 교차(intersectionality)로 표현되는 인종과 성 그리고 계급의 이중삼중의 차별을 겪는 여성의 문제를 언급하면서 “여성 이주자들에게 진지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주노동자들이 가지는 한국 정부의 이미지는 에둘러 말하며 생색을 낸다해도 바뀔 수 없는 것이다. 부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특별한 결의를 한 것은 아니다. 가령 국제사회로부터 현대판 노예제도로 비난을 받아온 연수제도를 철폐한다는 얘기도 불법 미등록노동자들을 합법화하겠다는 얘기도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조약]을 비준하겠다는 얘기도 아니기 때문이다. 한겨레신문 9월 11일자 더반에 다녀온 한명숙 장관 인터뷰기사에서 한명숙 장관은 “출산률 하락 등으로 조만간 국내에서도 현실화될 외국인 노동자문제에 대한 대비를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조만간"이라 함은 아직은 인종차별 안전국이란 말인가? 아직도 대한민국정부의 공무원들은 인종문제가 유혈이 낭자한 지경에 달한 무엇으로 밖에 보이지 않던지 문제를 알면서도 고의로 숨기고자 하는 게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4/ 무엇을 할 것인가

1990년 12월 18일 UN총회에서 승인한 지 10년이 넘는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조약;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은 현재 16개국이 비준하고 10개국이 조인해 UN회원국 20개 정부가 비준해야 발효된다는 원칙에 따라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번 더반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쟁점으로 대두되었는데 몇몇 대표적 송출국들이나 최근 UN인권위 결의에 지지를 표명한 국가들이 비준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그러나 8개국 즉 쿠바, 에콰도르, 엘 살바도르, 하이티, 파키스탄, 페루, 포르투갈, 튀니지아 정부들은 "비준과 조인 또는 협약가입의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모든 회원국에 촉구한다"는 위의 결의에 말로만 동의했지 조인도 비준도 하지 않았다. ILO의 한 관계자는 한국이 조만간 비준국이 될 유력한 국가 가운데 하나라고 점치고 있지만 두고 볼 일이다. 사실 UN조약비준 캠페인은 한국에서도 5년 가량 되었으며 지금도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그러나 비준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며 국제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기준과 노동허가조차 있지 않은 현실의 피리가 상식을 뛰어넘는 상황에서 비준은 더더욱 국제적으로 창피한 일이기 비준의 시기는 미뤄질 수 밖에 없다. 결국 정부의 전향적인 정책전환이 커다란 변수이며 이주노동자 노조와 지원단체들은 연수제도 철폐, 미등록노동자 사면과 합법화, 노동권 쟁취투쟁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또 하나, 이번 회의를 계기로 모인 전 세계 이주노동자 단체들이 폭로한 미등록노동자의 인권상태는 당대 이주노동자운동의 주요 의제로 상정되어도 결코 무리가 없다는 확신을 주었다. 부시 행정부의 멕시코계 불법체류자 사면의지 표명과 함께 미국에서도 AFL-CIO를 비롯한 운동진영이 미등록노동자 사면을 전면내 내걸고 싸움을 시작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그렇다. 나라별로 조금씩 정도와 양상은 다르나 문제에 대한 접근은 같았다. 노동자로 인정하고 사람답게 살 권리를 달라는 것이며 그것이 사면과 합법화로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위한 광범위한 전 세계 네트워크건설에 대한 논의를 거쳐 실질적 연대를 모색하고 실천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부여된 역사적인 요구이며 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작업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분리와 차별이 자본의 전술인 이상 결과뿐만 아니라 원인을 올바르게 읽고 그것에 대한 투쟁을 조직하는 의미에서 아직은 취약한, 노동조합과 이주노동자관련 NGO들의 연대는 남한땅에서 뿐만 아니라 전지구적으로 요구되는 일이므로 이에 대한 발빠른 움직임을 조직해야 한다.

특히 기업이 저지르는 인종차별은 법제도의 안팎을 넘나들며 노동자들을 유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의에서 쟁점으로 부각되지 못했다. 이를 두고 대회 소식과 쟁점들을 비교적 건전한 관점에서 다루었던 신문 Human Rights Features는 NGO들에게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를 감시하는 담당부서를 UN인권고등판무관사무소에 설치할 것"과 이와 관련한 "특별보고관을 둘 것"을 현실적인 전략으로 삼으라고 적고 있다. 기업은 역사적으로도 식민주의, 노예무역, 전시 강제노역 등으로 인종차별의 첨병역할을 했으며 오늘날에는 무기를 팔아 내전을 부추기고 석유와 광업, 건설회사들이 원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파괴하고 있다. 다국적기업의 횡포는 또 어떠한가. 이주를 주선하고 여성과 아동에게 매매춘을 강요해 돈을 버는 범죄조직의 기업은 또 어떠한가. 오히려 법인체로 국가의 감시망에서 벗어나 무소불위의 힘으로 덩치를 불려가고 있지 않은가. 이

문제는 특히 현지법인 연수업체들과 역으로 해외현지법인으로 진출한 기업들, 그리고 'agency'라 불리는 포주 집단들과 국내외를 막론한 브로커집단들의 범행을 어떻게 단죄하고 중단시킬 것인가 하는 고민으로 확장된다. 노동자에게 기업에 의한 인종차별이란 결국 착취받는 조건의 절대적 저하와 고용불안, 각종 복지혜택의 배제로 온다. 게다가 현행 법제도안에서 허용되는 불리한 근로계약과 상관없이 노동의 권리 외적인 인권유린은 법을 어기면서 자행되고 있지만 '법대로' 한다해도 그에 대한 처벌이 터무니없이 가볍거나 '법대로'가 오히려 적들에게 유리할 때가 더 많다. 이렇게 법제도의 입안 혹은 집행이 국제적 기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제조약이나 선언이 듣기 좋은 공자님 말씀일 수는 있지만 현실에는 아무 소용에도 닿지 않는 것이 되어 버릴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그러한 현실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무기가운데 하나이며 그래서 제대로 만들어질 필요 또한 충분히 가진다.

마지막으로 인종주의와 인종차별 특히 단일민족국가에서 겪을 시행착오인 외국인혐오증과 불관용의 청소는 위에 언급한 과제들과 함께 전체사회의 진보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문제다. 필요할 때 들여와 노예처럼 부리다가 경제위기가 닥치면 다 쓴 일회용것가라 버리듯 잡아서 비행기를 태우면 되는 '노동력'이 아니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인식하도록 하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물론 이런 저급한 인식에는 정부 정책이 이들을 취급하는 태도가 기여한 바 크지만 다른 인종 혹은 민족과 함께 살아본 경험이 없는 나라 사람으로서 겪는 혼란이 자칫 혐오와 배척으로 흐를 가능성은 많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인종주의의 개념조차 서지 않는 대한민국의 정부 공무원들과 국민들에게 인종주의와 인종차별이 무엇인지 교육하는 일 또한 우리의 몫이다. 따라서 이주노동자 노조와 NGO들은 이에 대한 행동계획을 세우고 지금이라도 이 질문에 답하는 세심함을 보여주어야 할 때이다.

[별첨 1]

이주노동자 관련, NGO 행동계획 초안 전문(全文)

-NGO 대회 전-

이주자, 인신매매 그리고 차별

이주노동자들, 등록/미등록이주자와 인신매매된 사람들은 심각한 인권침해를 겪고있다. 제한적이고 인종차별적인 출입국정책은 많은 경제적 이주자들이 입국을 위한 음성적이고 불법적인 수단을 이용하고 조직된 인신매매가 자행되도록 부추기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이주의 주요한 목적은 생존이다.

구조적인 법과 정책의 틀은 국가가 이주자와 시민을 구분하게 하며 시민의 권리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권리를 부정하면서 이주자에 대한 차별의 토대를 쌓는다. 법적 보호와 구제장치의 부족은 이주자들이 경찰과 군대의 폭력, 착취적 노동조건 그리고 건강, 교육, 사회적 안전과 같은 꼭 필요한 사회서비스에 대한 접근의 부족을 포함한 인권침해의 영역에 노출되기 쉽게 만든다. 따라서 모든 국가들은 다음을 이행하도록 촉구한다.

81. 사회경제적 문화적 통합의 취지에 따라 정책을 갱신하여 이주자와 난민에게 불리한 지금의 이주정책을 재검토하고 개정하라. 포럼은 특히 국적을 근거로 차별을 초래하고 자행하는 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특히 유럽지역에 있는 “제3세계 국민들”이 겪는 제도화된 차별을 강하게 비난한다.

82. 인신매매를 금지하는 정책과 필요한 입법을 시행하라. 이 정책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담고 있어야 한다.

- (a) 지역의 정책에 맞추어 개발할 것
- (b) 집행을 강제하기 위한 적절한 자원배치를 제공할 것
- (c) 성착취, 부채에 대한 속박, 착취적 노동조건을 위한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에 대한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
- (d) 인신매매의 희생자들을 지원할 것
- (e) 인신매매 신디케이트에 대한 엄중한 처벌대책을 구체화할 것

83. 등록노동자들이 그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완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대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라. 특히 다음과 같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a) 차별과 폭력, 육체적 성적 학대에서 외국인 가사노동자들을 보호할 것
- (b) 착취적 노동조건, 저임금, 노동조합의 권리를 부정당하는 이주노동자들
- (c) 사회서비스 특히 이주노동자들과 그들의 부양자들을 위한 보건과 교육에 대한 접근을 보장할 것

84. 이민자들과 이주자들을 자주 접촉하는 세관과 출입국 직원을 포함한 경찰과 주요 공공부문 공무원들에게 인권교육과 반인종주의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라.

[별첨 2]

이주노동자 관련, NGO 선언 전문(全文)

-NGO 대회 후-

이주자와 이주노동자

155. 세계경제의 구조조정은 자본의 초국적이동을 용이하게 하나 노동의 이동을 제한하고 통제하고자 노력한다. 그 결과 지역의 경제불평등, 이주노동자들의 상품화와 비정규직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노동기준을 잠식하고 착취적이며 ‘유연한’ 노동조건으로 노동자들을 몰아넣고 있다.

156. 우리는 이주를 통제하고 인종간 관계를 규제하기 위한 많은 국가들의 공적 프로그램과 관행들이 새롭고 편법적인 형태의 제도화된 인종주의를 초래한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음을 밝힌다. 등록과 미등록상태에 있는 이주자들과 이주노동자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 사회와 그들이 살고 일하고 있는 사회의 부와 복지에 기여하고 있다. 유입국에서의 영구적 거주, 시민권, 모든 이민의 문제 특히 여성과 아동에 관한 문제에서 그들의 독립적인 신분에 대한 인정과 함께 평등권과 기회에 대한 접근이 인정되어야 한다.

157. 이주자와 이주노동자 그리고 그들의 가족구성원은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증, 그와 관련한 불관용에 쉽게 노출된다. 이주자와 이주노동자의 기술자격, 기능, 전문기술은 존중되어야 하며 공적 사적부문에서 그들의 완전하고 정당한 고용에 대한 접근이 보장되어야 한다.

158. 장애인을 포함해 여성 이주자와 이주노동자의 경우, 성차별과 가부장제 이데올로기가 지금의 국제적 노동분업을 고착하고 여성노동을 값싸게 떨어뜨리며 가사노동과 유흥업 등의 취업분야에 여성고용을 제한하며 노동력의 여성화에 기여하는 방식때문에 모든 형태의 폭력과 학대에 특별히 노출된다.

159. 이주자 또는 난민 여성, 청년, 소녀와 아동은 가내노동이나 옥외작업, 가사노동, 저임금장시간 노동, 성산업을 포함한 비공식고용에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언어장벽, 시민권지위, 인종차별, 소수인종의 부분이 되는 것은 이 부문에 종사하는 여성, 소녀와 아동의 인권방지에 기여한다. 각 국가정부들은 이들의 인권에 우선순위를 매겨 여성, 소녀와 아동을 보호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이주노동자와 난민이 착취받지 않고 그들의 권리를 구제방법을 알도록 보장하기 위해 공동체 조직들, 민족 공동체들, 노동조합들과 함께 작업한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여성취업이 지배적인 고용분야에서 노동권이 완전하게 보장되도록 노동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주노동자 관련, NGO 행동계획 전문(全文)

등록/미등록 이주자, 이주노동자, 난민, 난민신청인, 무국적자, 전쟁난민과 그들의 가족구성원들

395. 현대 이주유형의 복잡성에 접근하는 통계를 효과적으로 보관 이용하라.
396. 공공기관 특히 경찰, 법집행 공무원, 출입국 직원, 공항과 항공사직원과 같은 사실상 출입국 공무원에 의한 차별대우를 없애고 난민신청인과 미등록노동자들이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증, 그와 관련한 불관용에 근거해 고문이나 어떤 종류의 폭력이 자행될 경우, 필요한 정보와 법적지원을 제공하라.
397. 세관과 출입국 공무원을 포함해 이민자들과 난민신청인들을 자주 접하는 주요 직업종사자들을 위한 여성에 예민한 인권교육과 반인종주의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라.
398. 난민, 난민신청인, 등록/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위한 그들의 권리와 의무, 권리구제수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라.
399. 지위의 합법화를 기다리는 기간동안 난민, 난민신청인, 이주노동자의 직업, 자격, 직책, 신분을 인정하라.
400. 외국연수중인 이주자, 이주노동자, 난민, 난민신청인, 무국적자, 국내 난민이 그들의 기술을 사용 개발할 수 있도록 가치를 부여하고 인정하라.

등록/미등록 이주자, 이주노동자와 그들의 가족구성원들

401. 등록/미등록 이주자, 이주노동자와 그들의 가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거주이전의 권리와 회합의 권리, 사회서비스, 보건, 교육, 투표권을 포함한 모든 차원의 정치적 참여에 대한 접근과 함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시민의 권리보호를 보장하고 이를 존중하는 정책과 법률을 지체없이 입안하라.
402. 미등록 이주자의 사면과 합법화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법률을 검토 착수하고 그 사이 생활권, 고문당하지 않을 권리, 정의와 안전에 대한 동등한 접근의 권리를 포함한 그들의 훼손될 수 없는 인권과 자유 그리고 교육권, 주거권, 건강권(장애인에 대한 마땅한 주의), 생활임금에 대한 권리, 취업에 대한 권리, 임의적 구금과 즉각적 강제퇴거에 대한 공포없이 문화와 환경에 접근할 권리 등의 기본권을 보장하라.
403. 자주적인 단체들과 NGO들이 등록/미등록 이주자와 이주노동자들을 조직하고 노동조합에 가입하도록 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특히 여성그룹이 그들 사회안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인권침해에 대해 문제 제기할 능력을 배양하도록 충분한 자원을 할당하라.
404. 성폭력과 가정폭력 그리고 다른 형태의 학대를 포함한 폭력에 특히 노출되기 쉬운 여성이주자의 평등권을 보장하고 인권침해의 배상에 대한 자유롭고 완전한 접근을 보장하며 모든 이민과 이주의 문제에서 그들의 독립적 지위를 허가하라.
405. 이주자와 난민의 자녀들 특히 동행하지 못했거나 버려진 아이들의 인권이 더욱 방치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그들의 부모와 떨어져있는 아이들에게 자격있는 후견인을 임명하라. 더 나아가 유입국에 있는 이주노동자의 자녀에게 시민권을 허가하라.

406. 가족관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음을 인정하고 가족의 통합을 목적으로 입국을 용이하게 하고 허가하며 일단 입국되면 가족구성원들이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시민의 권리의 완전한 향유와 함께 안전하고 독립적인 거주 지위를 보장하라.

407. 이주한 가사노동자들의 인권을 모든 형태의 차별, 폭력, 육체적, 성적 학대에서 보호하고 그들의 권리를 위해 제도를 개선할 권리와 함께 노동조합과 직업협회에 대한 권리, 정당한 보수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여성에 예민한 효과적인 대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집행하라.

그들에게 사적고용기관과 신디케이트와 같은 비정부 대리단체의 활동을 감시할 수 있게 하면서 송출국과 유입국 정부들은 책임있는 정책을 수립하라.

주제별 보고 - 난민

난민관련, NGO 행동계획 초안 전문(全文)

- NGO 대회 전 -

난민, 내전난민과 차별

외국인혐오증, 인종주의, 부당한 차별은 난민에 대한 정부의 의무에 대한 좁은 해석으로 고수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유럽 중심의 “난민지위” 정의는 인간의 존엄과 생존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인권침해로서 가난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진정한 정치적, 경제적 난민들이 “가짜 난민 신청인”으로서 난민이라는 비난을 감수하면서 입국의 불법적 수단을 찾도록 강요하며 그 나라 국민들로부터 난민에 대한 인종주의적이고 차별적인 태도를 갖도록 한다. 따라서 NGO포럼은 각 국가들에게 다음을 보장하도록 촉구한다.

77. 난민과 난민신청인을 위한 정책과 입법은 국제 인권기준과 국제 인도주의 법에 기반한다.

78. 난민을 위한 프로그램과 대책은 세계인권선언과 그 대상과 목적에 비추어 난민지위와 관련해 1951년 협약과 1967년 협정 특히 차별금지에 관한 조약의 3항의 완전하고 포괄적인 적용을 근거로 누구나 “박해로부터 다른 나라의 보호소를 찾고 혜택을 누릴” 권리에 의해 지도 받는다.

79. 아동의 권리에 관한 조약의 조항들 특히 차별금지에 관한 2항, 22항과 난민아동에 관하여 난민아동에게 영향을 끼칠 개선된 정책이 나올 때는 따로 완전하게 적용한다.

80. UN난민고등판무관실(UHCR)의 법적 해석, 정책지시, 지침, 권고에 따르며 1951년 협약의 올바른 적용의 보증인으로서 UN난민고등판무관실의 역할을 인정한다.

난민관련, NGO선언 전문(全文)

-NGO대회 후-

난민, 난민신청인, 무국적자, 내전난민

166. 난민, 난민신청인, 무국적자, 전쟁난민을 발생시키는 상황의 창출과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증, 그와 관련한 불관용 사이에는 얽혀있는 연결고리가 존재한다.

167. 도피와 추방의 상황, 난민촌 생활과 재정착의 과정에서 난민, 난민신청인, 전쟁난민은 그들의 적응기간동안 모든 형태의 폭력과 학대에 쉽게 노출된다.

168. 우리는 특별히 합법적 부탄시민의 땅을 다른 민족그룹들에게 재분배하고 고의적으로 그들의 평화적인 귀환을 지연시켜온 인종주의적인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민’ 정책으로 본국에서 강제로 쫓겨난 부탄 사람들의

상황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

169. 여성은 세계 난민의 80%를 차지한다. 여성 난민, 난민신청인, 무국적자, 전쟁난민은 성과 장애, 차별의 다른 형태의 교차로 인해 희생당하며 도피와 추방의 모든 단계에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있다.

170. 우리는 그들의 법적 지위와 적응과 재정착의 조건들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민족, 국적, 성적지향, 성적 정체성에 근거한 난민에 대한 인종차별을 인정할 것을 촉구한다.

171. 난민신청자의 육체적, 심리적 조건들, 인정된 혹은 인정받지 못한 난민, 무국적자는 본국에서 고문과 감금의 희생자들이 받아들이는 나라에서 구류되지 않는 것을 특별히 보장받아야 한다. 난민을 돕고 지원하기 위한 인도적 기구들의 영구적이고 합법적인 존재는 법에 의해 제공되고 국가에 의해 재정지원되며 다원주의적 태도로 계획되어야 한다.

난민관련, NGO행동계획 전문(全文)

난민, 난민신청인, 무국적자, 전쟁난민

408. 세계인권선언에 담긴 바대로, 누구나 “박해로부터 다른 나라의 보호소를 찾고 혜택을 누릴” 권리에 의해 특히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에게 대한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난민과 난민신청인에 대한 프로그램과 대책을 개선하고 난민과 난민신청인과 관련한 국가의 입법과 정책들의 집행이 그 대상과 목적에 비추어 난민지위와 관련해 1951년 협약의 완전하고 포괄적인 적용, 1967년 선택적 협정 특히 차별금지에 관한 조약의 3항과 ‘차별금지’원칙의 전적인 존중, 이와 관계있는 모든 지역의 인권보호조약을 근거로 두어야 한다.

409. 내전난민을 위한 UN지침을 집행하고 각 정부들은 국제적 정부 그리고 비정부기구들과 협력하여 내전난민에 관한 충실한 통계를 제공하라.

410. 현행 국내법과 대책을 재검토하고 1951년 협약과 1967년 협정의 정신에 반할 가능성이 있거나 비자제도, 협약의 제한적 해석, 본국과 공항에 심사공무원 배치, 난민신청인 구금, 항공사 제재, 재입국과 비자발적 강제 퇴거 관행, ‘안전한 제3국’ 관행과 같은 보호에 대한 접근을 막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심화된 대책의 소개를 삼가라.

411. 입법과 정책의 UN난민고등판무관실의 법적 해석, 정책지시, 지침, 권고를 고려하고 지킬 것과 1951년 협약의 올바른 적용의 보증인으로서 이 기구의 역할을 인정할 것을 보장하라.

412. 인종주의와 인종차별로 유발되는 박해가 여성을 특정한 표적으로 삼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보호소를 제공하는 근거로서 이를 인정하며 남성과 동등한 기준에서 그들의 자녀들에게 그들의 국적을 양도할 여성의 권리에 대한 제한을 제거하라.

413. 난민, 난민신청인, 내전난민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시민의 권리를 존중하고 집행하라.

414. 난민, 난민신청인, 내전난민의 자녀들이 무국적자가 되거나 이후 그와 관계된 차별의 희생자가 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출생시 즉시 등록하는 것을 보장하라.

415. 세계 모든 부분에서 난민을 지원하고 받아들이는데 있어서 역할분담, 자원배치, 책임의 분담의 구조적, 제도적 불균형을 교정할 대책을 즉각 강구하라.

416. 적응 혹은 본국으로의 자발적 재정착을 돕고 난민지위인정을 대기하는 동안 도착한 나라에서 그들의 가족과 접촉할 수 있게 하는 반면, 난민촌, 쉼터 또는 다른 숙박시설에 있는 난민의 특수한 요구에 대한 마땅한 존중과 함께 전 세계 다양한 지역과 난민 그룹들간에 인도적 지원에 대한 균형을 잃은 반응을 뒷받침하는, 드러난 혹은 잠재된 차별적 관행들을 중단하라.

주제별 보고 - 여성

Intersectionality!

- 성(Gender)과 인종차별(Racial Discrimination) -

이금연 (안양 전진상복지관 / 이주·여성인권연대)

NGO포럼에 여성과 관련된 회의에 관심을 가져 보았으나 많은 시간을 내지는 못하였다. 이주노동자 주제에 관한 워크숍은 진행과정에서 실망스러움을 금치 못했는데 8월 29일 주제별 위원회에서 주최하는 여성(Gender)관련 회의는 그중 흡족함을 주었다. 여성들이 가득한 큰 텐트 안에서는 전반적인 여성들의 문제들을 검토해 본 후 아시아 태평양 지역, 미주 지역, 유럽 지역, 남미 지역 등 지역별로 모여 로비전략과 핵심 로비 내용들을 의논하였으며 다시 14주제로 나누어 관심사에 따라 소그룹으로 구체적인 토론에 붙었다. 지역별 토론을 마친 후 '성(Gender)과 세계화' 소그룹에 들어가 나누었다. 이후 다른 주제의 회의에 참가하기 위하여 주로 여성과 관련한 소식들은 독일과 미국에서 온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자료와 진행 되는 내용을 살필 수 있었다. 또한 노동포럼이나 이주노동자관련 포럼에 참가하여서도 여성에 대한 발언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기도 하였다.

여성과 관련된 큰 행사로는 8월 30일 Natal Technikon에서 열린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세계여성법정(World Court of Women against Racism)에 한국의 광귀훈 어르신이 원폭 피해자로서의 증언을 하신 다기에 짧은 시간 참관할 수 있었는데, 많은 여성들이 어떻게 차별과 억압을 받아 왔는가를 고발하였다. 증언 사이마다 시인이나 민중지도자들이 나가 시를 낭송하면 청중으로 있던 아프리카 참가자들이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는 하모니가 너무나 아름다워 대강당은 감동 그 자체였다.

더반 WCAR에서 여성과 관련하여 주로 등장한 한 단어는 'Intersectionality'였다. 마땅히 한국말로 번역하기도 어려운데 Gender Issue를 다루는 곳마다 이 단어를 사용하며 여성들이 얼마나 이중 삼중, 다중의 차별에 놓여 있는지를 발표하였고 증언을 하였다. 이것의 기본적인 개념은 이렇다. 모든 여성들의 진정한 인권을 논하기 위해서 여성인권운동은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다루어야 한다는 것인데, 즉 성, 인종, 종족, 카스트, 계급, 문화, 종교, 성적지향, 국적, 언어, 나이, 원주민으로서 신분, 건강상태, 장애, 난민, 강제이주민, 능력, 경제력, 등록노동자인가 아닌가 등의 요소들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여성에 대한 차별을 인종차별과 연결지어 이해하기 위해서 단지 '여성'이라는 성의 구분만으로는 그 차별의 다중성을 이해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성의 성(Gender)이 위에 열거한 요인들과 교차되는 것, 그 교차점에서 발생하는 차별의 이중적인 면을 말하는 것이다. 한가지 요인에 의하여 차별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여성의 정체성을 나타내 주는 다양한 요인들이 서로 섞인 가운데 인종차별이 합쳐져 몇 중의 차별을 여성들이 당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다중차별(Multiple Discrimination)과 교차차별(Intersectional Discrimination)은 WCAR의 토론에서 중요한 두 단어였는데, 여성에게 있어 다름의 요소가 차별을 만드는 요인이 되기에 이 두 단어를 중심으로 여성들의 차별에 대하여 작업한 과정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종차별은 남녀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자리는 1995년도 베이징 여성대회였다. 1965년 인종차별조약이 만들어진 이후 1993년 인종차별 특별보고관이 임명되기까지 두 차례의 인종차별회의가 있었으나 주로 국가, 인종, 종족, 종교적 소수자, 그리고 이주노동자 등 남녀를 구분하지 않은 채 인종차별의 문제를 다루었다. 이미 1967년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를 위한 선언이 채택되었고 조약이 1979년도에 채택되기는 하였으나 여성주의적인 입장과 시각으로 인종차별을 반추해 보지는 못하였다. 1993년 세계인권회의 총회에서 '소수민족과 난민여성 이주노동자와 무력 충돌 지역에 있는 여성들을 특별히 언급한 내용이 담긴 선언이 채택되었다. 다음해에 여성특별보고관이 임명되었으며 바로 베이징 북경대회가 열려 1995년 베이징 여성대회 행동 계획에는 모든 정책과 UN의 프로그램에 성을 의식한 분석을 중요시하면서 여성들은 인종, 언어, 민족, 문화 혹은 종교에 따라 몇 중의 차별에 직면하고 있음을 인식 확인하였다. 베이징 이후 여성에게 가해지는 다중적인 차별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었으며 Gender와 Race가 만나지는 교차점에 대한 접근이 시도되었다.

1998년 르완다에서 일어난 끔찍한 대량학살에 관한 국제 재판이 열렸을 때 성과 인종의 관련성을 재인식하였으며 후투와 투치의 분쟁 기간 내내 여성들에 대한 강간과 성폭행이 자행되었다. 전 유고슬라비아에서 전쟁기간동안 모슬렘 여성들이 강간과 폭행을 당한 사연들이 법정에서 서게 되면서 특정 종족의 여성에 대한 이중적인 차별이 법정에서 다루어 졌다. 2000년 3월 UN의 '여성의 지위에 관한 위원회'는 인종차별이 성(gender)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으며, 2000년 11월 크로아티아 자그레브에서 UN 인권고등판무관사무소와 UN 여성발전기금이 공동 주재로 개최한 전문가그룹회의의 주제는 성과 인종차별이었으며, 강간과 인간의 성을 노예화하는 범죄에 대하여, 보스니아 세르비안들이 전쟁기간 내내 모슬렘 여인들을 강간을 집단적으로 조직적으로 자행한 것을 다루었다. UN안보리는 이에, 소녀들과 여성들에 대한 폭력을 막기 위한 결의문을 UN이 채택하였다. 이와 같은 흐름아래 UN은 총회나 경제사회 이사회 그리고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위원회등 UN 기구들은 WCAR 준비를 위한 전 과정의 내용에 여성의 시각(Gender perspectives)으로 접근하며 통합되기를 요청하였다.

Gender와 인종차별과의 교차점으로 나타나는 차별은 특별할 것도 없고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지만 몇 가지 문제들을 살펴본다. 전 세계적으로 여성은 빈곤층에 남성들보다 더 많이 놓여져 있다. 여성들은 교육의 기회로부터 소외되며 직업 훈련의 기회도 남성에 비하여 적은 것이 현실이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정에서 여성들은 누구보다도 먼저 일자리에 떠나게 되며 독신모 혹은 여성가장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가중시켜 쉽게 빈곤층으로 몰아 넣는다. 여성의 문해율은 세계적으로 71.48%인데 비하여 남성들은 83.71%이다. 개발도상국가들의 남성 문해자는 59.19%이며 여성은 39.3%에 지나지 않는다. 원주민이라든가 소수민족에 속한 여성들은 기초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비율이 높으며 일찍 생계를 책임지거나 임신, 가사노동으로 바쁜 정보를 판단할 능력을 기르는 기초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용기회와 관련된 기술교육의 기회를 적게 받기에 여성들의 빈곤화를 초래한다.

여성들은 노동시장에서도 소외된다. 특정집단의 여성들은 수출자유지역에서 값싼 노동력으로 일하며 열악한 노동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며 낙인찍히고 있다. 가장 밑바닥의 노동을 하면서 같은 노동을 해도 남성들과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 것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며 주로 미조직된 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여성들이 많다는 것을 UN은 이 회의를 준비하기 위한 자료에서 강조하고 있다. 여성에 관한 인신매매 또한 차별이다. 여성들은 교육의 기회에서 멀고 정보흡수력이 낮은 가운데 이주노동에 대한 수단이 부족하여 인신매매를 당할 염려

가 높다. 특히 성매매 당하는 여성들의 경우 해당 국가의 경찰에 신고를 하여도 오히려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되어 처벌을 받는 것이다. 여성에 대한 차별은 건강권도 위협을 받는다. 특정 집단을 없애 버리려는 계획으로 임신을 금지시키거나 이와 반대로 강간을 하여 우울감을 드러내는 일정집단의 남성들에 의하여 여성의 존엄이 몇중으로 파괴되고 있는 것이다. 여성이 에이즈를 퍼뜨리는 주범으로 간주되면서 돌을 맞고 죽은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무력 충돌이 발생하고 있는 분쟁 지역에 있는 여성들은 집단적인 강간과 성폭력으로 고통당하고 있다. 이들은 사회적으로는 낙인이 찍히고, 죄인 취급을 당한다던가 사회에서 추방되기도 한다.

여성에 대한 차별이 이중적이고 다중적임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 여성의 참여는 저조하기 그지없다. 세계적으로 여성의 의회 점유율은 12%에 머물고 있다. 또한 여성들이 분쟁지역에 있거나 사회가 어지러운 곳에 처한 여성들이 아무런 죄도 없이 법정에서는 일이 비밀비재한 가운데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밖에도 결혼 지참금의 문제, 가족계획으로 출산을 억제시키는 것, 가정 폭력, 성폭력 등등.

성차별을 줄이기 위한 노력에도 역시 교차적인 접근(Intersectional Approach)이 필요하다. 여성의 눈으로 각 나라, 국제사회의 법률과 제도 정책과 활동들에 성차별적인 요인들을 찾아내는 것이다. 여성들에 대한 세분화된 데이터를 모으는 것에서부터 맥락을 헤아려 보다 근원적인 뿌리를 찾아보려는 노력, 시스템의 보완과 마련 등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중심으로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NGO들은 APWLD가 중심이 되어 여성들의 권리를 위한 로비활동을 위한 자료집을 발행하여 그 자료를 중심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모임을 가졌다. 여기서 잠시 8월 29일 참가했던 주제별 소그룹 토론의 자리로 안내한다.

[질문]

- 어떤 내용이 선언과 행동 계획에 꼭 들어가야 하는가?
-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 시민사회의 할 일은 무엇인가?

네덜란드에서 온 여성노동자들은 세계화로 인하여 가장 피해를 당하는 집단이 여성인데 이주여성들의 차별은 가장 극심하다고 보며 각국 정부가 노동관련 조약들을 비준하고 준수해야 함을 다시 강조하여 보자는 주장을 하였다. 특히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UN 조약'은 꼭 비준되도록 노동조합들이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해야 한다는 발언을 오히려 이주노동자 포럼에서보다도 강하게 나왔다. 여성이주노동자들의 노동에 가치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남미에서 온 참가자가 하였는데, 사실 이주노동자들은 이주노동을 하고 있는 그 사회의 공로자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체류의 신분과 관계없이 여성들이 체류국에서 교육과 사회복지의 혜택 보장 등이 동등하게 부여되어야 하나 개별국가들이 힘을 잃어가고 있고 초국적 기업들만 춤을 추니 어찌겠는가 라는 한탄도 나왔다. 특히 초국적 기업들의 횡포중에 소녀들의 노동에 대하여 염려를 하였다. 아동들이 거대기업의 농장이나 공장으로 팔려가고 있는데 소녀들의 인신매매가 심각하며 많은 아동들이 이 과정에서 죽어가고 있다.

농업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들은 잊혀진 여성으로서 반드시 그들의 노동이 가치부여와 함께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 비정규직 여성들의 권리 또한 조직화와 관련지어 보아야 하며 이들의 주변화를 걱정하였다. 신자유주의 민영화로 의료보건 기구들이 제 기능을 상실하여 건강권이 위협받는 것에 대한 성토와 제3세계 빛

을 탐감해야 여성들이 빈곤으로부터 해방된다는 것,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여 인종적인 차별을 하는 것을 막는 것, 빈곤의 원인을 알아내기 위한 노력과 지역기구들이 여성들의 위치에 대하여 새롭게 바라볼 것의 촉구, 언어사용에 있어서 여성화된 말의 사용 등이 주로 언급된 내용들이었다.

'시민사회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는 결론적으로 꾸준한 '모니터링'과 '네트워크 구축'이었다. Intersectionality에 대하여 미국에서 온 제니와 독일의 주재순씨와 토론하면서 한국에 이주노동자로 왔던 찬드라 구릉의 사례가 생각났다.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나서 돈이 떨어져 경찰에 넘겨진 이후 정신병원에 보내져 7년간 살다 고향으로 돌아간 찬드라의 사례를 Intersectional 분석적 접근을 위하여 찬드라가 지닌 요인들을 세분화해보면 아래와 같다.

찬드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별 - 여성 ○국적 - 네팔 ○출신지역 - 포카라 산악지대 김체 ○성 - 구릉 ○피부색 - 블랙 ○언어 - 영어도 한국어도 못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모 - 뚱뚱함 ○나이 - 기혼여성으로 보임 ○신분 - 이주노동자 ○경제력 - 가난함 ○체류자격은 불법적임

이와 같은 모든 요인들이 찬드라를 긴 세월 감옥 같은 병동에 가두는데 영향을 주는 특징들이며 이에 찬드라는 한국에서 혹독한 인종차별을 당했다고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요인이 한데 섞여서 차별의 이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는 이 접근 방식을 위하여서는 좀더 세분화된, 자세한 구별이 필요하다. 여기서 구별이라 함은 통합을 위한 것이다. 그 요인의 특성 하나 하나를 세세하게 살펴보는 것은 통합을 전제로 한 세분화이다. 여성들의 차별에 대한 이러한 접근은 기존의 모든 정책, 제도, 프로그램, 사회적인 활동 등 모든 것에 있어서 여성을 의식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고발하며 고쳐내야 한다.

여성이주노동자들, 여성난민들, 여성 원주민들, 인신매매당하는 여성들, 에이즈 감염여성들, 레즈비언들, 달릿 여성들, 종교적 소수자들, 장애 여성들, 강제 이주당한 여성들, 무력 충돌지역에 있는 여성들의 차별과 억압, 불관용은 다중적인 인종차별을 당하고 있음을 다시 강조하고자 한다.

NGO 선언과 행동계획에는 Gender에 관하여 특별히 눈에 띄는 문장이 들어오지 않는다. 다만 전면을 통하여 Gender perspective로 보려는 노력의 흔적들이 있을 뿐이다. 국내 여성이주노동자들과 국제결혼을 하여 가정을 일구고 있는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늘어나고 있다. WCAR은 이들에게 있어 어떤 의미인가는 앞으로 국내에서의 활동에 달려 있다. 더반은 그런 의미에서 이제부터 시작이다.

주제별 보고 - 카스트제도

달릿의 권리가 인권이다. 2억 6천만명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다.

심태섭(인권운동사랑방)

인종차별 철폐대회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집단 가운데 하나가 바로 달릿(Dalit) 집단이다. 산스크리트어로 '깨어진 민중'(broken people)이란 뜻을 갖고 있는 달릿은 인도와 스리랑카 등 인도 주변 국가에 약 2억 6천만명이 살고 있으며 카스트 제도 속에서 엄청난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 대회를 통해 온 세계에 알려졌다. 달릿이란 말은 달릿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상황을 주체적으로 인식해 붙인 명칭일 뿐 인도에서는 여전히 이들을 '파리안' 또는 '하리잔'이라는 명칭으로 부르고 있다. 특히, 간디가 명명했다고 알려진 '하리잔'이라는 명칭은 '신의 서자(庶子)'라는 뜻으로 달릿들이 처한 상황을 매우 모호하게 규정해 현실을 은폐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는다. 이번 대회에 달릿은 약 3백여명의 참가단이 참석해 각종 세미나와 피해자 증언 집회 등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펴나갔다. 이들이 외쳤던 구호 "Dalit rights is human rights!(달릿의 권리가 인권이다!)"라는 구호는 이번 대회 장소에서 가장 많이 외쳐지고 또한 가장 널리 알려졌던 구호 가운데 하나였다.

달릿은 카스트 제도가 법적으로 소멸했다 하더라도 아직도 살아있는 인도 사회 안에서 불가촉천민(untouchables)으로 다른 사람들과 확연히 구분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 달릿은 엄격히 말해 카스트 제도에 들지 못한 사람들이다. 과거 3천년 전, 아리안족이 인도를 침략했을 때 원거주민으로 살아가던 이들은 줄지에 사회 최하층민으로 몰락했다. 침략민인 아리안족들은 원거주민인 이들을 사회적으로 분리해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달릿을 힌두교라는 종교를 통해 완전히 제거했다. 달릿들을 카스트제도 안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다. 힌두교가 사회 전반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들은 인도 사회 속에서 아무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못해 말 그대로 '열외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 힌두교 행사에 전혀 참가하지 못하는 이들은 쇠고기를 먹지 않는 인도 사람들과 달리 쇠고기도 먹는다. 그렇기 때문인지 몰라도 힌두교에서 소외된 이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사람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인도 내 소수 종교라고 할 수 있는 기독교 신자가 되기도 한다.

불가촉천민(Untouchable people)이란 말 속에는 이들이 종교적으로 '불결하다'는 의미까지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지 못하고 대부분 따로 마을을 꾸려 살고 있다. 자신의 성(姓)에 자신이 속한 마을 이름이 포함돼 있는 인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밝히는 것만으로 그 사람이 '달릿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달릿의 신분으로 인도 주류 사회에 들어가려면 이사를 해야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름을 바꾸는 것은 필수다. 인도 신분제도 속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이들은 과거 3천년 동안 극심한 사회적 멸시와 경제적 착취를 당해왔다.

달릿들이 살고 있는 부락은 대개 달릿이 아닌 사람들이 사는 마을 주변부에 있다. 달릿은 이 달릿이 아닌 사람

들이 사는 마을에서 '주는' 일을 해주며 생활을 영위하게 된다. 보통은 시체를 화장하는 일, 짐승을 죽이는 일, 청소하는 일 등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한다. 여기서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이들에게 정해진 임금이 없다는 것이다. 그냥 일 시킨 사람이 주면 주는 대로 받아야한다. 이러한 불의한 일에 저항했다가는 마을 사람들에게 몰매를 맞거나 집이 불태워지기 십상이다. 달릿들은 노동의 댓가로 식료품이나 물을 받는다고 한다. 노동을 제공한 댓가로 물을 받는 이유는 달릿들이 사는 마을에는 우물을 팔 수가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달릿들이 물을 부정하게 한다'는 종교적 편견까지 깔려있다.

이번 대회에서 가장 눈에 많이 뜬 포스터 중에도 달릿들이 부착한 포스터들은 단연 으뜸에 속하는데 특히, 달릿 희생자들의 모습들이 담긴 포스터는 대회에 참가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데 큰 몫을 했다. 희생자 가운데 한 명은 "상위 집단에 속한 여인과 연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마을 사람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해 사망한 사람의 모습도 있었다. 물론 이 일로 인해 사법처리를 당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했다. 이런 예들은 너무 흔한 것이 현재 달릿들이 처한 인권 상황이었다. 자전거를 훔쳤다고 맞아 죽은 사람, 상위 계급이 탄 차를 비켜주지 않았다고 강간·살해당한 여성 등 차마 입에 담기에도 '끔찍한' 일들이 21세기 인도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인도 정부는 강력하게 정부간 회의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인종차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순전히 거짓이다. 물론 인도 정부를 면면히 살펴보면 그 속에 달릿 출신 관료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불과할 뿐 대부분의 달릿들-무려 2억 6천만명에 달하는-은 여전히 인간이하의 차별을 받으며 살고 있는 엄연한 현실을 부정하는 행위다. 물론 법적으로 인도에서는 달릿에게만 무상으로 불하되는 땅이 있다. 인도가 영국 제국주의로부터 독립 정부를 세울 때 법적으로 규정한 토지다. 하지만 이 법에 의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달릿들은 극히 소수다. 왜냐하면 달릿들은 대부분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한 채로 살아가기 때문에 배운 사람들-카스트제도에 속한 사람들-이 달릿의 땅을 빼앗아가기 때문이다.

세계 인종차별 철폐대회 폐막 이틀을 앞두고 회의장 앞에서 단식농성까지 들어갔던 달릿들로 인해 이를 지켜보던 이들의 마음을 무척이나 무거워 지기도 했다. 이번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달릿들은 1년여 전부터 인도 내 달릿 네트워크는 물론이고, 해외에서 활동 중인 달릿 활동가들까지도 이번 일에 모두 달려들어 로비를 비롯한 전방위적 달릿 운동을 벌였다. 그런데, 회의가 막바지에 이를 때까지 달릿들에 대한 적극적인 정부들의 의지 표명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단식 농성까지 벌였다. 3천년 동안의 침묵을 깨고 나온 이들에게 세계 여러 나라들의 정부들이 너무나 비겁하게 행동했다고 밖에는 볼 수 없다. 이번 대회에서 노예제도·식민주의·팔레스타인-이스라엘 문제 등과 함께 가장 뜨거운 쟁점이었던 달릿 문제는 정부간 회의에서 '직업과 신분에 따른 차별'이라는 다소 광의의 개념으로 다루어졌다. 일본의 부락주민, 유럽의 로마(집시) 등과 같은 사람들이 이 범주에 속하는 집단으로 정부간 회의 이전 공식 행사였던 청년정상회의, NGO포럼 등에서 비교적 큰 주제로 다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문구는 최종 '더반선언'에는 채택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달릿 문제에 대해선 인도 정부가 강력한 반발하여 채택되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이런 결과물에 대해 달릿들은 "자신들에 대한 문제가 세계 인종차별 철폐대회에서 중점적으로 부각됐다는 사실 자체가 인도 정부에 대한 판정승이었다"고 평가하는 분위기다. 이후, 달릿 문제는 국제적 연대를 통하여 더욱 널리 알려지고 그 운동에 가속이 붙을 전망이다.

주제별 보고 - 노동조합

노동조합, 인종차별과 어떻게 싸울 것인가.

ICFTU의 활동과 대응전략을 중심으로

이윤주 (서울경인지역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

序. 노동조합도 이런 일에 관심있어 하는구나!

NGO행사장 건너편에는 참가자들의 점심식사를 해결하기 위한 식당과 각 참여 단체들의 선전을 위한 부스가 설치되어 있었다. NGO대회 초반에 이 전시관을 둘러 보던 중 ICFTU부스를 발견하였다. 노동조합이 인종차별 철폐대회에 왔다는 것이 한국적 경험에 묶여 있던 본인에게는 매우 반갑기도 하고 의아한 것이기도 하였다. 전시관의 부스들 중에는 인종차별 반대 투쟁과 별 연관성없는 활동을 하면서도 조직의 홍보를 위하여 참가한 단위도 몇몇 있었기에, 국제조직은 다르구나 하는 맘으로 ICFTU부스로 다가갔다. 부스를 지키던 덴마크 여성 노조 한 간부는 한국의 한 노조에서 왔고 민주노총 소속 조합이라고 하자, 지난 해 회의 차 한국을 방문했었다며 몇몇 사람의 안부를 물어왔다.

전혀 뜻밖의 발견, 노동조합이 보다 조직적으로 그리고 공식적으로 인종차별 반대 투쟁이 전개되고 있었다는 것은 매우 반가운 발견이었다. 한국의 민주노동운동 속에서 인종차별 반대투쟁은 커녕 이주노동자의 자리를 찾기도 어려운 실정과, 주로 연대해 온 아시아 지역 이주노동운동 판에서 노동조합의 존재를 발견하기 어려웠던 경험으로 인해 '인종차별 철폐대회에서의 노동조합, 그리고 그들의 준비'는 참으로 신선하였다. 유럽이나 아메리카의 노동조합에서는 부족하지만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화두에 대하여 나는 진정 존스러웠다.

1. ICFTU - '노동조합은 인종주의와 외국인혐오증에 대하여 NO라고 말해야 한다'

"인종주의적 행태들은 노동조합운동을 지탱하는 자유와 연대와 사회적 정의의 가치를 뒤흔드는 것이기에 단호하고도 큰 목소리로 인종주의 철폐 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ICFTU(국제 자유노련)는 이번 인종차별 철폐대회를 조직적으로 준비하여 참가하였다.

ICFTU의 빌 조단 사무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인종주의의 새로운 형태는 있는가?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어떻게 기본적인 보장들이 존중받도록 할 것인가? 어떻게 UN이 더 많은 효과적인 일들을 하도록 만들 것인가?'의 지점이 이번 3차 인종차별 철폐대회의 핵심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ICFTU의 행보는 크게 두가지로 보여졌다.

첫째는 무엇보다도 효과적인 문구를 선언문과 행동 계획에 넣기 위한 준비토론과 로비활동이었다. 팔레스타인 문제나 민영화 반대, 외채탕감을 아우르는 전 영역에 걸친 요구안을 가진 ICFTU안은 NGO선언문과 행동계획에 그리고 나아가 정부 간 회의에서 결정하는 더반 선언문과 행동계획에 삽입되어지는 것을 목표로 정리되었다. 문장 하나에 많은 희비가 엇갈리는 작업이 이 일을 위해, 각 대륙별 회의나 국가별 회의에서부터 치열한 로비(협상)가 펼쳐졌다. 유럽의 몇 나라나 미국, 캐나다에서는 노동조합의 대표가 정부간 회의에서 영향력을

1) 민주노총도 가입하여 있는 ICFTU는, 148개국의 221개의 전국연맹이 가입되어 1억 5천 6백만 조합원을 가진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연맹이다.

행사하기 위하여 정부 대표단(GO Delegation)에 1-2인 이상 참가하기도 하였다.

둘째는 가입조직들의 교류와 경험의 공유였다. ICFTU는 NGO대회 기간 중 두 개의 토론회를 개최하였는데, 모두 가입조직들의 사례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애초의 목적은 인종주의와 싸워 나가기 위한 노동조합들의 과제와 전략을 공유하는 것인 것 같았지만, 사전준비 단계부터 공유해 온 것이 부족한 채 전 세계의 노조가 모여서 전략을 짚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부족하나마 인종차별에 맞선 노동조합의 과제는 무엇인가하는 지점을 좁혀내어 경험을 공유하고 발언한 것은, 차후에 각각 조직이 과제를 떠안은 것이나 다름없기에 의미있는 일이라고 여겨진다. 한편, 남아공 노총인 코사투(COSATU)가 현재 주력투쟁하고 있는 '민영화 반대' 전국 동시다발 집회에 참가하기도 하고, 코사투 산하 각 연맹의 안내로 각 현장방문 프로그램도 가질 수 있었다.

다만, 위의 준비과정이 몇 개 노조와 아메리카 대륙으로 편중되어 온 듯한 아쉬움이 있었다. 운동적 토대와 관심사, 재정 등의 이유 외에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미국의 산별총연맹인 AFL-CIO와 캐나다 노총인 CLC 그리고 서유럽의 몇몇 노조들 중심으로 내용을 수립하는 준비회의를 가져 온 것으로 생각된다. ICFTU가 지역적 또는 국제적 회의를 거치면서 준비해 온 선언문을 위한 문구들과 행동계획들에 대하여 남아공 코사투나 브라질 CUT에서는 ICFTU 공식입장에 대한 설명과 공유를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강력하게 실무진을 비판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 급하게 ICFTU안에 대한 설명회가 잡히기도 했었는데, 워낙 강력했던 행사장 보안경비들이 이른 시간을 핑계로 약속장소로 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아, 참석자들은 길거리에 서서 ICFTU 한 간부의 변명만 한동안 들어야 했다.

2. 각 토론회등 ICFTU 행사에 참석한 노조들

전체 대회엔 아래보다 더 많은 참석 노조들이 있을 것이다. 한번이라도 소개가 되고 다행히 알아들을 수 있었던 노조들은 다음과 같다. 이중 캐나다와 미국은 노조를 비롯한 NGO참가단이 1-200 규모였고 연맹 산하 노조까지 대거 참가하였다. 캐나다 금속여성노조는 광산업종 여성이 많은 노조인데 광부 작업복을 입은 노동자들이 활짝 웃으며 인종주의 종식을 외치는 포스터를 비롯하여 손바닥 스티커, 전단 등 활발한 선전활동을 보여 주었다. 유럽과 캐나다는 모든 선전물에 있어 영문판과 불어판 또는 스페인판을 반드시 준비하는 모습을 보였다.

: 캐나다 CLC(Canada Labour Congress), 미국 AFL-CIO, 남아공 COSATU, 덴마크 여성노조 WWU, 스리랑카 한 노조 'Migrant workers from India', 동유럽 연합노조, 뉴질랜드 노총, 스웨덴 노총 SCTU, 브라질 노총 CUT, 일본노총 랭고, 그리고 프랑스와 이탈리아, 자마이카, 트리니다드의 노총 또는 노조(불어 또는 스페인어로 말해 모르겠음), 평등노조 이주지부 등등

3. [토론 첫번째, 8/28] 노동조합은 조직 내의 인종주의에 맞서 싸우고 있다.

• CLC(캐나다)

- 94년 노총 내에 반인종주의 특별위원회 구성; 특위에서는 유색인종 조합원들의 고충과 의견을 청취하고 교육하는 토론을 진행하며 이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한다. 이 보고서는 전체 조합원들이 공유하고 토론하는 교육자료로 사용된다.

- 특위의 활동을 바탕으로 노총 내에 반인종주의 부서를 신설하였고, 유색인종에게 노조 간부 자리를 배치하는 특별할당제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각 유색인종 조합원이 많은 노조나 모임에 대한 재정 후원을 하고, 전체 조합원 교육에 인종교육을 포함하고 있다.

• Migrant workers from India(스리랑카)

- 62년에서야 스리랑카 노동자들은 시민권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인도출신(인도계) 노동자들은 시민권을 얻을 수 없었다. 인도계 노동자의 자녀들은 교육권과 투표권도 가질 수 없었다. 이런 사회적 차별을 바탕으로 인도계 노동자들의 조직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 이러한 투쟁의 결과로 86년에 인도계 노동자들도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인도계에 대한 교육기회 부족과 식민주의 교육의 잔재가 심각하다.

• 동유럽 연합노조 대표(전 크로아티아 TU 간부)

- 시작하기에 앞서, NGO대회 개막식 연설들을 비판함. "인생의 많은 부분이 노동과 연관되어 있는데, '노동' '현장' '노동자'란 단어는 한마디도 들을 수 없었다."

- 인종문제를 흑백의 문제로만 보지 말고, 보스니아 지역에서 일어났고 일어나고 있는 인종청소 및 인종차별도 인종문제로 인식해달라.

- 전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노조 조직화에 매우 어려움이 많다. ICFTU가 들어와 조직화를 본격적으로 함으로써 많은 노조들이 만들어졌고, ICFTU 가맹 조건으로 여성국을 두어야 한다는 하는 조건들은 좋은 효과를 가져왔다. 마찬가지로 ICFTU가 가맹 조건에 "인종차별 해소"를 위한 조건들을 보완하면 더욱 좋을 것이다. 노조간의 국제연대를 하면서 상호 국제적인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 노조가 앞장서 보스니아 및 크로아티아 난민에 대한 구호사업에 나섰다. 인종갈등을 줄이기 위해 일부러 세르비아계인들을 구호활동에 앞장서게 하였다.³⁾ 이런 모험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ICFTU를 비롯한 국제 연대 감시단들의 활동이 있었기 때문이다.

- 민족주의 국가에 대한 경고 캠페인도 노조 활동의 일환이다. 이를 위한 네트워크 형성을 하였으면 한다. 인종주의는 노동계급에 치명적인 해를 입힌다. 25년간 노동운동을 하였지만 처음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른 것이 없어 안타깝다.

• 질의와 응답들

① WWU(덴마크 여성노조): 인종차별 철폐대회가 의미는 있지만 전격적으로 참여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자본주의하에서 인종문제는 영속하기 때문에 성, 인종 등의 이슈는 계속 제기될 것이다. 다양한 인종문제와 벌어지는 투쟁들을 배우고 돌아가 실천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 특히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한 관심사를 더욱 끌어올려야 한다.

2) 스리랑카는 16세기부터 포르투갈, 네델란드, 영국의 식민지배를 차례로 받아왔다. 1948년 독립하고 불교를 중심으로 한 대통령제 정부를 수립하였다.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타밀족과의 내전뿐만 아니라 영국의 식민지 시절 이주한 인도출신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같은 아리안 족이지만 아마도 불교와 힌두교의 갈등이 있지 않은가 한다.

3) 보스니아내전(1992~95년)에서 세르비아계는 보스니아(보스니아 지역의 회교도들)와 크로아티아인들을 집단수용소에 가둔 채 고문과 학살을 자행했고, 많은 여성들이 조직적 강간을 당했다.

②AFL-CIO(미국) : 인종차별을 자행하는 조합원들에 대하여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CLC(캐나다) : 단협 시 사용주에게 이야기하고 징계할 것 등의 협조를 구한다. 이것은 직장 내의 문제이니 직장 내에서 해결하도록 유도한다.

③COSATU(남아공) : 반인종주의 선언문과 행동계획을 만들었다면서 왜 이 토론장에 가져오지 않았나? 그것을 토론하려고 한 것 아니었나, 같이 평가해야 한다. / 이번 대회의 참가 목적이 무엇인가? NGO포럼 선언문과 행동계획에 우리(ICFTU)의 입장을 인입하는 것이 목적인가 아니면 전체 노동운동 속에서 인종주의를 척결하기 위한 노력을 찾는 것이 목적인가? 노조는 NGO와 다른데 노조의 입장을 어떻게 세우고 제시할 것인가. / ICFTU내 노조간(국가별) 불평등의 문제에 대하여서도 이야기 하여야 한다.

→ICFTU : 우선 우리가 이제까지 토론한 결과물을 가지고 오지 않은 것은 사과한다. 전시관의 우리 부스에 있으니 참고 바란다. 그런데 이미 우리의 선언문과 행동계획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 위한 회의가 이 대회 전에 몇 차례 있었다.(설왕설래 끝에 결국은 다음날 아침에 설명회를 갖기로 함) / 동지가 말한 모든 점이 소중하지만, 선언문과 행동계획의 우리의 의견을 넣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중요한 참가목적 중에 하나이다. 선언문과 행동계획 초안을 수정하는 것은 분명한 우리의 목표이다.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2년 전부터 제네바에서 열린 사전 준비회의에도 참가하고, 올 초 캐나다에서 ICFTU차원의 준비회의를 갖기도 하였다.

→CLC : 노조 내의 인종차별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에 대한 입장도 노조진영이 밝혀야 한다. 예를들면 아프리카 노예제에 대한 미국의 보상과 배상문제 등. (정확하게 시작시간과 끝나는 시간을 지키는 사람들이었다. 답변과 그에 따른 토론이 부족했지만, 시간이 되니 더 이상의 토론은 없었다. 아시아 지역 회의와 다른 또 하나의 측면을 보았다)

4. [토론 두번째, 8/29] 다양성 속의 평등 구현을 통한 우리 조직의 변모

• 사례 1; AFL-CIO(미국)

1) 노조 내 인종주의를 해소하기 위한 전략

지난 6년 간 노조 내에서 특히 유색인종과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노력을 전개하여 왔다. 또한 유색인종 등 소외된 노동자들을 조직화하기 위한 특별 전략을 추진하여왔다. 특별 전략에 의해 구성된 공동체들(Constituency Groups : A Bridge to Communities)과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 CBTU ; 흑인(Coalition of Black Trade Unionists)을 주 대상으로 조직화와 교육 진행
- CLWE ; 여성을 주 대상으로 조직화와 교육 진행
- APALA ; 동양계 이민자(Asia Pacific American alliance)를 주 대상으로 조직화와 교육 진행
- PAW ; 동성애자(Pride at work)를 주 대상으로 조직화와 교육 진행
- FNNA ; 인디언(First nation native America)를 주 대상으로 조직화와 교육 진행
- LCLAA ; 남미계(Labor Council for Latin American Advancement)를 주 대상으로 조직화와 교육 진행
- POD ; 장애인(People of disability) 주 대상으로 조직화와 교육 진행

이들은 AFL-CIO에 대한 투표권이 없는 정식 조합원이 아니다. 이들의 공동체는 AFL-CIO가 조직적으로 물질적으로 후원하는 연대조직으로 존재한다.

2) 차별을 줄이기 위한 노력

소수자 노동자들이 노조의결체계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회의는 전원 참가를 유도하고 있고, 노조 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후원한다. 그리고 간부 중에서도 소수자 노동자들이 상층에 배치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유도한다. 대의원 비례제(Proportional Representation)를 통해 지도부에 유색인종과 여성을 인입시키고 있다. 그리고 95년에 여성과 이주노동자(특히 아시아와 남미계)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중앙위원회(Executive Council)의 규모를 확장하였다. 만일 백인이 위원장이고 유색인종이 부위원장인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중앙위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사실 이로인한 갈등도 많이있다. 그래서 구성원의 지형에 걸맞는 지도자가 선출되어야 한다고 본다. 즉 유색인종이 많은 노조는 유색인종이 위원장이 되어야 하는데 많이 그러하지 못하다.(Leadership must reflect the constituency) 간부 중에 유색인종이 한두명 있다고 해서 유색인종을 포괄하는 노조로 자랑하는 곳도 있는데 이를 경계하고 있다.

• 사례 2; 덴마크여성노조(WWU; Women Workers Union)

1) 소개

덴마크에서 유일한 여성 조직화 노조로서 조합원은 1만명이다. 주로 청소업 노동자와 이주노동자들이 조합원이다. 서유럽에서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강화되고 있는 사회적 추세라서 일반적으로 조합원 감소추세인데 반해 여성노조는 지난 5년간 급속히 증가추세에 있다.

전에는 조합원들이 무슨 고민을 하는지 몰랐으나, 저소득 저교육층의 조합원들이 현장에서 가진 소외의식을 보고 많이 놀란 적이 있다. 조합원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노력 중으로, 다양한 소모임과 조합원 분반토론을 활성화하여 조합원 교육과 조합원과의 소통에 많이 주력하고 있다. 조합원들이 자신들의 목소리가 노조에 반영되고 자신들에 활동이 노조에 기여함을 느끼는 순간 노조가 더욱 확대되고 강화되는 것 같다.

2) 조합원 조직화와 교육

- 이주노동자와 청소업종 노동자를 뭉뚱그려 조직화해왔는데, 교육과 조직화에 있어 구별하여 세분화하는 기술을 개발 중에 있다.
- 조합원의 참여를 확대하지 못했던 지난날에 대한 반성으로 개발한 방법은, 조합원 중 특기가 있는 사람에게 특기를 살릴 수 있는 임무를 부여하여 참여도를 높이는 것과 조합원 소모임(Alternative meeting)을 활발히 가지고 총회에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다.
- 또한 이주노동자에 대하여서, 덴마크 이주 전과 후, 노조 가입 후의 삶을 나누어 비교하여보는 토론을 하는데 1년에 5회씩 큰 모임으로 갖는다. 조합원에게도 좋은 교육의 장이 되지만 노조 입장에서도 조합원과 긴밀해 질 수 있는 계기가 된다.
- 대의원과 노동자가 함께 사업을 만들어 가는 것도 중요한 방안이다.

• 사례 3; 스웨덴 노총(SCTU)

1) 스웨덴 사회에 대한 소개

스웨덴은 작은 나라이지만 노동조합의 힘이 매우 센 곳이다. 정치세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4) 18개 산하 연맹에 2천 1백만 조합원이 있다. 스웨덴 민중은 평등을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므로 이주노동자에

4) 100년간 스웨덴의 제 1당인 SDP당(Social Democratic Party)과 노동조합의 연대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발언자는 지금 노총의 국제연대부장이지만 직전에는 스톡홀름 부시장이었다고 한다.

대하여서도 평등한 권리가 있다고 본다.(미국처럼 Immigrant worker, 또는 독일처럼 Guest Worker로 차등화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여전히 인종문제로 많은 갈등을 겪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SCTU가 대안을 내올 것을 요구받고 있다.

2) 이주노동자의 상황과 대안

일반적으로 이주노동자가 스웨덴 출신의 노동자보다 교육수준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직업을 가지게 되는 것에 대한 차별과 정규직은 스웨덴 출신 노동자가 많은 반면 비정규직엔 이주노동자가 많은 것과 같은 차별이 있다. 이제까지 지자체에서 이주노동자와의 평등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실행하여왔는데 지자체의 의식보다 노조의 의식과 행동이 오히려 더 낙후되었었다. 노조는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지자체의 것으로 인식해왔다. 그러나 최근 노조도 변화하고 대안을 찾고 있다. 여성문제도 노조차원에서 2년의 준비를 거친 후 사회화 시켰던 것처럼 우선 노조 안에서부터 시작하려고 한다. 조합원의 40%가 이주노동자의 자녀인 점도 직시하고 있다.

SCTU는 고용주 교육과 대중 교육과 같은 대중화 정책(Main Streaming)과 사회적 쟁점화를 시켜내는 이슈 심화정책(Special Rising)의 두가지 기조로 접근하고 있다. 이를 위해 SCTU가 아닌 다른 CTU에 가입한 이주노동자들이 모두 함께 모이는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있는 이주노동자 조합원 모임'(Trade Union Immigrants)이 있는데, 이 단체와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3) 조합 내의 민주성과 조합원 단련

AFL-CIO와 같이 이주노동자 간부 쿼터를 정해 놓은 등의 방식은 상명하달식(Topdown style)으로 보인다. 민주성과 조합원의 리더십을 키우기 위하여서는 노조 내에서의 일상적인 훈련과 단련이 필요하다.

● 격론 ; 민주적인 것과 형식적인 것, 누구의 방법론이 옳은가, 혹은 진실은?

(SCTU이 상명하달식(Topdown style)이란 표현을 들고나오면서 AFL-CIO의 조직방식을 비판하자 이에 대한 AFL-CIO의 반론과 반론에 반론, 그리고 주장들이 열기를 띄었다.)

①AFL-CIO : 간부 선출과 배치에 소수자의 자리를 정해 놓는 방식이 상명하달식의 방법론이라는 비난에 대하여 반드시 할 말이 있다. "In a race Life, Those who start behind"라는 말이 있다. 인생은 앞서 출발한 사람을 능가할 수 없다. 방법은 앞서가는 사람이 천천히 가는 것뿐이다. 백인들의 세습에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 또한 노조 상층에서부터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

②프랑스 : 미국의 예를 들으니 목적의식적인 활동가가 다만 백인이라는 이유로 뒷자리로 물러나는 것이 과연 올바른가 고민된다.

→AFL-CIO : AFL-CIO가 의무적으로 유색 및 여성을 대의원으로 세워내라고 했을 때,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여태껏 세워내지 않았을 뿐이다.

5) 각 노총들의 발언은 사실 인종차별에 무력한 현실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자성과 대안보다는 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을 나열하며 과시하는 분위기로 진행되었다. 각 국의 사례는 꼼꼼이 그 사회의 사회적 상황 등과 함께 검토하고 1장 1단의 갖는 측면을 분석하여야 의미가 있을 것이다.

③CLC : AFL-CIO는 어떤 방식으로 이주노동자 조직을 지원하고 활동가 양성을 지원하는가?

→AFL-CIO : 우리가 각 공동체에 후원하는 방식은, 활동가(Staff), 자금, 교육과 단련의 기회마련, 각 조직 내부의 교육체계 마련 지원 등이다. 이주노동자 지도자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용기를 북돋기 위하여 장학금제도(?, Scholarship)를 운영하고 노조 인턴십제도를 운영한다.

④* : SCTU는 Main Streaming정책에 대하여 좀 더 설명해 달라.

→SCTU : 스웨덴을 비롯한 노르딕반도의 국가들은 노동조합의 힘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사용자에 대한 교육을 더욱 강하게 하여야 한다. 예를들면 이주노동자에 대한 고용기피(고용차별)를 방지하는 것 등이다. 사회복지가 활성화되어 있어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사회적 재분배에 대하여서도 사회적으로 강조되는 분위기이다.

⑤CLC : 노조 내의 체계 즉 형식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다양성을 인정한 속에서 노조 안으로부터 변화가 도출되어야 한다.

⑥프랑스 : AFL-CIO는 이번 대회의 쟁점인 '과거 식민지배에 대한 보상 및 배상문제에 대한 입장이 무언가. 또한 이주(이민)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Land ownership"⁶⁾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는 보지만 방법론에 대하여서는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 소농이 기업농에게 당할 수 없는 것과 같다. 어쨌든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민자가 없는 노조는 망할 수도 있다. 이민 자체를 반대할 수는 없지만 누굴, 얼마나 이민을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다.

⑦CUT(브라질) : 브라질의 50% 정도가 문맹이다. 이는 인종차별에 의한 결과이다. 노조지도자가 인종차별을 반대한다고 할 때 그의 눈을 가만히 응시하면 거짓말임을 알 수 있다. 많은 노조가 인종차별에 대한 실천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

⑧MWI(스리랑카) : 우리는 이주노동자들의 노조로서 노조 조직화조차 탄압당하고 있다.

⑨평등노조 이주지부 : 노동조합 내의 주류 노동자와 소수자 노동자간의 갈등과 해소 노력에 대한 경험은 유익한 것이었으나, 정작 이주노동자 내의 또는 유색인종 등 소수자 내에서의 인종차별 해소와 계급적 단결에 대한 논의는 없었던 것 같다.

⑩이탈리아 : 이주노동자의 가족이 함께 살 권리(가족 통합)문제에 있어 유럽이 후퇴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다.

⑪Rengo(일본) : 350만명이 정리해고되고, 올해들어 3만명의 중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일본은 지금 정리해고와 구조조정, 비정규직화가 큰 문제이다. / 교육은 누구의 관점으로 하는가가 매우 중요한 것 같다.

6) 아마도 토지반환요구를 말하는 듯하다. 유럽에게 식민지배를 당했던 아프리카 원주민의 후손들과 아메리카 대륙의 쫓겨나고 학살당한 원주민과 그의 후손들이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면 알래스카 원주민, 아메리카 인디언 원주민 등)

5. 더반 선언에 대한 ICFTU의 주요 의제들

ICFTU는 제네바에서 몇차례 열린 NGO 국제 준비회의에 참가하는 한편, 올해 5월 캐나다에서 "인종주의와 외국인혐오증에 대한 노동조합의 투쟁"을 주제로 국제 워크숍을 가지고 노동진영의 입장을 정리한 바 있다. ICFTU 공식 자료집에 수록된 이 회의 보고를 기초로 몇가지 정리한다. (그러나 이 글을 정리하는 시점까지 정부간 회의의 최종 선언문을 구할 수 없었으므로, 노동진영이 제기한 주장이 어떻게 마지막 타결되었는지 알지 못하겠다.)

ICFTU가 선정한 주요 주장들 중 몇가지를 살펴보면,

· 세계화와 관련하여 ;

- 원주민과 유색인종, 이주노동자, 난민, 소수 민족의 세계화와의 충돌속에서, '인종과 가난' '이민과 이동' '경제적 삶에 의한 차별' '고용차별' '하층경제의 저임금, 불안정고용, 위험한 작업' '에이즈' 등의 사안을 다룰 것과 민영화와 같은 구조조정, 다국적 기업의 역할과 영향력 증대, 빚 경감의 문제를 반드시 다루고, WTO와 특히 IMF와 World Bank가 인종주의와 차별적 조치들을 줄이기 위해 ILO에 준하는 노동자 기본권을 준수할 수 있도록 WTO가 구조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역사속의 피억압 민중들의 명예회복을 위하여서는, 인종주의의 깊은 뿌리와 오늘날의 결과를 살피고 인종주의와 인종차별과 외국인혐오증의 근원적 원천인 식민주의, 노예제 및 모든 형태의 예속이 가져온 희생자와 그의 후손들과 원주민들의 경제적 정치적 손실에 대하여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다시는 이런 형태의 착취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것, 배상은 반드시 정치적이고 계획적이며 피해국이 선택한 수단으로 이루어질 것을 촉구하였다.

- 군사지원(협력)과 그들의 임무는 민족 분쟁을 더욱 가속화시킴을 분명히 할 것을 요구하였다.

· 법률제정과 관련하여 ;

- 인권옹호와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국제법(특히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UN 국제협약'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UN국제협약'뿐만 아니라 ILO C87조약과 ILO C98조약(단결할 권리와 단체협상의 권리), ILO C29조약과 ILO C105조약(강제노동 금지), ILO C100조약(평등한 임금), ILO C111조약(고용차별 관련), ILO C138조약과 ILO C182조약(아동노동 관련), ILO C169조약(원주민과 부족민에 대한 협정), ILO C143조약(이주노동자 협정) 및 인권과 기본적인 원칙들과 세부사항들을 비준하고, 적용하고 준수할 것을 촉구하며,

- 보다 효과적인 정책마련과 전략입안을 위하여 고용, 사회적 제공과 서비스, 주거, 교육, 건강 등에 대한 자료(data)를 모아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 인종과 증오적 범죄에 대한 조사연구를 진행하고, 특별히 종교적 불관용에 대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 노동조합의 역할에 대하여서는 ;

- 일하는 여성과 남성의 민주적이고 책임력있는 노조로서 가치있는 노조의 역할을 인식하고, 특히 모든 노동자에 대한 대우와 기회의 평등성에 주목하면서 더반 행동계획을 효과적으로 실천하고 견제하여야 할 것을 강조하면서,

- 현장, 노동시장, 공동체와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인종주의와 차별에 맞서 싸워야 함을 노동조합의 특별한 과제로 부여하였다.

· 후속작업을 위하여 ;

- 더반 행동계획 실천에 있어 모니터링과 점검을 위한 메카니즘을 국가적으로 국제적으로도 구축하여야 하고, 노동조합은 반드시 모니터링 구조의 골간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6. 노동조합의 인종주의와 외국인혐오증 반대를 위한 행동계획

- '노동조합의 행동계획' 전문(全文) 수록

: 이 행동계획은 ICFTU 가입조직들에게 인종차별과 맞선 노조의 대외적 투쟁 뿐 만 아니라 노조 내에서의 투쟁을 강제하고 견인하는 근거로 작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사회적 역사적 배경의 차이로 인해 유럽 및 아메리카 지역의 고민과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의 고민은 많이 다르다. 준비과정에서부터 아메리카와 유럽 중심이었으므로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의 노조가 직면한 문제들이 행동계획 속에 시원히 담겨있지는 않다. 외국인에 대한 고용기피로 인한 이주노동자 실업률 증가라든가, 이주노동자의 정치적 권리의 획득의 문제 등과 같이, 우리로서는 현재의 실천적 투쟁을 만들기 어려운 지점들이 있지만 선협적인 투쟁으로 긍정적인 선례를 남긴다면 우리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 행동계획은 우리에게 인종차별과 노조의 역할에 대하여 시각을 새로이 갖게 하기도 하고, 구체적으로 해야 할 것을 지적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유익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구지 우리의 상급조직이 가입해 있는 조직 즉 ICFTU가 우리의 조직이므로 이 행동계획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주장할 계획은 없지만, 적어도 우리의 고민과 행동, 그리고 이주노동자 및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연대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획득하는 데 여러 동지들이 의미를 가졌으면 한다.

인종주의와 외국인혐오증 반대! 노동조합의 행동계획; Action Plan of Trade Unions

기본 원칙

아래의 기본적인 원칙들은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증 및 관련된 불관용에 맞서는 노동조합의 투쟁의 근간이다.

- 노동조합은 근본적인 원칙을 명제로 인종주의와 외국인혐오증에 맞서 서있다. 인권과 평등과 다양성의 축진은 매일 모두를 위해 자유와 평등과 정의를 위해 싸우는 노동조합의 가장 소중한 부분이다.
- 노동조합은 정책, 계획과 행동들의 발전과 실행 속에서 명료하게 반인종주의자로 되어간다.
- 노동조합은 당면한 정책들, 계획들, 활동들 및 상처받기 쉬운 그룹(여성, 청소년, 장애인)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면서, 이의 발전과 실행과 감시의 과정 속에서 인종주의와 외국인혐오증, 민족차별에 영향을 받은 이들에 의해 부여받은 중심적인 역할을 인식하고 있다.
- 노동조합은 인종주의와 외국인혐오증과의 투쟁 속에서 정책, 계획과 행동들의 발전시켜가고 실행시키는 과정에서 여성의 시각을 결합시키는 성 균형적 통합의 결정적인 중대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여성에 대한 종합적인 차별 이슈를 부각하려는 목적에 입각하여 인식하고 있다.

제 17차 ICFTU 세계 대회(더반, 남아공, 2000. 4)는 노동조합이 모든 형식과 형태, 장소에서 인종주의와 외국인혐오증에 대한 전쟁에 견고하게 주력하여야 함을 다시 확인하였다. 대회 참가단은 148개국 및 자치정부(territories)로부터 가입된 221개의 전국단위 노조의 1억 5천 6백만 여성과 남성 조합원의 대표자였다. 대회의 결의에 따라, '인종주의와 외국인혐오증에 투쟁하는 노동조합' 국제 워크샵을(아일랜드, 캐나다, 2001. 5) 개최하고, 보다 효과적인 우리 공동체, 노동시장, 현장 및 노동조합에서의 인종주의와 외국인혐오증과의 투쟁을 위한 노동조합의 행동계획을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차원의 범주로 작성하게 되었다.

행 동 계 획

I 우리 공동체와 사회 내에서의 인종주의와 외국인혐오증과의 전쟁

■국가적 차원

1) 노동조합은 다음의 사항을 국가에 촉구하여야 한다 :

-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UN협약(65)을 비준하고 실행할 것
- 사회적 서비스와 건강, 주거, 교육 등에 관한 보장을 적용하는 데 주목하기 위하여 피부색, 소수 민족, 원주민,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평등한 대우를 준수할 것
- 이주민과 난민의 정치적 권리를 승인할 것
- 이주민, 난민, 특별히 주목받아야 할 상황의 여성 등에 대하여 교육 수당과 함께 언어 교육을 제공할 것
- 유색인종, 원주민을 시민사회, 공공서비스, 사법부에서 고위직으로 임명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정할 것

것.

노동조합은 전체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공공연한 인종주의와 인종차별, 외국인혐오증적인 사악한 충돌 속에서 민감하게 명확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미디어에 요청하여야 한다.

2) 노동조합은 다음의 사항을 위해 전념하여야 한다:

- 인종주의, 외국인혐오증과 종교적 불관용의 이슈에 대한 인식 캠페인을 데모와 대중 집회와 회의들과 언론과 미디어 등등을 통해 수행할 것, 동시에 이주민과 유색인종, 원주민 및 소수민족이 우리의 문화를 풍부히 하고 우리의 경제를 강하게 하며 사회에 결정적으로 기여하는 지점에 대한 공공의 인식을 상승시킬 것
- 여성에 대한 특별하고도 종합적인 차별을 참작하여, 이주민과 소수민족, 유색인종과 원주민들을 위한 활동적인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는 단체들과의 네트워킹을 할 것
- 반인종주의자 전망을 확보하는 교육구조 개선과 교과서 개정, 교육자료를 재구축하는 적극적인 캠페인을 할 것과 다른 문화의 진가를 인정하고 이해를 증진시킬 것

■지역적, 국제적 차원

1) ICFTU, ITSs와 그들의 지역 조직들은 해야만 한다. :

- 가입조직들 간에 우리의 사회와 공동체에서 인종주의와 전쟁하기 위한 좋은 실천들의 교류를 용이하게 할 것
- 수감자의 사회적 권리를 보호하고 전 세계 여러 곳에서 유색인종에게 가해지는 구조적인 구금(Prison system)이 자행되는 것을 참작하여 촉구할 것

II 노동시장과 현장에서의 인종주의 및 외국인혐오증과의 전쟁

■국가적 차원

1) 노동조합은 다음의 사항을 국가에 촉구하여야 한다 :

-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를 위한 UN협약, ILO의 핵심 조약들 특히 고용차별에 관한 C111조약, 평등한 임금에 관한 C100조약, 원주민과 부족민에 관한 C169조약, 이주민 고용에 관한 C97조약, 열악한 상태의 이주와 이주노동자에 대한 기회와 대우에서의 평등성 촉진에 관한 C143조약 등, 및 노동의 소중함(Fundamental Principles)과 권리를 담은 ILO 선언과 그 조항들을 존중하고 발전시켜낼 것
- 가입국가의 의무로써 국내법의 확실한 법률제정 활동과 차별을 종식시키기 위한 계획들, 평등한 기회 창출의 증대, 이주민, 유색노동자, 원주민과 소수민족에 대한 대우를 위하여 (국제법들의) 소개와 실행을 할 것
- 노동자와 고용주에게 인종에 대한 인식을 위한 과정을 포함한, 노동시장과 현장에서의 인종주의와의 전쟁을 위한 캠페인과 계획들을 위해서 활동적인 장려와 제공 활동들을 할 것
- 새로운 입법과 계획들을 위한 구조를 갖추기 위하여 강력한 모니터링과 강제를 보장할 것
- 노동시장에서의 인종주의와의 충돌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국가적 감시기관을 설립하고, 노동자와 그들의 노조는 물론 고용주와 동료들에게까지 모범적인 실천 사례들을 확산하고 정기적인 보고서를 제출할 것

2) 노동조합은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하여야 한다 :

- 인종주의에 맞서 차별을 종식하고,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이주민, 유색노동자, 원주민과 소수민족에 대한 대우를 겨냥하여 단체협상안에 조항들을 삽입시키는 협상을 할 것 ;
 - ⇒ 직업 교육과 긴 기간의 훈련에 대한 제공
 - ⇒ 언어훈련을 위하여 현장 및 조업의 중단 인정
 - ⇒ 긍정적인(affirmative) 활동 수단에 대한 장려
 - ⇒ 종교 및 문화적인 이유에 의한 현장 이탈(조업 중단) 인정
 - ⇒ 인종주의에 의한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에 대한 교섭에서의 명확한 노사분규 조정행위
 - ⇒ 모든 노동자와 집행간부 및 관리자까지를 포함한 반인종주의 및 다문화(cross-culture) 교육과 훈련
- 외국의 자격증명서와 면허를 승인하도록 하는 일과 다양한 직업적 지위(Professions and occupation)에 대한 편견없는 국가적 표준을 향상시킬 것.
 - 강하고 효과적인 친 노동자적인 노동법 제정 및 고용평등과 임금법 제정을 위한 로비활동, 차별에 의해 고발당한 상황에 처한 고용주와 기업에게 증명할 책무를 지울 것.
 - 노동자가 직면한 차별에 대한 종합적인 형태와 전략과 행동계획에 결합할 전망을 가진 조직 또는 그룹들과의 네트워킹을 형성할 것.
 - 인종차별 현상에 접근할 수 있는 파트너 관계를 찾을 것.
 - 모든 계층에서 기회 촉진이 증대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하여 유색노동자, 원주민 노동자, 소수민족자를 위한 개발 프로그램을 이행하고 특별한 업무를 확립할 것을 강력히 요청할 것.
 - 이주민, 원주민, 유색노동자와 소수자가 일자리, 직업 및 일반적인 노동시장에 접근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합원이 참여하는 상담(조인) 프로그램(Mentorship Program)을 수립할 것, 여성과 청소년에 대한 급여를 특별히 주의할 것.
 - 고용주가 인종주의적 입장에서 언어문제를 들고나오며 공격을 시도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주노동자에게 언어 훈련 특권을 지원할 것.

이주노동자

3) 노동조합은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하여야 한다 :

- 미등록 노동자에 대한 합법화를 정부가 촉구할 것.
- 지하경제에서 일하는 이들의 보호를 위한 입법을 위하여 로비할 것.
-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공동체들과 일하고 미등록 노동자를 위해 합법적인 조력을 할 것.
- 미등록노동자를 포함한 이주노동자를 조직하기 위하여 특별한 캠페인을 수행할 것.
- 노동자 대중과 그 가족의 이해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민의 형태와 이주민 정책에 활발히 개입할 것.
- 송출국이나 유입국이라면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방어하기 위하여 (ICFTU와 각 산하 조직들을 통해) 연대하여 활동할 것.

■지역적, 국제적 차원

1) ICFTU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해야만 한다.

- 노동시장에서의 인종주의의 충동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국제적인 감시기관을 설립하기 위한 강력한 로비활동을 전개할 것, 노동자와 산하 노조들에게 모범적인 실천사례를 공유하고 정기적인 보고서를 제출할 것.
- ILO협약의 비준과 효과적인 실행 및 감시를 위한 캠페인에 있어 ILO와 강력한 협력을 할 것.

- 유색민중, 원주민, 이주민, 난민과 소수민족의 권리를 방어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국제적 NGO와 밀접히 함께 일할 것.
- ITSs와 협력하여, 외국의 자격증명서와 면허를 승인하도록 하는 것과 훈련을 위한 국제적 기준을 제정하기 위하여 정부들 및 학술기관들과 열린 대화를 나눌 것.
- ITSs와 함께, UN이 남반구, 북반구의 정상회의에 이민문제를 조직하도록 촉구할 것.

III 다양성 속의 평등을 통한 우리 조직의 변모

■국가적 차원

1) 노동조합은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해야만 한다.

- 노조의 반인종주의 정책과 전략 및 계획들을 발전시키고 실행하고 감시함에 있어 인종주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이 중요한 역할을 항상적으로 인식할 것.
- 모든 노조의 훈련과 교육을 위한 모든 수준의 정책과 계획, 활동 등 반인종주의 인식 회의들을 통합할 것.
- 노조의 발전, 조직화 및 노동자 동원 정책과 정책 및 계획들의 실행의 목적을 가지고 모든 계층의 유색인종, 이주민, 소수민족 및 원주민의 충만한 통합을 해서 노조 구조를 민주화할 것.
- 유색인종, 이주민, 소수민족과 원주민이 지도부가 되는 것의 장애물을 없애는 실제적인 활동계획을 발전하고 실행할 것.
- 인종주의 및 외국인혐오증과의 전쟁을 위해 특별구조를 세우고 강화할 것.
- 대상 조합원들을 지원하고 함께 운동에 합류하도록 하는 상담(조인) 프로그램(Mentorship Program)을 발전하고 통합할 것.
- 노조 간부와 집행단위 및 행정단위(의결단위)의 실제적인 행동 수단들을(공평한 심사를 포함한) 실행할 것.
- 가입조직을 위한 협력 전략은 공동체 단위에서 반인종주의자들의 그룹과 연대하여 실행할 것.

■지역적, 국제적 차원

1) ICFTU와 지역 가입조직은 수행하여야만 한다 :

- 가입조직 및 정부와 공동체 그룹의 국제 워크샵과 행동계획은 연대활동을 발전시키는 목적 속에서 결론을 확산해 낼 것.
- ICFTU와 ITS의 반인종주의 기구(body; 특별기구, 위원회, 특별조사위원회)는 실무를 포함한 적당한 방법으로 기능을 수행하고 정기적인 기초위에서 만남을 가지면서 설립할 것.
- 3년을 넘지 않고 반인종주의 국제회의를 개최할 것.
- 변화를 활발히 촉진하며, 가입조직간의 모범적인 실천과 사례 학습을 확산할 것.
- 반인종주의 가이드라인과 행동계획에 박차를 가하는 노조를 지원할 것.
- 실제적인 행동수단들을 통해 의결구조와 집행간부에 다양성을 활발히 촉진할 것.
- ICFTU가 주관한 제 7차 세계 여성 대회(리오데자네이로, 99. 5)의 권고를 분과별로 실행하고 감시할 것. : '평등을 위한 조직화:이주민과 소수민족'
- 반인종주의의 범위는 ICFTU와 ITS의 아동노동 정책과 행동에 없어서는 안됨을 보증할 것.
- 반인종주의의 범위는 ICFTU의 모든 범주의 청소년 위원회의 활동에 없어서는 안됨을 보증할 것, 특히 인종주의와 외국인혐오증과 관련된 불관용에 맞서 싸우는 젊은 노동자는 확실히 인입되어 질 것.

WCAR 참관기

더반이 나에게 준 것

송수진 (서울경인지역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

긴 여정을 마치고 도착한 남아프리카 더반이 우리에게 처음 알려준 사실은 “밤거리가 무섭다”는 것이었다. 참가자들이 묵고있는 호텔 주변에는 하릴없이 거리를 어슬렁거리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훑어보는 흑인청소년들을 볼 수 있었고 수퍼에 가서 만난 외국인들에게는 조심하라는 당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우리도 며칠 뒤에 돈을 빼앗기 위해 달려든 그들을 몸으로(!) 겪고 나서는 두려움을 갖고 경계하게 되었다. 그건 참 이상한 경험이었다. 인종차별을 철폐하자고 모인 사람들이 경계할 수밖에 없는 치한들은 흑인이었고 그들에게 회의에 참가한 사람들은 호텔에서 잠을 자는 돈 많은 여행객이었다. 행사장 주변에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배를 쓰다듬으며 손을 내미는 맨발의 아이들과 잔디밭 여기저기서 노숙을 하는 가족들을 만나야 했다. 물론 그들의 범죄는 극심한 가난과 상상을 뛰어넘는 숫자의 실업이 만든 일로 이해하기에 그것이 흑인에 대한 편견과 적대로 이어지는 않는다. 그러나 남아프리카에서 흑인 위에 혼혈인, 그 위에 인도인, 그 위에 백인으로 차곡차곡 쌓인 인종의 피라미드는 곧 계급의 피라미드이며 그리하여 끊임없이 벌어지는 밀바닥 흑인들의 범죄는 층층의 다른 인종의 불신과 적대로 그것은 또다시 흑인들에 대한 차별과 멸시로 드러날 것을 불보듯 뻔한 일이다. 행사장 안은 마치 ‘지상낙원’ 같다는 느낌을 주었지만 행사장 밖을 나오면 거리의 공기는 탁하고 스산했다. 인종차별철폐라는 이 선하기 그지없는 인권의 명제에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다. 남아프리카 사람들 정확히 코빼기 도 못 본 백인들은 말고, 흑인들의 얼굴은 애나 어른이나 표정도 없이 어두웠다. 감히 남아프리카의 역사와 사람들의 고통을 조금은 알 것 같은 이 충격은 단지 “가난한 아프리카”를 확인시켜주었다는 것이 아니라 “인종차별철폐는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화두를 던져주었다.

이번 회의를 유치한 움베키 정부는 1억란드(약 150억원)를 썼다고 한다. 이를 두고 남아프리카의 한 일간지는 일자리확보와 범죄근절 그리고 에이즈퇴치가 현안인 오늘, 국민들은 회의에 대해 썰렁한 반응을 보이고 있음을 전하고 있었다. NGO포럼이 거의 막바지에 다다른 어느 날 아침, 남아프리카 흑인여성들 백여명이 행사장 입구쪽에서 구호를 외치고 선동을 하고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그러다가 ‘세계화’를 주제로 한 워크샵장소로 들어가 이야기했다. 그들은 시골에서 더반까지 거리에서 노숙을 하며 몇 번씩 기차를 갈아타고 회의장에 도착했으며 “세계화의 진짜 피해자는 우리”라고 말했다. 사람들은 서로 부둥켜안고 울기 시작했으며 워크샵의 사 회자는 마이크를 넘겼다. 애초 NGO 참가자들은 대회로부터 일인당 1백달러씩을 내도록 요구받았다. 철통같은 보안을 통과할 때 출입증이 되는 알량한 이름표 하나에 1백달러였던 것이다. 이 문제는 행사 전부터 논란이 되었으나 끝내 번복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인도의 달릿단체 참가자 약 200여명은 강하게 문제제기해 50달러를 나중에 돌려 받았다. NGO포럼이 단지 정부간 회의에 대한 로비를 위한 모임이 아니라 누구 하나 소외됨 없이 인종차별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낼 수 있도록 보장하지 못했다는 느낌이 드는 장면들이었다.

지난 1994년 넬슨 만델라의 대통령취임과 아파르트헤이트정책의 폐지는 분명 감격스러운 사건이었다. 흑인정

권의 집권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이며 그것 또한 과거 흑인민중의 피어린 투쟁으로 쟁취한 역사적인 성과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남아공에 아파르트헤이트는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아직도 아파르트헤이트의 보호를 받던 백인타운십의 그림같은 명당자리는 백인부촌이며 물도 전기도 없는 흑인계도 판자촌은 여전히 그대로다. 흑인대통령은 자신들이 가진 것들을 빼앗길까봐 두려움에 떠는 백인들을 위협하지 않았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이다. 정권이 바뀐 것은 오히려 백인들에게 도덕적 비난의 화살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진짜 남아프리카 땅주인인 흑인들의 요구는 이제 지나친 것으로 편찬을 들을지 모른다. 회의가 열리고 며칠 뒤, COSATU(남아프리카노동조합회의) 노동자들은 거리로 나와 움베키정권의 통신회사 민영화에 맞서 시위를 벌였다. 과거 무장투쟁으로 아파르트헤이트를 박살낸 ANC(아프리카민족회의) 집권여당과 COSATU의 연대가 옛날처럼 계속될 수 있을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이 던져지고 있다. 거기서 만난 COSATU의 한 간부는 남아프리카민중의 미래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었다. “아파르트헤이트가 폐지되기 전에는 민중에게 뚜렷한 적이 있었고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가가 너무나 명확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왜 우리의 아이들이 거리에 나와 사람들의 목걸이와 카메라 지폐를 훔쳐야 하는가? 사람들은 시간이 흐르자 옛날 운동의 지도자들이 약속했던 것이 무엇이었는데 잊어가고 있다. 그 약속을 했던 사람들은 집권과 함께 더 이상 투쟁하는 전사가 아니라 ‘정치가’가 되었고 약속을 저버리고 있다.” 더반에서 있었던 몇 번의 시위가 있는 뒤, 민영화 반대투쟁은 어찌 되어가고 있는가를 물으니 “정부는 우리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NGO포럼 행사장에서 만난 사람들은 감동을 주었다. 어느 곳에서나 자신들의 문제를 알리는데 분주했으며 열정을 가지고 연대를 호소했다. 무엇보다 강하고 당당했다. 현실은 사람들의 모든 것을 파괴하고 있으나 그것이 우리의 자존심을 가져가지는 못한다는 것을 진지한 태도를 통해 말하고 있었다. 사실 그 자리에서 하는 선전의 대상은 활동가들일진데 누구나 동의하고 지지할 전 세계 활동가들에게 이렇게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열심인 사람들의 필사적인 몸짓은 현실이 주는 그만큼의 힘겨움이 아닐까? 그만큼의 한(恨)이 아닐까? 특히 여성활동가들의 이미지는 억눌리면 억눌릴수록 더욱 단단한 아름다움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보름간 내내 들었던 생각은 이것이다. 인종차별의 피해자들의 역사는 빼앗긴 자들의 역사이며 그래서 피해에 대한 정당한 역사의 복수도 빼앗긴 것들을 다시 찾는 것에 있다. 저들의 한을 어떻게 풀 것인가.

팔레스타인 활동가들이 시위를 할 때 남아프리카 활동가들은 예의 좌중을 압도하는 화음의 합창을 했고 한 목소리로 구호를 외쳤다. 이주노동자관련 워크샵에서 만난 유럽에서 온 한 활동가는 다음에 만날 때는 “달릿의 권리는 인권이다”라고 씌어진 머리띠를 꼭 하고 오라고 당부했다. 답은 연대다. 그리고 빼앗긴 것이 무엇이며 왜 빼앗겼는지 정확히 알고 누가 빼앗아갔는가를 분명히 하는 싸움이다. 그래야만 빼앗긴 땅과 공장을 되찾는다. 그래야만 인종차별이 철폐된다. 그것이 이번 회의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얻은 앞서 얘기한 화두의 결론이었다. 사람들은 다시 인종차별이 창궐하는 전장으로 떠났지만 모두 잘 알고 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투쟁은 계속된다”는 것을.

기사, 기고글 모음

인권하루소식

세계 인종차별 철폐대회 열린다
난민, 이주노동자, 제국주의의 식민지배 등 쟁점

인권하루소식 7월 12일
심태섭 기자

전 세계 정부·NGO들이 한데 모여 외국인혐오주의와 인종차별 문제를 해결하고자 UN이 주관하는 세계 인종차별 철폐대회(사무총장 메리 로빈슨 UN인권고등판무관, World Conference Against Racism, Racial Discrimination, Xenophobia and Related Intolerance, WCAR)가 8월 31일부터 9월 7일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린다.

이번 세계 인종차별 철폐대회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치러지는데,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치러지는 NGO(NGO) 포럼과 9월 1일부터 7일까지 열리게 되는 정부간 회의가 그것이다. 행사 참가자들은 세계 인종차별 철폐대회를 마치며 '선언'과 '행동강령'을 채택할 예정이다.

8.31~9.7, 남아공 더반, 전 세계 정부기구, NGO 참가

UN은 전지구적으로 만연해있는 인종차별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70년대 초반부터 30년이라는 기간을 '인종주의와 인종차별에 대항하는 기간'으로 특별히 지정하고 이미 두 차례 세계 인종차별 철폐대회를 치른 바 있다. 올해 열리는 대회는 지난 83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이래로 18년 만에 열리는 것.

78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처음 열린 세계 인종차별 철폐대회에서는 주요 안건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에 대해 논의했으나 20년도 더 지난 올해 세계 인종차별 철폐대회의 주제는 '난민, 이주노동자, 카스트제도, 종족살인' 등으로 매우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특히, 아시아지역과 아프리카지역 정부·NGO들이 제안한 '과거 서구·일본 등의 식민지배에 대한 보상 요구'는 이번 세계 인종차별 철폐대회의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돼 있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이의 오래된 분쟁도 이번 대회에서 비중 있게 다뤄질 예정이다. 또 한국 정부는 이번 대회에 과거 식민지시대 일제만행을 고발할 계획을 갖고 있다.

97년 52차 UN 총회에서 '2001년 세계 인종차별 철폐대회 개최'를 결의한 이래로 정부기구와 NGO들은 아시아태평양지역, 아프리카지역으로 나뉘어 지역 회의를 가져오면서 세계 인종차별 철폐대회에서 채택할 선언과 행동강령을 각기 준비해왔다.

올해 들어 아시아지역에서 2차례에 걸친 대회 준비위원회를 하면서 주로 제기된 문제는 인도의 카스트제도, 이주노동자 문제이며, 북한 당국이 주도해 쟁점으로 부각된 '일제식민시대 당시 발생한 학살·만행' 문제도 중국·필리핀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호응을 얻었다.

한국도 인종차별 예외지대 아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이주여성인권연대, 안산외국인노동자의집,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 등이 지난 6월부터 세계 인종차별 철폐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준비를 해왔다. 6월 이래로 두 차례 해 온 모임에 참석한 이주여성 인권연대 관계자는 "단일민족이데올로기가 팽배한 우리나라에서 '조선족, 이주노동자, 탈북자'들은 사회 안에서 여태까지 인종차별을 받아온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결코 인종차별문제 지역에서 예외가 될 수 없는데도

우리 스스로는 인종차별 문제를 진지하게 바라보고 있지 못하다"고 말했다.

세계 인종차별 철폐대회 참가를 준비하는 단체들은 오는 7월 18일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팍스 로마나'의 사무국장 이성훈 사무국장을 초빙해 '세계 인종차별 철폐대회 준비를 위한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이 사무국장은 '세계 인종차별 철폐대회의 의의와 한국NGO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이날 이주여성인권연대와 민변도 인종차별철폐의 시각으로 접근한 이주노동자·난민 인권에 대해 각각 발제를 한다.

- 종로 5가 기독교연합회관 405호 한우리교회(7월 18일 오후 3시)
- 문의 : 이주여성인권연대 강은경 사무국장 051-802-3438

다음달 세계 인종차별 철폐대회 개막
세계화 식민주의 등 다양한 쟁점 논의

인권하루소식 7월 20일
심태섭 기자

오는 8월 31일부터 9월 7일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리는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World Conference Against Racism, Racial Discrimination, Xenophobia and Related Intolerance, 약칭 WCAR)를 준비하기 위한 국내 NGO 간담회가 18일 오후 기독교연합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는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단체, 팍스 로마나(Pax Romana)의 이성훈 사무국장이 참석해 세계 인종차별 철폐대회 경과와 주요 현안·의제 등을 소개했다.

세계 인종차별 철폐대회는 1978년과 83년 두 차례 열린 바 있다. 두 번에 걸친 세계 인종차별 철폐대회에서 다뤄진 주제는 주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종차별정책'에 관한 것이었다. 당시만 해도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종차별 정책을 시행하는 나라는 남아공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89년 남아공공화국에 만델라 정권이 들어서고 인종차별정책이 폐지되면서 이전에는 인종차별 문제로 인식하지 못했던 '종교간의 불관용', '외국인 혐오', '이주노동자' 문제와 같은 것들이 '인종차별'의 영역과 '인권'의 영역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19년만에 열리는 세계 인종차별 철폐대회는 이런 다양한 쟁점과 현안들을 논의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올해 세계 인종차별 철폐대회에서 다뤄질 현안은 크게 4가지로 △세계화에 따른 인종차별 △서구·일본 등의 과거 식민주의 정책에 대한 배상·보상 △브룬디, 르완다 등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종족갈등 문제 △범지구적 현상이라 할 수 있는 이주노동 문제 등이다.

이러한 현안에 대해 세계 인종차별 철폐대회 참가국은 ▲형태·원인 ▲희생자 ▲예방·교육·보호 조치 ▲구제 방법 ▲국제협력 행동전략을 의제로 삼아 논의하고, 인종차별철폐를 위한 구체적 '선언'과 '행동계획'을 채택할 예정이다.

한국 NGO, '이주노동' 문제제기

그러나 각 정부들은 널려있는 인종차별 현안에 대해서 많은 이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세계화에 따른 인종차별·과거 식민주의 청산'이라는 쟁점은 각국 정부들의 이해에 따라 첨예한 대립을 낳고 있다.

'세계화를 주도하는 국가와 제3세계 국가' '과거 제국주의 국가와 식민지 국가'간 '가해국 대 피해국'이라는 구도가 그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가해국' 위치에 있는 정부들은 애써 현안을 피해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세계 인종차별 철폐대회에 참가하는 우리 NGO들은 '이주노동자와 난민' 문제를 주요하게 제기할 예정이다. 아시아권에서는 과거 식민주의 청산 문제 못지 않게 빈국·부국 사이에 발생하는 이주노동자 문제가 클뿐더러, 우리나라가 이주노동자와 난민 문제에 있어서 '가해국'의 위치에 있음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18일 간담회에서 국내 NGO들은 세계 인종차별 철폐대회가 갖는 위상에 공감하며 NGO가 담당할 몫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국내 NGO들은 특히 아시아권 NGO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국내 이주노동자·난민 문제를 쟁점화시키는데 노력하기로 했다.

"국내에 만연한 인종차별 의식에 경종을 울리길 바란다" 인권하루소식 8월 22일
세계 인종차별 철폐대회 참가단, 활동계획 밝혀 심태섭 기자

UN이 주관하는 세계 인종차별 철폐대회에서 우리나라 인권활동가들이 한국 내 이주노동자·난민·매매춘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문제제기와 연대를 호소할 방침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안양 이주노동자의 집, 평등노조 이주노동자 지부 등 세계 인종차별 철폐대회 참가 준비를 해온 인권사회단체들은 21일 오전 안국동 철학카페 느티나무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8월 27일부터 9월 7일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리는 세계 인종차별 철폐대회에 참가·활동할 계획임을 밝혔다.

안양 이주노동자의 집 이금연 관장을 단장으로 한 '세계 인종차별 철폐대회 한국 NGO 참가단'(아래 참가단)은 이금연 관장을 비롯, 부산 외국인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강은경 사무국장, 평등노조 이주노동자 지부 이윤주 지부장 등 모두 5명으로 구성돼 오는 24일 대회 참가를 위해 출국한다.

이번 대회에서 정부간 회의 교섭 단체 자격을 획득한 이들은 이번 대회에서 한국 내 이주노동자·난민·매매춘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킨다는 방침이다.

참가단은 세계 인종차별 철폐대회 기간 중 열리는 청년포럼·NGO포럼·정부간 회의 등 행사에 참가하고, 남아공 현지에서 한국 내 이주노동자·난민문제 등을 국제사회에 알릴 수 있도록 집회 또한 열 계획이다. 특히 현행 산업연수제에서 저임금에 시달리고 기본적 노동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사진홍보전도 마련해냈다. 난민문제에 대해선 현재 정부가 난민지위 인정을 1명만 해준 현실에 대해 법무부 통계자료를 들어 홍보하게 된다.

참가단은 또 현재 세계 인종차별 철폐대회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일본 정부의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와 과거 일본 제국 식민 정책에 대한 과거 미청산 문제에 대해서도 국제적 연대를 모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남아공 현지에서 일본정부에 대한 항의 집회를 열 예정이며 각국 정부 인사·NGO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자체 제작한 홍보물을 배부하고 일본 정부를 압박한다는 방침이다.

참가단 단장인 안양 이주노동자의 집 이금연 관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한국 내에 만연한 인종차별문제에 대해 환기가 이뤄지고 인종차별이 종식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한다"며 "한국 정부가 이번 대회를 통해 인종차별 철폐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갖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참가단은 귀국 이후 사회단체 활동가를 위한 보고대회를 열고, 세계인종차별철폐 대회 참가 활동에 대한 자료 집도 발간할 계획이다.

세계인종차별대회 참가기 ①
인종차별 철폐를 향한 인류의 행진

인권하루소식 8월 30일
심태섭 기자

"더반입니다. 정말 긴 여행이었습니다. 먼 여행을 마친 우리 이 더반에 아직 더 가야 할 길이 남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메리 로빈슨 UN인권고등판무관은 2001 세계 인종차별 철폐대회(www.unhcr.ch) NGO포럼 참가자들에게 환영사를 시작했다.

그의 한마디는 인종차별문제가 얼마나 다루기 힘들고 논쟁적인 주제인가를 한마디로 압축해 보여주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21세기에 들어선 인류가 한 자리에 모여 '새로운 세기, 인종차별이 없는 세계'를 위한 새로운 시작을 선언하는 순간임이 틀림없었다.

'NGO포럼' 개막

26일 청년정상회의(Youth Summit)로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시작된 세계 인종차별 철폐대회는 28일 두 번째 공식행사인 NGO포럼의 개최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21세기에 들어 처음으로 열리는 세계대회인 만큼 세계 인종차별 철폐대회에 기울여진 세계 각국 NGO들의 참가열기는 뜨겁다.

28일 현재 8천명 이상이 등록한 NGO포럼은 개막 첫날부터 뜨거운 논쟁이 그치지 않았다. 특히 팔레스타인-이스라엘 문제와 인도의 카스트 최하층민인 달리트(Dalit) 문제는 이미 청년 정상회의 때부터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분위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세계 인종차별 철폐대회 불참 선언을 한 이후여서 NGO포럼이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리고 그것이 정부간 회의에 어떻게 반영될지 참가자들이나 언론은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NGO 참가자들은 포럼행사장 곳곳에서 "팔레스타인에게 자유를!", "귀환의 권리를!" 이라든가 "UN은 균형을 지켜라!", "정치가 아닌 인종주의를 논하자!"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했다.

인도 달리트들도 2백여 명의 대규모 참가단이 곳곳에서 북과 같은 악기를 연주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알리고 있다. 외형적 대립 상황 때문인지 행사장 주변엔 경비 요원 2백여 명이 포럼 참가자들에게 몸수색까지 실시하며 행사장에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과도한 경비 체계로 인해 운영위원회는 참가자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

다른 쟁점에 대해서도 NGO포럼이 어떤 선언과 행동계획을 채택할 지 모르나 세계 인종차별 철폐대회 사무총장이기도 한 메리 로빈슨 UN 인권고등판무관은 포럼 환영사에서 "포럼에서 들은 여러 목소리에 대해 각국 정부 정책에 반영하도록 요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포럼 참가자들은 개막 첫날부터 '식민주의, 이주노동자, 난민, 세계화' 등의 주제를 가지고 원탁회의, 패널토의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자신이 속한 세계, 계층, 언어 등 모든 것이 다른 이들이 이토록 세계 인종차별 철폐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유는 메리 로빈슨 UN인권고등판무관의 다음 한 마디로 설명될 것 같다.

"나는 평등한 세상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능하다고 믿는다."

세계인종차별대회 NGO포럼은 정부간 회의가 시작되는 오는 9월 1일 폐회한다.

세계인종차별대회 참가기 ②
"알맹이 없는 대회로 만들 순 없다"

인권하루소식 9월 4일
심태섭 기자

UN에 가입한 모든 나라들이 모인 세계 인종차별 철폐대회 정부간 회의가 지난달 31일 개막했다. 이번 대회를 개막하며 코피 아난 UN 사무총장, 메리 로빈슨 UN 인권고등판무관 등은 "인간 존엄성에 대해 새로운 희망을 주어야 한다", "입으로만 논의하는 자리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등의 발언을 통해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했다.

하지만 대회 논의 과정이 순탄한 것은 아니다. 정부간 회의 참가단 면모를 살펴보면, 정상급 대표들은 피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 데니스 싸썬 은그웨소 콩고 대통령, 야세르 아라파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 등 주로 아프리카, 중동 지역 대표들이 참가했고 서방국가에서는 단 한 명도 정상급 대표가 참가하지 않았다.

특히 캐나다, 일본 등은 애초에 참가시키려고 했던 장관급 참가단을 차관급 수준으로 변경해 참가시켰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 인도 카스트문제, 과거 식민주의 문제 등으로 뜨거운 세계 인종차별 철폐대회가 서방 국가들의 수세적이고 소극적인 참여로 인해 김이 빠지고 있다.

지난 1일 폐막한 NGO포럼에서 시오니즘을 인종차별이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 이스라엘 정부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또한 정부간 회의를 폐막하며 채택할 선언에 대한 논의가 하루에 7~8조항 밖에 진행되지 못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다수결이 아닌 '만장일치식'(concensus) 조항 채택 회의를 하기 때문이다.

말로만 반성 말고, 문제해결에 나서야

대회 진행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서방국가들과 이른바 제3세계라고 불리는 아프리카 국가간의 갈등이다. 아프리카가 발언하면 서방국가들이 받아치는 회의 모양새가 되고 있다. 서방국가들은 과거 제국주의 시대에 발생했던 노예무역제도, 식민주의에 대한 인종차별적 과오를 인정하고 있으나 이를 공식적 사과나 선언문 채택·자국 역사 교육 강화 등을 통한 적극적인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지 못해 아프리카 국가들이 반발하고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에 있어 보상·배상 문제는 오히려 큰 쟁점이 아니다. 회의 4일째인 9월 3일 현재까지 아프리카 국가들과 서방국가들 사이의 이러한 평행선은 고스란히 유지되고 있다.

또한 유럽 지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로마(집시)에 대한 차별·살인 문제, 난민 문제에 대해서도 유럽 대표들은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회의장 밖의 NGO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편, 아시아 지역에서는 일본 식민주의 청산 문제와 이주노동자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다. 무라야 가오리 일본 외무성 차관은 9월 2일 정부 대표 발언에서 "일본 정부는 학생들에게 세계2차대전 야기한 인류에 대한 재앙에 대한 역사교육을 하고 있다"고 발언해 필리핀, 한국 등 NGO들이 반발했다. 한국 NGO 참가단은 3일 회의장 입구에서 일본 정부에 대해 과거 식민주의 청산, 군국주의 정책포기, 전범 신사 참배 사과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같은 날, 일본 정부 발언에 앞서 한명숙 여성부 장관도 한국 정부 대표발언을 했다. 한 장관은 "여성에 대한

범죄를 없애는 것이 여성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첫 걸음임을 믿는다"며 "발칸 반도 지역에서 벌어졌던 여성에 대한 강간, 일본 제국주의 통치 당시 종군 위안부 문제 등 외부 세력 점령 당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해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또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문제와 이주노동자에 대한 보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많은 쟁점들과 이해 관계가 얽혀있는 21세기 첫 세계대회. 1만5천 여 명의 정부·비정부 참가자들이 이러한 '매우 특별한 기회'를 인종차별철폐를 위한 '매우 특별한 시작'으로 결론지을 수 있을지 세계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다.

세계 인종차별 철폐대회 참가기 ③
더반선언,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 지향

인권하루소식 9월 13일
심태섭 기자

남아공에서 공식일정을 하루 연기하며 열린 세계 인종차별 철폐대회가 마침내 '선언'과 '행동계획'을 채택하고 지난 8일 폐막했다. 대회가 시작된 지난달 31일부터 마지막날까지 논란이 된 이슈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와 노예무역을 비롯한 노예제도·식민주의 문제였다.

대회에서 채택한 선언에는 노예제도를 '반인류적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이번 대회의 큰 성과물 가운데 하나로 평가된다. 대회 처음부터 영국·스페인·네덜란드 등 과거 시절 식민주의 정책을 펼치며 노예제도를 시행했던 나라들은 노예제도를 '반인류적 범죄'로 명시하는 것을 완강히 반대했다.

국제법상 반인류적 범죄는 공소시효가 없기 때문에 이후로 셀 수도 없는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프리카 지역국가들을 포함한 노예제도 및 식민주의 피해국가들이 '노예 제도는 반인류적 범죄'임을 명시할 것을 강력히 바랬기 때문에 선언에는 이러한 의견이 반영됐다.

한편, '반인류적 범죄' 문구와 함께 논란이 됐던 노예제도·식민주의 피해에 대한 배상문제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물론 간접적인 경제지원을 의미하는 문구가 삽입됐긴 했지만 도덕적인 책무를 지운 수준의 문구다.

노예무역·팔레스타인 문제 관심

대회 도중 이스라엘과 미국 정부 대표 참가단이 철수하는 상황까지 불러왔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에 있어서도 더반선언은 작으나마 성과를 얻었다. 선언에는 "점령지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곤경에 대해 우려하며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양도할 수 없는 자결권과 독립국가 건설권한을 인정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9월 4일 NGO포럼에서 채택한 선언에서 시오니즘을 인종주의로 규정한 것보다 못한 수위의 결정임을 지적 받고 있다. 사실 UN 의결구조상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UN총회 결의에서도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를 낸 바 있다. 하지만 UN총회 결의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이 이번 선언문을 어떻게 실천할 지는 미지수다.

이번 대회 사무총장을 맡았던 메리 로빈슨 UN인권고등판무관은 공식적으로는 시오니즘을 인종주의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NGO포럼 선언 채택 후 "NGO들의 결정을 존중해 정부간 회의에서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합의방식으로 진행돼야할 대회가 막판에 투표까지 동원해가며 채택한 이번 선언문과 행동계획이 21세기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을 위한 인류의 실천에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전 세계인들과 각국 정부의 양심과 실천력에 달려 있다는 의견이 많다.

대회 기간 중 미국 등이 참가단을 철수하고, 선언채택과정에서 서방국가들이 구체적인 국가명칭 언급을 회피하는 등 많은 부분 '김이 빠진' 면이 보이고 있기도 하다. 물론 법적으로 강제력이 없는 '선언'이라는 한계도 있지만, 새로운 세기에 들어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을 철폐하고자 전 세계 168개 나라 사람들이 모여 탄생시킨 '더반 선언'의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다.

한겨레 21 카스트제도는? 이주노동자는?

인권 대신 정치가 판을 친 더반 회의장... 세계인종차별철폐회의가 남긴 것은 무엇인가



사진/ NGO 회의장 앞에서 경쟁적으로 시위를 벌이고 있는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NGO 참가단.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린 제3차 세계인종차별철폐회의(WCAR)가 노예제와 식민주의를 반인도주의 범죄(Crime against Humanity)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사과를 하기로 합의하고 막을 내렸다. 팔레스타인 문제는 이스라엘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양쪽의 평화적 대화를 재개하는 '중도적' 입장에서 타결됐다. 폐막 예정일을 하루 넘긴 다음날 9월8일 새벽 극적으로 이루어진 타협은 협상의 주된 당사자였던 유럽연합, 아프리카 및 아랍국가들이 회의 주최국 남아공 정부의 중재안을 받아들임으로써 이루어졌다.

비록 막판 극적 타협을 통해 파국을 면했지만 애초의 기대와 달리 이번 회의를 통해 세계 곳곳에 만연한 인종주의 관련 인권침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시민사회의 정치적 의지를 결집하는 목표 달성에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적지 않은 정부대표단과 비정부기구(NGO) 참가자들은 실망하여 이미 더반을 떠난 상태라 이번 합의의 정치적 효과가 더욱 의문시되고 있다.

노예제에 도덕적 차원의 사과

이번 회의의 공식 명칭은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증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 철폐를 위한 국제 회의(World Conference against Racism, Racial Discrimination, Xenophobia and Related Intolerance). 제목이 긴 만큼 의제는 광범위했고 다양한 이슈가 논의되었다. 지난 78년과 83년 제네바에서 개최된 두번의 회의는 인종주의와 인종차별문제, 특히 남아공의 아파르트헤이트와 팔레스타인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94년 아파르트헤이트가 공식적으로 철폐되면서, 유엔은 그동안 아파르트헤이트의 그늘에 가려 제대로 다루지 못한 다양한 문제들을 이번 기회에 종합적으로 다루고자 했다. 그러나 정작 이번 회의에서 가장 큰 쟁점이자 논란이 된 문제는 현재의 문제가 아닌 지난 400년의 '과거청산', 즉 서방국가에 의한 아프리카의 노예제, 노예무역, 식민주의 등에 대한 사과와 배상, 그리고 세계평화의 '아킬레스 건'인 팔레스타인 문제였다.

노예제와 식민주의는 역사적으로 아주 오래된 문제이지만 유엔 회의의 공식 의제로 다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연 듯, 노예제와 식민주의와 관련된 수많은 문제들이 회의준비 과정에서 쏟아져 나왔다. 최대 피해자인 아프리카 국가들은 노예제와 식민주의를 반인도주의 범죄로 규정하고 가해국가들과 이득을 얻은 국가들의 공식적인 사과(apology)와 이에 따른 적절한 배상(reparation)과 보상(compensation)을 주장했다. 게다가 아프리카 국가들은 "노예제와 식민주의가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아프리카 대륙 대다수 국가가 겪고 있는 종족갈등, 내전, 가난 등의 정치경제 위기의 역

사적 및 구조적 원인이다"고 주장하면서 배상문제를 서방국가의 재정지원과 외채탕감문제와 연관시켜 논의하고자 했다.

이에 대해 유럽연합은 "노예제와 식민주의가 아프리카에 끼친 부정적 영향에 대해 인정하지만 이에 대해 현대적 개념인 반인도주의 범죄를 적용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무리이다"라고 전제하면서 "과거사에 대한 유감을 표명할 수는 있지만 법적 책임을 수반하는 공식적 사과는 어렵다"는 공식적 입장을 견지했다. 특히 유럽연합은 "사과를 할 경우, 이미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듯이, 사과가 지닌 정치적 법적 효과를 이용해서 노예제의 피해자 후손들이 집단적으로 유럽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지 모른다"는 우려를 강하게 표명했다. 한국과 일본의 식민지 '과거청산'과 같은 논리구조를 지닌 이 문제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자긍심과 감정이 개입된 민감한 문제였다. 결국 협상의 결론은, 유럽연합이 사과는 하되 '법적·정치적 의미가 아닌 도덕적 차원에서 사과'를 하고 도의적 차원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경제발전 계획을 좀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귀결됐다.

회의의 지뢰, 시오니즘 문제

사진/ 시오니즘과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을 비판하는 유대교라비 시위대.



노예제와 식민주의가 이번 회의에서 태풍의 눈이었다면 팔레스타인 문제는 지뢰였다. 사실 중동문제 전문가들은 지난해 7월 미국이 중재한 평화회담이 결렬되고 그 여파로 폭력사태가 지금처럼 확대되자 83년의 2차 회의 때처럼 팔레스타인 문제로 이번 3차 회의가 '공중납치'(hijacked)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이를 심각하게 우려한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개막연설에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위기와 배상문제로 이번 회의가 '탈선'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특정 국가를 지목한 상호비난으로 이번 회의가 얼룩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한편 개막 직전에는 "아랍 국가들이 시오니즘을 인종주의로 규정하지 않기로 했다", "아프리카 국가들이 노예제와 식민주의에 대한 배상과 보상요구를 하지 않기로 했다"는 비공식 합의 소식이 퍼지면서 이번 회의의 결과에 대한 낙관적 견해가 한때 유포되기도 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기조연설에 나선 대다수의 아프리카 정부 대표들은 강한 어조로 노예제와 식민주의에 대한 공식사과와 배상을 요구하였고, 아랍 국가들은 이스라엘에 의한 팔레스타인 지역 군사점령과 통치를 인종주의이자 '새로운 형태의 아파르트헤이트'로 비난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의 국시와도 같은 시오니즘을 인종주의로 규정하고 이스라엘 군대에 의한 팔레스타인 민간인 학살을 '종족청소(Ethnic cleansing) 또는 대량학살(genocide)'로 강하게 비난했다.

팔레스타인 문제는 NGO 참가단 사이에서도 '뜨거운 감자'였다.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인 가운데 진행된 NGO 포럼 기간중 팔레스타인과 유대인 시위대간의 충돌이 생겨 경찰이 동원되기까지 했다. 게다가 이번 회의의 사무총장인 메리 로빈슨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은 NGO 포럼 마지막날인 9월1일 채택된 78쪽에 달하는 NGO 선언과 행동계획 문서가 "시오니즘을 인종주의로 규정하고 있고 대량학살(genocide)이란 표현을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다"며 이를 공개적으로 비판하여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처음부터 팔레스타인 문제가 인종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라며 이번 회의의 의제에서 제외할 것

을 주장해온 이스라엘과 미국은 우려한 대로 반이스라엘 분위기가 전체 회의를 지배하자 결국 회의 개막 3일 만에 철수를 결정했다. 애초에 회의 불참을 모색하다가 국내외 여론에 밀려 마지못해 대표단을 파견한 부시 행정부로서는 가뜰이나 부담스러운 노예제 배상문제를 회피할 수 있는 좋은 핑곗거리를 얻은 셈이었다. 미국에 비해 다소 유연한 입장을 취하던 유럽연합은 미국이 철수하자 다시 강경입장으로 선화했다. 게다가 "유럽연합도 곧 회의에서 철수할지 모른다"는 소문이 돌면서 회의의 파국을 전망하는 비관적인 분위기가 확산되기 시작했고 회의 실패에 따른 정치적 책임론이 곳곳에서 거론됐다. 주최국 남아공은 당황하고 초조해하기 시작했다. 급기야 타보 움베키 대통령이 다시 더반으로 돌아와 유럽연합과의 비공식 협상에 직접 나섰다. 결국 주최국 남아공의 체면과 명분을 살려주기 위한 정치적 고려가 파국을 막는 데 기여한 셈이다.

"미국은 모든 명분을 잃었다"



사진/ 회의 폐막 이틀을 앞두고 본회의장 앞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간 달릿 인권운동 지도자들.

회의의 결과를 두고 전문가들은 "유럽연합은 도덕적 명분, 아프리카 국가들은 정치적 명분을 얻은 반면 미국은 도덕적, 정치적 명분 모두를 상실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또한 팔레스타인과 아랍 국가들은 크게 얻은 것도 잃은 것도 없는 평균적 정도라고 한다. 특히 미국은 이번 회의에서 철수함으로써, 교토 기후협약 거부 사건 이후 다시 한번 세계지도자로서의 도덕적 위상에 큰 손상을 입게 되었다.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OHCHR)은 정부간 회의 기간중 소수자집단(minorities), 원주민, 장애인, HIV/AIDS, 여성, 난민, 사법행정 등의 주제별 세미나를 개최하여 이번 회의의 의제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부각시켰다. 그리고 점심시간에는 나이지리아에 노예로 팔려간 10대 소녀, 코소보에서 강간당한 여성 피해자, 에이즈환자 등의 사례를 '피해자의 증언'이라는 특별 프로그램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루어지는 정부간 협상에 피해자의 현실이 반영되도록 노력했다.

그러나 일부에서 우려했듯이 노예제와 식민주의 그리고 팔레스타인 문제가 전체 회의 분위기를 지배하면서 정작 이번 회의가 원래 다루고자 했던 다양한 형태의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증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의 문제가 제대로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였다는 것이 지배적인 평가이다. 일부 NGO 참가자는 "대다수 정부가 자국 내의 인종주의 관련 인권문제를 이번 회의에서 의도적으로 호도하고 회피하기 위해서 두 문제를 필요 이상으로 과장하고 '남용'했다"며 일부 국가를 비판하기도 했다.

정부간 협상의 난항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의를 통해 NGO들은 남아시아의 달릿(Dalit), 집시로 알려진 유럽의 로마(Roma), 전세계 곳곳에 강제로 흩어져간 아프리카 후손(African Descendants), 이주노동자, 난민, 인신매매 범죄피해자, 원주민 등의 문제를 주된 지구적 의제로 부각시키는 데 성공했다. NGO포럼 마지막날인 9월1일 채택된 78쪽에 달하는 NGO선언과 행동계획 문서에는 전세계 곳곳의 인종주의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거의 모든 문제가 피해자의 관점에서 담겨져 있다.

인도 전역에서 온 300여명의 달릿(산스크리트어로 '짓눌린 민중'이란 뜻) 참가자들은 증언, 세미나, 시위 등을 통해 효과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홍보하여 이번 회의에서 언론의 가장 큰 관심을 받았다. 약 2억6천만명에 달하는 달릿은 불가촉천민(untouchable)이란 말이 나타내듯이 인도의 신분제도인 카스트

제도의 최대 피해자로 가장 극심한 사회적 천대와 착취를 당해왔다. 회의 폐막 이틀을 앞두고 회의장 앞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간 예수마리안 신부는 "우리 달릿은 이제 3천년 동안의 침묵과 굴종을 깨고 인간으로 대접받기 위해 일어섰습니다. 유엔의 최종 선언문과 행동계획이 달릿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세계 인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존립근거를 상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노예제와 식민주의 및 팔레스타인 문제 다음으로 가장 큰 쟁점으로 부각된 카스트제도 문제는 행동계획 초안 73번에 '직업과 신분은 따른 차별'이라는 다소 광의의 개념으로 다루어졌다. 그러나 달릿 대표단과 주요 국제 인권 NGO로 구성된 로비팅의 적극적 활동에도 불구하고 인도 정부의 강력한 반대 로비에 막혀 이 표현문구가 포함된 항목은 마지막날 채택되지 못했다. 달릿 참가자의 실망과 허탈감을 의식한 인권감시(Human Rights Watch)의 달릿 문제 수석연구원인 스미타 나롤라는 "73번 항목의 채택 여부에 관계없이 이번 회의에서 달릿과 카스트 문제가 주된 쟁점으로 등장한 것 자체가 달릿운동이 인도 정부에 판정승으로 이긴 것이나 다름없다"며 "국제무대에서의 달릿운동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일본, 교과서 왜곡에 침묵으로 일관

사진/ 인종차별과 성적취향에 따른 이중적 차별에 항의하는 동성연애자 참가자.



한국 정부는 한명숙 여성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여러 명의 제네바와 서울의 외교부 인권담당 외교관이 참여하였다. 한 장관은 9월1일 정부대표 발언에서 군위안부 문제와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문제를 일본의 나라 이름까지 거명하면서까지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일본 정부는 반박권을 행사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했다. 대신 나중에 일본 정부의 대표 발언을 통해서 "주변 국가들이 관심을 표명한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는 과거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의 과거사에 대해 깊은 후회와 유감(deep remorse)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2차대전과 관련한 올바른 역사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국 정부의 신길수 참사관은 이에 대해 "일본이 한 장관의 발언에 대해 반박권을 행사했을 경우 자국의 역사교과서 문제가 이번 회의의 쟁점으로 부각할 것을 부담스러워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민주노총 산하의 평등노조와 인권운동사랑방 등에서 파견된 5명의 한국 NGO 대표단은 NGO포럼 기간중 행사장에 이주노동자 보호 국제협약을 한국 정부가 비준할 것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한국의 이주노동자 문제를 집중적으로 홍보하였다. 그리고 본회의 기간중 일본 NGO와 함께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을 비판하는 시위를 조직했다.

더반=글·사진 이성훈 통신원 almolee@yahoo.com

이윤주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 지부장)

제 3차 세계 인종주의 철폐 대회가 8월27일부터 2주간 1차(1978년), 2차(1983년) 대회 주역이었던 남아프리카 공화국(남아공)의 아파르트헤이트(인종 격리 정책)가 종식된 것을 기념해 남아공의 무역 도시 더반에서 열렸다. 18년 만에 유엔 인권위원회가 주관해 열린 3차 대회에는 비정부기구(NGO) 활동가 5천여 명을 비롯한 1만 5천여 명이 참가했다. 이번 대회는 '인종주의와의 전쟁(Combat Racism)'을 표방했지만 이 구호가 무색할 정도로 인종 갈등 성토와 그 책임을 회피하려는 암투로 얼룩졌다.

대회 기간 내내 가장 뜨거운 쟁점은 시오니즘이었다. 이스라엘을 인종 차별 국가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팔레스타인인을 포함한 아랍계와 이를 막으려는 이스라엘·미국의 대립은 '9·11 폭탄 테러'의 서막을 보는 듯이 뜨거웠다.

최대 쟁점이 된 시오니즘

미국 정부의 일방적인 친 이스라엘 태도는 대회 시작부터 입방아에 올랐다. 부시 정권에게 제3차 인종 차별 철폐 대회는 여러 모로 달갑지 않았다. 지난 대회의 화두였던 아파르트헤이트가 해결된 뒤 열리는 이번 대회에서 시오니즘 외에 노예제에 대한 남아프리카 국가들의 사과와



논쟁을 받으며,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에 참석한 미국 대표단은 전격 철수했다.

'9·11 피의 화요일' 서막을 보았다

남아공 제3차 인종주의 철폐 대회 참관기

배상 및 보상 요구도 미국 정부로서는 골칫거리였다.

미국 정부는 대회를 앞두고 정부 부담금을 내지 않고 참가 결정도 유보하는 등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시오니즘 반대·양심적인 유태교의 랍비 시위대는 대회 기간에 시오니즘에 반기를 들었다.

를 숨기지 않았다. 결국 정부간 회의를 코앞에 둔 8월29일에야 대표단이 아닌 남아공대사를 참관인 자격으로 참가시키겠다고 발표했다. 미국측이 대회 파행을 우려한 유엔인권위원회와 남아공의 중재를 받아들여 하지 못해 차관급 인사를 파견했다. 하지만 대회 3일째 밤미·반이스라엘 분위기가 고조되자 미국 대표단은 공식으로 불만을 표명하고 이스라엘 대표단과 함께 철수했다. 미국 대표단의 이같은 행보는 아랍권 비정부기구의 분노에 기름을 부른 격이었다.

비정부기구 대회가 열렸던 더반의 킹스미스 운동장은 인종 차별 피해자들의 선전장이었다. 특히 언론의 조명을 가장 많이 받은 참가자는 시오니즘을 주도적으로 제기한 팔레스타인인들이었다. 매일 줄무늬 천통 스킨프를 두르고 "프리 프리 팔레스타인(Free, Free, Palestine)"

을 외치는 팔레스타인인과 이들의 지지자는 하루가 다르게 늘어났다. 팔레스타인의 주장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무슬렘(이슬람교도)만이 아니었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밍다'고 시오니즘 문제에 이스라엘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한 미국 정부의 행태가 오히려 팔레스타인 지지자를 늘어나게 했다. 미국의 비정부기구 연합 참가단까지 자국 정부 대표단을 비난하며 팔레스타인과 연대할 정도였다.

대회 초반부터 시오니즘 문제가 불거지면서 친아랍·팔레스타인 분위기가 조성되자 이스라엘 비정부기구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얼마나 다급했는지 이들

은 대회 4일째 이스라엘 국가가 그려진 티셔츠를 급조해 대회 참가자들에게 무작위로 나누어 주었다. 일부 참가단이 뒀지 못하고 받았다가 되돌려주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NGO 대회는 '희망', 정부간 대화는 '절망'

대회 5일째 '샤론은 학살자' '인종 청소 중 단하라' '시오니즘=인종주의'라는 반이스라엘 피켓 물결이 대회장을 뒤덮었다. 터번과 차도르를 두른 아랍인 5천명이 상고코(SANGO CO:남아공 비정부기구연합)가 개최한 도심 시위에 참가했다. 이들은 한 손에 피켓, 한 손에 물통을 들었다. 이들이 든 물통의 쓰임새는 시위 막바지에 알게 되었다. 시위는 무슬렘 종교집회로 마무리되었는데, 이때 아랍인들은 들고 온 물통의 물로 저마다 손과 발을 정결하게 씻었다. 그리고 모든 참가자들이 일제히 기도하며 평화의 퍼포먼스를 연출했다. 한 참가자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 드리면서 평화롭게 살아간다. 무슬렘에 대한 편견을 버려 달라"고 말했다. 유엔인권위원회 고등 판무관이자 이번 대회 사무총장인

그렇다고 이런 공감대가 정부간 회의의 결과물인 유엔 공식 선언문에 반영된 것은 아니다. 시오니즘 문제만 놓고 보더라도 팔레스타인·미국·이스라엘 누구 하나 만족하지 못한 채 대회는 막을 내렸다. 남아공 정부의 중재로 폐막 예정일을 하루 넘긴 새벽에야 시오니즘 문제는 타협점을 찾았다. 팔레스타인과

과'를 받아내는 데 그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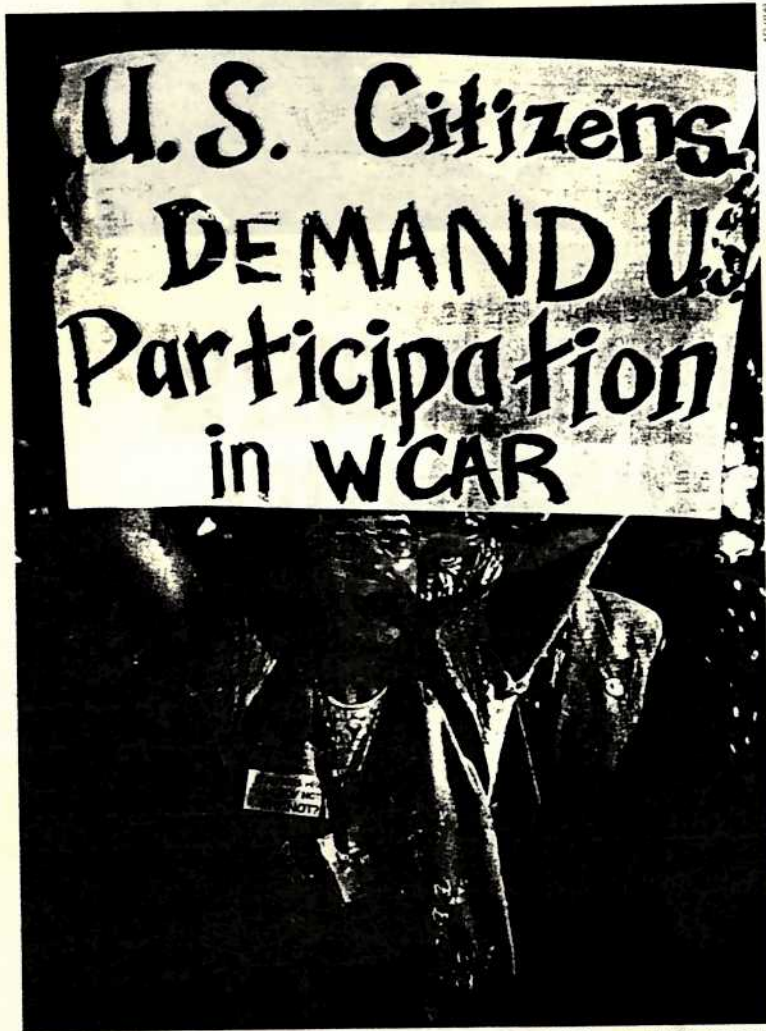
'평등·정의·존엄'을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대회에서 참가자들은 희망과 절망을 동시에 맛보았다. 카스트 제도 철폐를 요구하는 인도의 최하층 천민 달릿(dalit)은 단식 투쟁을 벌여 자신들의 문제를 이슈화하는 데 성공했다. 뿐만 아니라 독립을 요구하는 티베트인, 과거 청산과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각 대륙의 원주민과 그 후손들, 차별 정책을 거부하고 인권 보호를 요구하는 로마의 집시, 난민, 이주노동자, 동성애자 등 애타고 절절한 인권 피해자들의 처지를 서로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비정부기구 대회에서 희망을 보았다면 정부간 대화에서는 절망을 맛보았다. 정부간 대화를 통해 모든 인종 문제를 인권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하려던 애초의 대회 취지는 각국의 이해 관계에 부딪혀 무색해지고 말았다. 어쩌면 이런 극단적 절망이 '9·11 테러'로 이어졌을지도 모를 일이다.

세계 인종 차별 철폐 대회가 끝난 뒤 채택된 공식 선언문은 세상에 빛을 본 지 얼마 되지 않아 중대한 도전에 직면했다. 중동 지역의 조기 평화 정착을 촉구했던 선언문은 자칫 이번 테러의 후폭풍으로 휴지 조각이 될 지도 모른다. 테러가 발생하자 자 곧바로 이슬람권 소행으로 인정해 아랍인에 대한 집단적 적

감을 드러내는 것은, 이번 대회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한 인종적 불관용의 대표적인 예이다. 테러와 무관한 아프가니스탄 민중이 미국의 보복으로 희생된다면 이 또한 인종 청소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인류가 범죄에 호호하게 대처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집단적 대감을 부추기는 보복과 응징과 끝없는 파



"부끄러워".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에서 철수한 자국 대표단을 비판하는 미국의 비정부기구.

이스라엘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평화적 대화를 재개한다는 어정쩡한 결론을 내려 대회의 파국을 면할 수 있었다. 하지만 당사자인 이스라엘과 미국이 철수한 뒤에 이루어져 반쪽짜리 타협으로 그치고 말았다. 시오니즘 문제뿐 아니라 과거 식민 지배와 배상 및 보상을 요구한 아프리카 국가들도 유럽연합과 만족스럽지 않은 타협을 했다. '도덕적 차원에서만 사



세계적으로 던져진 화두, '인종차별'

- 제3차 인종차별 철폐회의를 다녀와서

UN은 '인종차별 철폐선언' 63년 제정과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69년 발효를 실현하기 위해, '3년부터 2003년까지, 50년을 '인종주의와 인종차별에 대항하는 10개년 행동계획'을 선포하고 진행하려 했다. 이 동안 나타난 두드러진 성과는 남아공에서의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을 공식적으로 폐지시켜내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이다. 그리고 '88년, 83년에 열린 1, 2차 인종차별 철폐대회'는 '아파르트헤이트'를 주요의제로 삼아 남아공 백인 정권에 압력을 행사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94년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이 붕괴되고 남아공 최초의 '비인종적 민주정부'라고 하는 만델라 정권이 수립된 이후, 세계는 다양한 '인종차별' 양상과 식민 지배를 인종차별로 규정하며 사과와 보상을 촉구하는 운동들이 전개되어 왔다.

그러나 식민지배 보상을 거부하는 서방국가들과 팔레스타인-이스라엘의 민족 분쟁에 관여되어 있는 미국 등의 거부와 고의적 방관으로 인해, 제3차 인종차별 철폐대회가 지연되어 18년만인 올해 남아공에서 열리게 되었다.

분담금 납부 거부와 불참의사를 밝혔던 미국은 주관부처인 UN인권위원회와 주최국인 남아공의 중재와 압력으로 참가하였으나 반미·반이스라엘 분위기가 주도하자, 공식적으로 비난하며 3일만에 이스라엘 대표단과 함께 철수하였다. 부각되었던 팔레스타인의 반이스라엘 투쟁과 아프리카 민중을 중심으로 한 식민지

화 및 노예제의 사과와 보상 요구 명목 외에도, 이번 대회는 인종차별 반항 화두가 할 수 있을 정도로 인종차별에 대한 인식을 깊게하는 다양한 의제들이 포함되었다.

세계화가 진행될수록 강화되는 제3세계에 대한 수탈과 환경파괴, 구조적 가난으로 인해 인종과 갈등이 영속된다고 주장하는 '신자유주의적 인종차별'이라는 주장은 여러 의제들의 기본 전제가 되었다. 제3세계의 가난과 실업으로 인해 이주노동자로 밀려난 노동자들의 무조건적 열악한 유입국에서 당하는 포퓰리즘, 민족인 혐오증, 반포퓰리즘의 배척을 주요 쟁점으로 다룬 '인종 차별과 이주노동자' 의제 외에, 인도산 국가에서 억압적인 카스트제도와 차별된 달릿(Dalit, Untouchable people로 취급받는 최하층민) 의제, 유럽연합을 재구성 현대판은 로마(Roma, 또는 집시) 의제, 여성, 난민, 에이즈, 환경, 동성애, 원주민 의제 등등, 인종차별의 피해 형태와 요구는 다양하였다.

미국 서방국가의 책임회피와 미국 등의 협의 동리로 불투명 해 선언문과 행동계획이 가늠으로 채택되었지만, '인종차별 철폐'라는 지배질서에 대한 차이의 불씨는 남긴 셈이다. 인종차별 철폐회의는 앞으로 다른 세계 대회와 마찬가지로 '검열회의(Retire)'를 거듭하며 인종주의와 인종주의를 조장하는 지배세력과의 전쟁을 지속하여야 할 것이다. **원**

이윤주 / 평등노조 이주노동자 지부
제3차 UN 인종차별 철폐대회 한국 참가단

세계인종차별 철폐회의' 참가기 인종차별 철폐, 경제적 역학관계에 질식되다

송수진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 산업안전국장

3월 26일부터 9월 7일까지 세계인종차별철폐회의가 열렸다. 국내에서는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 인권운동사랑방,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이 NGO회의에 참가하는 것과 더불어 UN 정부간 회의에 고상자건을 확보해 공식적으로 참가, 한국 이주노동자 문제의 현실을 알리고 돌아왔다. 대회에서 돌아온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 송수진 산업안전국장으로부터 현장소식을 들었다.

(역은이 글)

인종차별철폐투쟁의 나라로 알려진 남아프리카에서 공동·정의·존엄을 기치로 열린 세계인종차별철폐회의(World Conference Against Racism, Racial Discrimination, Xenophobia and Related Intolerance, WCAR)는 많은 참가자들과 전세계언론에 '역사적 사건으로 회자되었다. 그러나 진정으로 이 회의에 역사성을 부여한다면 세계화 시대에 인종주의를 다시 정의하고 전세계에서 인종차별철폐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투쟁은 계속된다"고 외치고 연대를 결의한 데 있다.

인종문제는 정치적이다

회의는 청년정상회의와 민간단체(NGO) 포럼, 그리고 마지막 일주일간 열린 정부간 회의로 진행되었다. 세계화에 따른 인종차별, 과거 식민지의 배상·보상문제, 인종청소, 여성, 이주노동자, 난민, 원주민 등이 주제로 선정되었고 8월 28일 개막된 민간단체 포럼기간에는 행사장 안에서 워크숍과 토론회가 열렸다.

그러나, 역시 회의 내내 최대의 쟁점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였다. 개최 전부터 미국은 회의가 이 문제를 다루는 것에 불리한 실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냈고 글자가 회의 불참을 선언했는데 미국의 이러한 방자한 태도는 인종문제의 부침이 역시 "정치적"인 것임을 알게 한다. 이스라엘 정부대표 Yedlin은 "대변회의가 이스라엘과 우대인에게 명을 부여하기 위한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정치적' 공격의 하나"라고 말했다. 물론, 미국의 이런 태도에 대해 행사장 곳곳에서 줄곧 신랄한 비난이 쏟아졌다.

청년정상회의 마지막 날, '식민주의'는 인종주의로 규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대외전에 밝힌 바 있는 유엔인권고등판무관 제리 브린슨이 단상에 오르자 팔레스타인 해방운동을 하는 젊은이들은 아우성을 보

고 거짓말이라는 공격을 받고 "알레스트와인을 보강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생색내기로 끝난 인종차별철폐회의

행사장에서 진행된 워크숍 가운데 팔레스타인문제와 반유대인주의가 다른 장소에서 열린 날, 반유대인주의 워크숍에 팔레스타인 해방운동 활동가들이 돌아와서 30분 이상 워크숍을 중단시켰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잇대질질 하고 싸우는 유대인들과 아랍인들을 볼 수 있었으며 "아랍인 사촌은 살인자"와 같은 권세적인 욕설이 행사장을 날아다녔다. 한편 우리가 아는 랍비 이미지 그대로 수염을 기른 랍비 케명의 시온주의를 거부하는 과격들도 눈길을 끌었다. 결국 이 문제와 관련, 미국과 이스라엘 정부대표단은 정부간 회의의 결과로 채택된 '대변선언'에서 이스라엘을 인종차별국가로 규정할 친구가 빠져야 한다고 생색을 썼다. 그리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퇴장해 버렸다. 그렇다고 이 문제가 회의에서 다루어 된 것도 아니었다. 아랍국가들의 부류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정령지 내의 팔레스타인인들의 관점을 우려한다"는 하나마난 얘기와 "그들의 양도할 수 없는 자결권과 투쟁권이 건설의 권리를 인정한다"는 선언에서 다루어졌기 때문이다.

시온주의가 그랬듯이 또 하나의 뜨거운 감자였던 노예제도와 식민지 배상문제에 있어서도 전법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국가들과 아프리카국가들의 맹목한 대립이 있었다. 그러나 이 문제의 해결 역시 불합의 성격이 짙었다. '난민철폐법'도 규정하고 가해국들에게 피해국이나 피해자 개인에게 배상하도록 해야 할 문제가 포럼지침의무'라는 식으로 처리되 가해국들은 보

침을 피할 수 있게 했다. 결국 이런 피는 과거와 현재를 막론해서 인종차별의 가해사실에 대한 언급은 최소한하거나 없는 험악한 작태를 통해 회의과정과 이를 준비한 UN인권이와 돌아간 정부대표단들의 처사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 국제사회가 힘에 따라서, 정확하게는 경제적 이익에 따라서 좌우된다는 것이 남김없이 드러나는 자리였다.

한국에는 인종문제가 없다?

대한민국 정부대표 회의에 참가한 한 경수 여성부 장관의 일본역사교과서 문제에 대한 발언은 선언에 "미래세대에게 역사교육을 올바르게 해야한다"는 문구로 들어갔다. 그 정도를 가지고도 '보람'을 얻은하고 있다(한겨레신문 3월 11일자). 또한 같은 기사에서 "출산을 위한 등으로 조만간 국내에서도 현실화될 외국인 노동자문제에 대한 대비를 서둘러야 할 것"이라는 말을 했다. '조만간'이라 함은 무엇인가? 아직은 인종차별 안전국이란 말인가? 대회 참가한 단체들과 우리 노조는 이 회의를 준비하는 캐나다의 한 모임에서 한국정부 영사관이 했던 "한국에는 인종문제가 없다"는 말발에 대해 매우 분노했다. 그 말은 곧 "한국에는 이주노동자가 없다"는 말이나 다를 것이 없기 때문이다. 대회 내내 출입국관리소 앞 집회에서 출입국관리이 흔들려대던 수갑다발사진과 "한국에는 인종문제가 없다"는 말이 크게 적힌 유인물(이주노동자, 난민, 성매매, 혼혈아동에 관한 내용) 배포,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UN조약준" 촉구와 '불법체류 미등록노동자를 사면하라'는 플래카드 선전, 이주노동자 관련 피켓팅을 포함한 선전전을 수행하고 돌아왔



대회 내내 출입국관리소 앞 집회에서 출입국관리이 흔들려대던 수갑다발사진과 "한국에는 인종문제가 없다"는 말이 크게 적힌 유인물(이주노동자, 난민, 성매매, 혼혈아동에 관한 내용) 배포,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UN조약준" 촉구와 '불법체류 미등록노동자를 사면하라'는 플래카드 선전, 이주노동자 관련 피켓팅을 포함한 선전전을 수행하고 돌아왔

투쟁은 계속된다
인종차별 피해자들의 한창치는 이렇게 끝났다. 회의의 성과를 차치하고 국경과 피부색, 그리고 성을 뛰어넘어 서로의 아픔을 자기 것으로 여기고 연대를 다짐하는 아름다운 결연은 해방된 세상을 그리게 했다. 그러나 이들의 미래는 UN선언이 가져다주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이들의 다양한 피해종류와 그 처참함을 반영해 원대대로 풀려놓으라고 경시한 친구에 만족한다 해도 말이다. 이들이 누구인가? 두 팔이 없거나 생식수단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지저리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이다. 이제 인종차별을 위한 싸움의 본질은 소유권의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인종차별의 완전한 철폐는 곧 계급의 철폐일 것이다. 고로 '투쟁은 계속된다'.

호주, 미국 보복공격 가담은 UN헌장 위반

호주 유력 국제관계 전문가, 미국 군사행동에 동참 선언한 국가들 비난

호주가 동시다발 테러에 대한 미국의 보복공격에 병력을 지원한다는 것은 유엔 헌장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호주의 '시드니 모닝 헤럴드'가 17일 보도했다. 뉴 사우스 웨일스주 소재 매쿼리대학 국제관계 전문가 그레고리 콜베르튼 교수는 기고문에서 먼저스(태평양안진조약)제4조를 발동한 호주의 군사지원은 국제법 이행보다는 동맹국 요청에 따른 정치 행위와 선거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고문에서 호주, 뉴질랜드, 미국 등 3개국이 해결한 먼저스 조는 군사적 공격을 받았을 때에만 발동되는 것이며 최근 미국의 상황은 미국의 군사적 대응에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의 가담을 정당화할 어떠한 증거

도 없다'고 밝혔다. 또 테러에 대한 미국의 시국은 자외적 인 것이라며 "우리는 아직 테러 사건에 전모와 범인의 신원을 모른다. 빈 라덴이 테러를 주도하고 아프가니스탄에서 활동하고 있는 점이 드러나더라도 미국은 탈레반과 테러의 실질적 관계를 입증해야 한다."고 미국의 초법적인 군사행동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자유일의 테러' 직후 미국에 대한 전통적인 지원을 선언했던 NATO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미국의 전면적 군사행동 결정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 91년 걸프전 때와 같은 '다국적'인 파병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주요 발언문 및 연설문

정부 대표 발언문

: 한국, 북한, 일본, 독일, 교황청, 나미비아,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 이스라엘

한국 THE REPUBLIC OF KOREA

Statement by
H. E. Mrs. Han Myeong-Sook
Minister for Gender Equality Republic of Korea

Distinguished Excellencies, Delegates, Mr. Chair, Ladies and Gentlemen,
It is a great pleasure to join all of you on this valuable occasion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renew its commitment to eliminating racism and racial discrimination. It is impossible to imagine a more fitting venue for this august gathering, and I would like to pay tribute to the people of South Africa who have overcome the horror of apartheid.

I would also like to express my sincere gratitude to Madame High Commissioner Mary Robinson for her outstanding leadership and dedication, which have been vital for the success of this conference.

Distinguished Delegates,
Since the convening of the First and Second World Conferenes against Racism and Racial Discrimination, the world community has seen significant achievements in its fight against racial discrimination. Chief among these achievements is the growing recognition that the eradication of racism and racial discrimination is a crucial element in the full protection of human rights. Further, we have come to realize that discrimination and exclusion based on nationality, culture, religion and language tan be eliminated only through the concerted efforts of the world community. Despite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untiring efforts to eradicate racism and racial discrimination, too many continue to fall victim to various forms of racism, racial discrimination, xenophobia and related intolerances.

Movement across national borders has become a common phenomenon as a result of globalization and economic integration. Yet, there are virtually no safeguards for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migrant workers, including illegal migrant workers, from discriminatory and unjust treatment, as well as human rights violations. Special tare should be taken to protect the rights of such vulnerable groups.

This Conference will be a historic opportunity for the world community to recall once more the pledges made at previous conferences and renew its commitment to fully implementing them. The Korean government wholeheartedly supports a world free of racism, racial discrimination, xenophobia and related

intolerances where diversity is celebrated and we are fully committed to doing our part in building such a world. We sincerely hope that the Declaration and the Programme of Action, being negotiated by national delegations, will be concrete, forward-looking documents that will serve as a valuable guide to us in our historic endeavor. Once they are adopted, Korea will strive for their full implementation. Thank you.

북한

PEOPLE' S REPUBLIC OF KOREA

STATEMENT BY
HEAD OF DELEGATION OF THE
DEMOCRATIC PEOPLE' S REPUBLIC OF KOREA

Mr. President,

Allow me, first of all, to extend warm congratulations of the delegation of the Democratic People' s Republic of Korea to you, Mr. President, for your election. I would like to also express our deep appreciation to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South Africa and the Office of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for their sincere efforts for the preparation of the Conferenc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ame a long way and made great achievements in its endeavors against racism since the inception of the United Nations. It is noteworthy that the awareness of the factors, forms and danger of racism has been increased throughout the world and the ways and means to overcome them have been enforced. Legal foundations to eliminate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were laid at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

It is indeed of significance to convene this World Conference against Racism in South Africa that was the last victim of the Apartheid until 10 years ago. Despite great effort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racism remains yet in the new forms of discrimination such as xenophobia, domination and all sorts of discrimination and racial prejudice. Since racism varies in its forms, the new challenges are appealing this conference to take effective measures.

Mr. President,

The delegation of the Democratic People' s Republic of Korea strongly condemns all forms of racism and racial discrimination as element against human beings and crime against humanity. We expect this conference to give clear and concrete definition of all forms of racism and racial discrimination. It is only when the target is clear that the methods can be sought. The key to removing the root cause is to give proper solution to the past history of racism and racial discrimination. The relics of the colonialism in the past lie under contemporary forms of racism and racial discrimination prevailing in several countries. The

centuries of colonial era raised the perception in suzerain states that their race and nations are "superior" and the colonized nations are "inferior".

We do not oppose the view of fighting racism with priority to present and future. However, the right view on the future can only be possible when we have right attitude to the past. There will be no future without past and wrong past should not be repeated. The most solid guarantee to avoid repeat of wrong past is in thorough liquidation of the past. We urge the states that systematically committed the acts of racism and racial discrimination to acknowledge their responsibility and make commitment to repair and compensate the suffered states, communities and individuals.

Mr. President,

The colonial policy pursued by some countries in the past were the most institutionalized and systematic forms of racism. While the most of the countries in African, Latin American and Asian continents had been faced with racial discrimination based on color, Korean people suffered with extreme national discrimination under the Japanese military occupation.

The policies of "Japanization of the Korean names" and "Oneness of Japan and Korea", under which all Koreans were forced to change their names in Japanese and to speak and write only in Japanese, were the most evil policy to eradicate one nation which cannot be found anywhere else in the world history of colonialism. Six million people out of the whole Korean population of 20 millions were forcibly taken to Japanese army and workplaces in which millions were killed and nearly 200 thousands of women were sexually slaved by Japanese army under the system of so-called "comfort women". This figure clearly tells the extent of damage caused to the Korean people by the Japanese discriminatory policy.

Several decades have passed since then and the new century started. But even today Japan persistently refuses to settle the past crime. This stark reality gives rise to concern of the Korean nation and other Asian countries that Japan would repeat the wrong past. Today in Japan, Korean schoolgirls continue to be attacked by ultra-conservative gangsters for the simple reason that they wear the national costume "chimachogori" with the connivance of Japanese government and police. The UN Human Rights Committee and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urged Japan to correct the discrimination policy of Japanese authorities against Koreans residing in Japan when considering the reports on implementation of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 submitted by the Japanese government.

Recently the Japanese authorities revised the history textbooks for middle schools and the Prime Minister visited the "Yasukuni Shrine" where top-class war criminals of World War II are entombed in an attempt to justify the colonial past and erase the traces of its policy to eradicate the other nation. It enrage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Program of Action adopted in 2nd World Conference against Racism called upon all states to examine history textbooks with a view to correcting any erroneous assessment of historical data. The Japanese revision of history textbooks, which is quite contrary to the Program of Action, gives us the lesson that there cannot be elimination of racism by its root without thorough solution of the past. We strongly urge the government of Japan to liquidate its past stained with racism and aggression and thus remove the source of instability in the region.

Mr. President,

It is also important for the elimination of racism to realize in practice the genuine equity of all races, ethnics and nations.

All races and nations through out the world are equal. Each race and nation has its own peculiar culture and tradition and has the right to develop its own as it wishes. This clear and universal truth is very often neglected or distorted intentionally or unintentionally. It is essential to create an atmosphere in which all races and their diversities are respected. In this context we assume that all nations should pay due attention to and improve education among young generations. It is also important not to permit high handedness and arbitrariness of one country or nation to others, but to promote dialogue and cooperation in the international relations.

Mr. President,

Enhancement of the responsibility and role of government of each country is also important.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ll sorts of discriminatory customs generated historically were completely eliminated and thus every person is enjoying full equality in socio-political and economic life. Everyone has a job and all social members benefit from equally distributed wealth. The state establishes and implements all policies on the basis of the man-centered Juche Idea. The politics effected by the great leader General Kim Jong Il is the benevolent politics valuing the human beings and at the same time all-embracing politics not permitting any discrimination.

Mr. President,

We hope that the conference would consider practical measures to further democratize international relationship and improve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on equal basis in discussing the goals and programs of action to eliminate racism. The government of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will do its best to eliminate all forms of racism and racial discrimination in full cooperation with international community.

Thank you.

일본

Japan

Statement by

Ms. Kaori Maruya

Parliamentary Secretary for Foreign Affairs of Japan

Foreign Minister Zuma, / Distinguished delegates, / Ladies and gentlemen,

It is my great pleasure and honor to represent the Government of Japan at this epoch-making World Conference. I would like to pay particular tribute to the Government of South Africa and High Commissioner Mary Robinson for giving us an opportunity to unite under the cause of "equality, justice, and dignity."

This World Conference is hosted by South Africa, who won the struggle against apartheid. When I think about the significance of their triumph, I feel humbled at the enormous task that lies ahead of us. Despite a twenty-seven year long incarceration, former President Nelson Mandela never lost his hope and belief that human dignity will prevail over racism. The final report of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is highly acclaimed for its unbiased review of the past. This shows us a road map for the elaboration of a truly coexistent society. I believe this achievement was made possible thanks to the spirit of tolerance, a spirit advocated by President Mandela. In this World Conference, we should make future-oriented discussions to come up with practical and effective measures to fight-against discrimination. To achieve this goal, the outcome document should be adopted by consensus of all countries. Japan is willing to make every effort to make this possible.

Madam President,

Let me now explain the situation of Japan and the principles we uphold. Building from our deep remorse over our past colonial rule and aggression, Japan is determined to eliminate self-righteous nationalism, promote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thereby, advance the principles of peace and democracy throughout the world. Regarding the concerns expressed by some neighboring countries, I would like to reiterate here that the Government of Japan firmly maintains the above-mentioned acknowledgement of history. Based on this recognition, the Government requires that schoolchildren understand through history education that World War II caused disaster to all humankind.

The Constitution of Japan which was promulgated in 1946 renounced war and use of force as means of settling international disputes and established respect for fundamental human rights as an important principle. The Constitution stipulates that all the people are equal under the law, and there shall be no discrimination in political, economic or social relations because of race, creed, sex, social status, or family